



2020.12.31.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0-02호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민보경 외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연구진

내부연구진

민보경 부연구위원

외부연구진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센터장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에스티아이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국가 정책 목표가 경제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정주 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행복이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 정부 경영의 근거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간 격차는 양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법론적 틀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행복의 다차원성을 파악하여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행복 역량을 위한 지역 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2019년 구축한 행복 지표 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영역별, 지역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사례 연구를 통해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지역 사회 등의 긴밀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 행정 통계 자료 등에 근거한 객관적 지표와의 통합적 분석 방법을 모색하여 더 체계화된 행복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행복 지표는 향후 주관적 웰빙을 측정할 행복 설문 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행복 역량 요소가 주관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국민 행복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 연구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의정 활동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7
제2장 행복지표 구성과 측정	9
제1절 행복지표 개념	11
제2절 행복지표 체계 검토	18
1. 지표 재검토	18
2. 전문가 델파이	24
3. 지표 적합성 및 중요도 평가	26
제3절 행복지표 2.0 도출	29
1. 영역별 지표의 적합도 평가	29
2. 영역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42
3.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47
4. 전체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48
5. 행복지표 2.0 도출	53
제3장 대한민국 행복 역량 지표 분석	55
제1절 행복 역량 지표 실태	57
1. 건강	57
2. 안전	62

3. 환경	67
4. 경제	70
5. 교육	73
6. 관계 및 사회참여	75
7. 여가	77
제2절 영역별 분석	80
1. 공간 분석	80
2. 상관관계 분석	98
3. 군집 분석	101
제3절 소결	105
제4장 지역의 행복 제고 전략	107
제1절 인구변화와 지역 삶의 질	109
1. 지역의 주요 이슈, 인구 변화	109
제2절 사례 연구	113
1. 서울 인구변화와 삶의 질 제고 전략	115
2. 대전 인구변화와 삶의 질 제고 전략	132
3. 경남 지역 인구변화 대응과 삶의 질 제고 전략	146
제3절 소결	159

제5장 결론	161
제1절 연구 요약	16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6
참고문헌	169
Abstract	175
부록	179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1차)	181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198
부록 3. 인구 변화 대응 지역 발전 방안 포럼 토론문	213

[표 2-1] 개인 행복의 요인	11
[표 2-2]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의 지표	12
[표 2-3] 행복 영역 비교	17
[표 2-4] 행복지표 1.0	18
[표 2-5] 행복 지표(2.0) 후보안	20
[표 2-6] 순위합계 가중법과 순위역수 가중법	27
[표 2-7] 건강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29
[표 2-8] 안전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31
[표 2-9] 환경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32
[표 2-10] 경제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34
[표 2-11] 교육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35
[표 2-12] 관계/사회 참여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36
[표 2-13] 여가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38
[표 2-14] 주관적 안녕감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39
[표 2-15] 지표의 적합 여부 분류 기준	40
[표 2-16] 지표의 적합 여부 분류 결과	40
[표 2-17] 건강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42
[표 2-18] 안전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43
[표 2-19] 환경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43
[표 2-20] 경제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44
[표 2-21] 교육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44
[표 2-22] 관계/사회 참여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45
[표 2-23] 여가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46
[표 2-24] 주관적 안녕감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46
[표 2-25] 8개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47
[표 2-26] 전체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주관적 안녕감 영역 포함)	48
[표 2-27] 전체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주관적 안녕감 영역 제외)	50

표 목 차

[표 2-28] 행복지표 2.0	53
[표 3-1] 주요 지표의 기술 통계량	98
[표 3-2] 상관관계 분석	100
[표 3-3] 인구 규모별 기초 지자체(시군구) 수 및 비율	102
[표 3-4] 인구 규모에 따른 주요 지표 비교 분석 결과	103
[표 4-1] 지역별 인구 및 연평균 증가율	111
[표 4-2] 대전시의 인구 규모 및 전국 대비 점유 비율 변화	133
[표 4-3] 대전시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변화	135
[표 4-4] 대전시 전출 인구의 전출지별 규모	138
[표 4-5] 대전시 인구 관리 종합 계획	140
[표 4-6] 경상남도 연령별 순이동자수와 순 이동률(2019)	150
[표 4-7] 경상남도 3대 전입지 및 전출지(2019)	150
[표 4-8] 경상남도 수도권 전입 청년 인구	151
[표 4-9] 경상남도 수도권 전입 사유별 인구	151
[표 4-10] 경상남도 시군별 인구 관련 현황(2019년)	152
[표 4-11] 경상남도 2020년~2024년 인구 정책 기본 계획	154
[표 4-12] 경남 지역 인구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158

[그림 1-1] 국회미래연구원의 행복 연구 로드맵	6
[그림 1-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8
[그림 2-1]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영역	13
[그림 2-2] 건강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30
[그림 2-3] 안전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31
[그림 2-4] 환경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33
[그림 2-5] 경제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34
[그림 2-6] 교육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35
[그림 2-7] 관계/사회 참여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37
[그림 2-8] 여가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38
[그림 2-9] 주관적 안녕감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39
[그림 3-1]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2015-2019)	57
[그림 3-2] 건강 수준 인지율(2019)	58
[그림 3-3] 스트레스 인지율(2015-2019)	58
[그림 3-4] 스트레스 인지율(2019)	59
[그림 3-5] 우울감 경험률(2015-2019)	59
[그림 3-6] 우울감 경험률(2019)	60
[그림 3-7] 건강 생활 실천율(2015-2019)	61
[그림 3-8] 건강 생활 실천율(2019)	61
[그림 3-9] 교통사고 안전 등급(2015-2019)	62
[그림 3-10] 교통사고 안전 등급(2019)	63
[그림 3-11] 화재 안전 등급(2015-2019)	63
[그림 3-12] 화재 안전 등급(2019)	64
[그림 3-13] 범죄 안전 등급(2015-2019)	64
[그림 3-14] 범죄 안전 등급(2019)	65

그림 목 차

[그림 3-15] 생활 안전 안전 등급(2015-2019)	66
[그림 3-16] 생활 안전 안전 등급(2019)	66
[그림 3-17] 도시 용도 지역 녹지 비율(2015~2019)	67
[그림 3-18] 도시 용도 지역 녹지 비율(2019)	67
[그림 3-19] 인구 천명당 공원 수(2015-2019)	68
[그림 3-20] 인구 천명당 공원 수(2019)	68
[그림 3-21] 미세 먼지(PM2.5) 대기 오염도(2016-2019)	69
[그림 3-22] 미세 먼지(PM2.5) (2019)	69
[그림 3-23]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2015-2018)	70
[그림 3-24]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2019)	70
[그림 3-25] 상용직 비중(2015-2019)	71
[그림 3-26] 실업률(2015-2019)	71
[그림 3-27]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2015~2019)	72
[그림 3-28]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72
[그림 3-29] 교원 1인당 학생수(2015-2019)	73
[그림 3-30] 교원 1인당 학생 수(2019)	73
[그림 3-31]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2015-2019)	74
[그림 3-32]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2019)	74
[그림 3-33] 대인 관계 만족도(2017-2019)	75
[그림 3-3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있음(2017-2019)	76
[그림 3-35]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2015-2019)	76
[그림 3-36]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2015~2018)	77
[그림 3-37]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2015~2018)	77
[그림 3-38]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2019)	78
[그림 3-39]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2015~2019)	79
[그림 3-40]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2019)	79
[그림 3-41]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 LISA 분석	81

[그림 3-42] 건강 생활 실천 LISA 분석	82
[그림 3-43] 스트레스 LISA 분석	83
[그림 3-44] 우울감 LISA 분석	84
[그림 3-45] 교통사고 LISA 분석	85
[그림 3-46] 화재 LISA 분석	86
[그림 3-47] 범죄 LISA 분석	87
[그림 3-48] 생활 안전 LISA 분석	88
[그림 3-49] 녹지 지역 LISA 분석	89
[그림 3-50] 미세 먼지 LISA 분석	90
[그림 3-51] 종사자 수 LISA 분석	91
[그림 3-52]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LISA 분석	92
[그림 3-53] 보육 시설 LISA 분석	93
[그림 3-54] 교원 1인당 학생수 LISA 분석	94
[그림 3-55] 자살률 LISA 분석	95
[그림 3-56] 노인 여가 복지 시설 LISA 분석	96
[그림 3-57] 문화 기반 시설 LISA 분석	97
[그림 3-58]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인구 기준 구분	101
[그림 4-1] 전국 시군구 인구 현황 및 분포	110
[그림 4-2] 최근 10년간 인구 순이동 (전입-전출)	112
[그림 4-3] 서울의 총인구	117
[그림 4-4] 순 이동률	118
[그림 4-5] 합계 출산율	119
[그림 4-6] 노령화 지수	119
[그림 4-7] 순 이동률(자치구별)	120
[그림 4-8] 서울의 1인 가구 비율	121
[그림 4-9] 시도별 1인 가구 수와 1인 가구 비율	122

그림 목 차

[그림 4-10] 1인 가구 비율(자치구별)	122
[그림 4-11] 가족 다양성 분포	123
[그림 4-12] 서울시 등록 외국인	124
[그림 4-13] 서울 거주 외국인 국적	124
[그림 4-14] 주거 환경 만족도	125
[그림 4-15] 주택 만족도(권역별)	126
[그림 4-16] 비만율(자치구별)	126
[그림 4-17] 미충족 의료율	127
[그림 4-18] 미충족 의료율(자치구별)	127
[그림 4-19] 행복지수	128
[그림 4-20] 행복지수(자치구별)	129
[그림 4-21] 전국 인구 대비 주요 도시의 점유 비중 변화	134
[그림 4-22] 대전시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변화	136
[그림 4-23] 대전시 및 전국 주요 도시의 자연적·사회적 인구 변화	137
[그림 4-24] 대전시 전출자의 전출 지역별 점유 비율 비교: 2000년과 2019년	139
[그림 4-25] 대전시 인구 정책 목표 체계	141
[그림 4-26] 대전시 인구 정책 유형 구분	141
[그림 4-27] 대전시 도시 발전 모델	145
[그림 4-28]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	146
[그림 4-29] 수도권 전입자 및 전출자 수 추이(2009~2019)	147
[그림 4-30] 전국과 경남 장래 인구 추계 비교	149
[그림 4-31] 경남 지역 20~30대 인구 추계	149
[그림 4-32] 시도별 수도권 순이동(2019)	151

요 약

-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있는 지역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다차원적인 행복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행복지표 체계와 국민의 행복수준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며, 둘째, 행정 통계 자료 구축과 통합적 분석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행복지도를 작성한다. 셋째,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행복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행복 측정 방법론을 위한 합의와 미래 전략으로서의 행복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2019년 도출한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 체계가 객관성을 보다 확보하고, 시·도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적 맥락에도 적합한 행복 연구라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내용	연구 방법
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2장 지역행복 측정을 위한 행복지표 2.0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고찰 · 전문가 자문 · 델파이 조사
3장 행복지표 활용한 실태분석 (시군구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S 분석 · 통계 분석
4장 지역 행복 전략 (시도연구원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 전문가 원고
5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	

[그림 1] 연구의 구성 및 방법

- 먼저 대한민국 행복 측정을 위해 2019년 구축한 행복지표 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표 관련하여 추정치 사용, 일부 지표의 행복과의 관련성 및 방향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지표를 포함한 후보군을 도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있어 건강 영역(0.167)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경제(0.149), 주관적 안녕감(0.136), 안전(0.120), 관계 및 사회 참여(0.114), 교육(0.105), 여가(0.105), 환경(0.104) 순으로 응답하였다.
- 본 연구는 새로 구축된 행복지표 2.0을 활용하여 영역별, 지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 분석 결과, 녹지 지역 비율, 미세 먼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문화 기반 시설 등은 공간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그러한 지표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접 지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녹지 지역, 미세 먼지 등은 자연환경적 요인,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인구 계층, 노인 여가 복지 시설과 문화 기반 시설 등의 문화 인프라 시설 등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표들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우울감, 주관적 건강 수준 등 건강 영역 지표 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경험이 많은 지역에서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는 미세 먼지와 범죄와도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은 안전의 영역인 화재, 교통사고, 자살률의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건강 생활 실천율과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 전국의 시군구를 인구 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

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 먼지는 가장 낮았으며, 교통사고, 생활 안전의 안전 등급도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여가 복지 시설과 문화 기반 시설도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 등급은 가장 양호하게 나왔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 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 행복 지표를 살펴본 결과, 인접 지역과 무리를 지어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의 행복 정책은 인접 지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 인프라, 지역 경제, 교통 등의 이슈에 있어서 행정 구역 단위의 전략이 아닌 생활권 개념을 활용하여 동일 생활권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행복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은 물론 지역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지역에서의 행복 제고 전략도 필요하다. 국민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지역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것으로 지역적 맥락에서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분석 결과에 따라 건강 생활 실천율이 낮은 산간 지역이나 내륙 농촌 지역에서는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이 높게 나타난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복 지표는 주로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사 통계를 활용하였다. 유사한 정보를 생산하는 다양한 지역 단위 통계 자료 중에서 가능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생산하는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행복 영역에 부합하다고 판단된 일부 자료 예를 들면, 주거 환경 관련 지표, 주거비 부담 지표 등은 지역 단위 자료로 확보하지 못해 지표 체계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의 생산과 자료의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한국인의 행복 조사’ 문항에 행복지표로 제안된 일부를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역량 이론을 기반으로 시·군·구, 시·도 단위의 지역 분석을 실

시하여 기존 행복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는 행복 연구는 많지 않으며, 각 지표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간 상관성과 군집 패턴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지역 단위의 신뢰성 있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료 확보 곤란으로 지역 역량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개별 지표 분석 위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객관적 여건이 주관적 행복감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후속 연구는 2020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인의 행복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적 여건이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국민 행복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국회미래연구원의 행복 연구 로드맵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12년 UN(UN)의 세계행복보고서(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이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다. 세계행복보고서는 사회 발전 수준을 국민총생산(GDP)과 경제 성장으로 측정하던 기존의 기준에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국가가 국민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켰다.

행복 연구자들은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행복을 체감하는 국민의 비율이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이스터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이후 물질적 풍요 뿐 아니라 정신적인 삶의 질이나 주관적 만족감을 측정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Giovannini, 2017). OECD는 How's Life 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국내총생산(GDP)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건강, 사회적 연결망, 안전, 환경의 질 등을 설명하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최근 발간된 How's Life(2020)에 따르면, 2010년 이후 OECD 국가들은 가처분소득, 기대 수명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소득 불균형, 주거비 등은 미흡하며 특히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관계 단절, 정서적 절망 등으로 많은 OECD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OECD, 2020).

이제 우리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할 때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등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행복에 대한 성적은 그에 걸맞지 않게 초라했다.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전 세계 국가 중 54위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는 35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그에 반해 GDP는 중상위권을 차지하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와 수준에 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높은 자살률, 노인 빈곤율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이 행복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복지 예산 증가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금껏 압축적인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효율성과 경쟁에 짓눌려 있던 ‘행복’이나 ‘삶의 질’이라는 가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시점이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이며, 지방 자치 단체 역시 지역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지방 행정의 주요 정책 목표로 활용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이슈이다. 그동안 한국의 지역 발전은 질적인 발전 보다는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그 결과 총량적 성장은 달성하였지만 사회적 양극화, 지역 불평등, 주민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지역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국민의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으로 지역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단위로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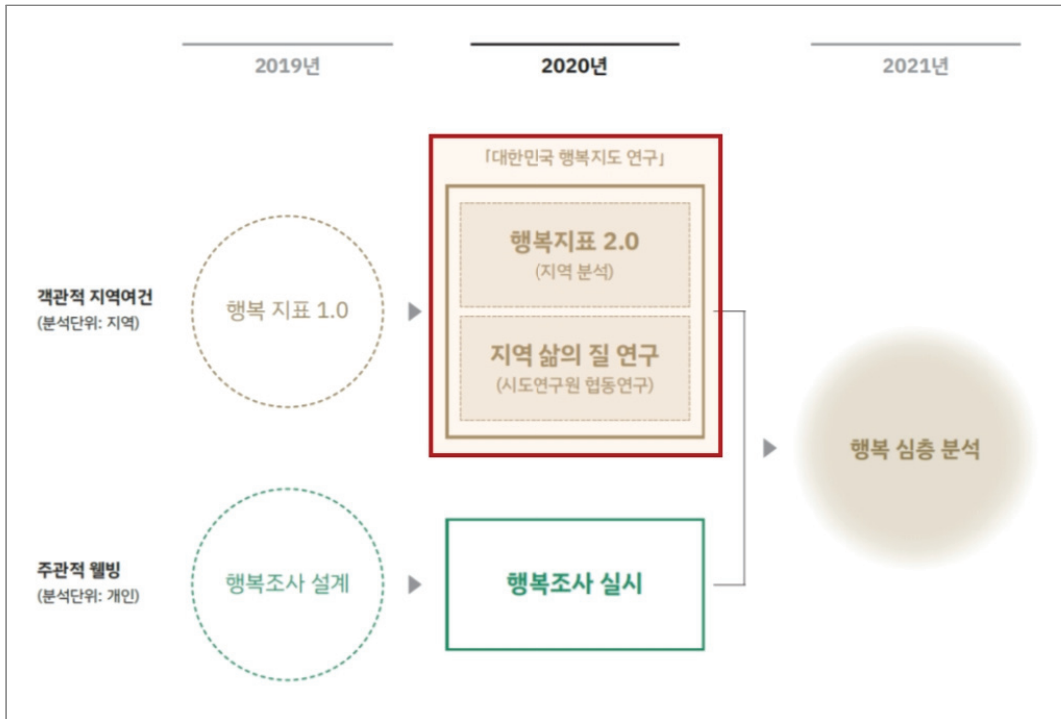
최근 국가 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추상적인 행복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를 통해 제시한 행복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재검토하여 보다 정교하고, 타당성 있는 측정 도구를 도출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행복을 지역적 맥락에서 고찰하기 위해 지역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정책 싱크탱크인 시도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행복 실태 분석 및 지역의 행복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즉, 시도 연구원과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체감도 높은 행복지표 구성, 지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

견을 수립하고, 행복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을 위한 여건이 어느 수준이고 그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지 점검하여 행복 제고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한 국가적 장기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행복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1-1). 구체적으로, 국민 행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측정과 진단을 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환경적 변인과 개인적·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자료를 축적하여 행복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실시하고 국가 미래 전략으로서의 행복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행복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 수준의 자료와 분석을 통해 행복 향상을 위한 지역의 객관적 환경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올해 수행 중인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 결과와 함께 2021년 행복 심층 분석에 활용되어 지역의 객관적 환경이 주민의 만족과 행복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행복 연구 로드맵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다차원적인 행복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행복지표 체계와 국민의 행복 수준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며, 둘째, 행정 통계 자료 구축과 통합적 분석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행복지도를 작성한다. 셋째,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행복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행복 측정 방법론을 위한 함의와 미래 전략으로서의 행복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2019년 도출한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 체계가 객관성을 보다 확보하고, 시도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적 맥락에도 적합한 행복 연구라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그림 1-1] 국회미래연구원의 행복 연구 로드맵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구성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수행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대한민국 행복지표 1.0의 재검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즉, 행복지표 체계 및 측정 방식을 재정비하여 2019년 수행한 「한국인의 행복 연구」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행복지표 관련한 기존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과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행복지표 체계 검토를 위해 지역 전문가인 시도 연구원의 연구진을 참여시켜 지표의 객관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제안된 행복지표 후보안에 대해 각 영역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적합성과 중요도를 묻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1차, 2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지표 체계안을 도출한다.

둘째, 행복지표 체계 2.0을 구축한 후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료에 근거한 행복 실태 및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표간 상관관계 분석, 유형별 집단 비교분석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한 공간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분포와 특징을 시각화(visualization)한다. 분석 과정은 먼저 GIS를 활용한 지도를 통해 각 영역별 지표의 공간 분포 현황을 표출하고 공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그리고 각 지표들에 대해 Moran's I에 의한 군집 패턴을 분석하고 공간 자기 상관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행복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분포, 지역적 격차, 지역 유형별 특성 분석을 통해 지역별 행복 역량을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셋째, 지역적 맥락에서 삶의 질 제고 전략을 살펴보는 지역 사례 연구를 실시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 연구로 검토하기 곤란한 지역적 맥락의 질적 부분을 사례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는 지역에서 삶의 질과 행복 연구 경험이 많은 시도 연구원 소속 지역 전문가의 연구 참여를 기반으로 수행한다¹⁾.

마지막으로 행복지표 체계 구성, 각 영역별 평가, 지역별 특징, 지역 전문가의 사례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민 행복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국민 행복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행복의 다차원성을 이해할 수 있는 행복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행복 수준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 행복 설계 및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내용	연구 방법
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2장	지역행복 측정을 위한 행복지표 2.0 도출	· 문헌고찰 · 전문가 자문 · 델파이 조사
3장	행복지표 활용한 실태분석 (시군구 비교)	· GIS 분석 · 통계 분석
4장	지역 행복 전략 (시도연구원 공동연구)	· 포럼(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 전문가 원고
5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	

[그림 1-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전국시도연구원 협의회와 국회미래연구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미래 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은 '지역의 삶의 질 제고 전략'이라는 미래 이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생산한다.

<전국시도연구원 협의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14개 시도 연구원(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전북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계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구성 ('20 협의회장은 부산연구원장)

제2장

행복지표 구성과 측정

제1절 행복지표 개념

제2절 행복지표 체계 검토

제3절 행복지표 2.0 도출

제 1절 행복지표 개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12년 UN의 세계행복보고서(The World Happiness Report)와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가 발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그동안 국가와 사회 발전의 주요 잣대로 여겨졌던 국민총생산(GDP)과 같은 경제적 지표 이외에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행복은 개인의 심리적 태도나 상태에 관한 것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연구되었으나, 국민 행복을 제고하려는 공공 부문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사회나 개인의 행복감은 측정 가능한 것일까? 행복은 단일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UN의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외적 요인으로 소득, 직업, 커뮤니티, 거버넌스, 가치, 종교 등이 있으며, 내적 요인(개인적 요인)으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표 2-1).

[표 2-1] 개인 행복의 요인

구분	요인
외부(external) 요인	소득, 직업, 커뮤니티 및 거버넌스, 가치 및 종교
개인(personal) 요인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가족 관계, 교육, 성과 연령

자료: Helliwell et al.,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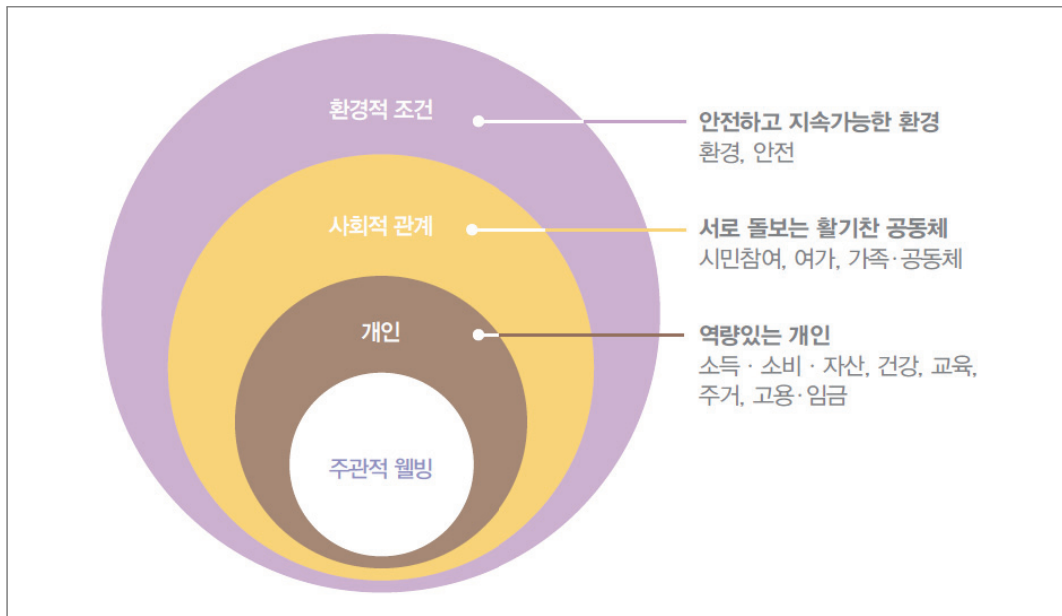
OECD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행복과 관련된 영역을 주거,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설명하며 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표 2-2).

[표 2-2]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의 지표

영역	지표명	설명
주거 (Housing)	주거 관련 지출	주거 관련 가계의 최종 소비 지출 및 수선 유지 비용의 합이 가계의 순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본 시설 보유 가구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 보유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인당 방 수	주택의 방 수를 거주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
소득 (Income)	가구당 금융자산	금융 부채를 차감한 가계 보유 금융자산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직접세 및 사회 보장 분담금, 감가 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금, 재산 및 임료 소득 등 순 가처분 소득
일자리 (Jobs)	직업 안정성	전년도에 고용된 사람 중에서 다음 연도에 실업자가 된 사람의 전년도 고용자 수 대비 비율
	개인소득	정규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고용률	근로 가능 연령 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에 고용된 인구의 비율
	장기 실업률	노동 인력에서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
공동체 (Community)	자원 관계망의 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교육 (Education)	기대 교육 기간	5살 어린이가 평생 공식 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기간
	학생들의 역량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 점수
	교육 성취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15~64세)의 비율
환경 (Environment)	수질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
	대기 오염	인구 10만명 이상 대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규칙 제정예의 참여	법과 하위 규정 도입시 이해 당사자의 공식적 참여 수준
	투표 참여율	선거 등록 인구에 대한 실제 선거 인구의 비율
건강 (Health)	자기 보고 건강 상태	건강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
	기대 수명	현재의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대 수명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대한 개인별 점수의 평균
안전 (Security)	살인율	인구 10만명당 경찰에 신고된 피살자 수
	야간 보행 안전도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 돌봄에 사용한 시간
	장시간 근로자	주 50시간 근무한 임금 근로자의 비율(자영업자 제외)

자료: OECD 대한민국 대표부, Better Life Index(2016)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하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를 측정하는 것이다(통계청, 2019).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는 개인 단위의 삶의 질 요소와 사회 단위의 사회의 질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11개 영역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주관적 웰빙을 중심으로 ‘개인’, 중간의 ‘사회적 관계’, 가장 바깥쪽의 ‘환경적 조건’에 위치하고 있다. 개인 차원의 목표는 ‘역량 있는 개인’으로 이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득·소비·자산, 건강, 고용, 주거, 고용·임금 등이며, 사회적 관계 차원의 목표는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로 시민 참여, 여가, 가족·공동체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조건 차원의 목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이에 해당하는 영역은 환경과 안전이다.



자료: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2019), p.9

[그림 2-1]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영역

보건사회연구원(2017)은 다차원적 생활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영역과 측정 지표의 지수 체계 구축을 위해 선행 연구 검토,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지수 체계’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삶의 가치와 목표, 관계, 주거와 환경의 질, 일,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건강, 거버넌스의 질 등 총 7개 영역에서 지표와 가중치를 제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국민행복지표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 역량(regional capability)의 개념을 활용하며 센(Sen)과 누스바움(Nussbaum)의 역량 이론을 이론적 축으로 삼았다. 경제학자인 센(Sen)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이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을 추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역량(capability) 개념을 통해 역량 이론을 설명하였다(Sen, 1980). 역량접근법은 센(Sen)에 의해 처음 도입되어 UN개발 계획(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1990) 등에 이용되고 있다. 역량접근법은 개인의 안녕이 그에게 주어진 자원 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조건과 사회 제도, 문화, 가치 등 사회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상태와 행위 즉, 역량에 의해 정해진다고 설명한다(Alkire, 2005; 박인권, 2018, p.73).

역량 이론을 소개하고 발전시킨 센은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있는 삶인지는 개인의 가치 체계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en, 1985; 국회미래연구원 2019 재인용). 그러나 센의 동료인 누스바움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역량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Nussbaum, 2013; 국회미래연구원, 2019 재인용).

누스바움이 말하는 ‘역량’은 한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재능인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조합이 만들어 내는 자유와 기회이다(Nussbaum, 2015). 즉, 역량은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제반 여건들이 더해진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누스바움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역량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녀는 국가가 최저 수준을 보장해야 할 기본 역량으로 생명, 신체 건강, 신체 보전, 상상과 사유, 감정, 이성, 관계, 자연 동화, 유희, 환경 통제 등 10가지를 제시한다.

누스바움의 핵심 역량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정책을 위한 것이다. 역량 접근법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품격 있고 번영하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위에 제시한 10가지 핵심 역량의 최저 수준은 보장해야 한다(Nussbaum, 2015). 즉, 10대 핵심 역량 모두 충족되어야 인간 존엄성은 존중받을 수 있고, 국민은 최저 수준으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의 성격은 삶의 질의 평가 기준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제안한 것이다(김연미, 2019, pp.80-81).

우리는 경제 성장이 아닌 행복의 초점을 맞춰 삶의 질을 평가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역량 접근법에 따라 누스바움의 기본 역량을 중심으로 행복의 영역을 구성하였다. 여기에 UN과 OECD의 행복 구성 영역 및 지표를 종합 검토하여 행복의 하위 영역으로 7가지 영역 -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 참여’, ‘여가’를 제시하였다. 각 영역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국회미래연구원, 2019).

첫째, ‘건강’ 영역은 누스바움의 생명과 신체 건강 영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신체 건강을 유지하면서 평균적인 기대 수명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건강 영역의 평가를 위한 핵심 지표는 보건 관련 변수들로 구성된다.

둘째, ‘안전’ 영역은 누스바움의 신체 보전 영역에 해당하며 각종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포함한다. 각종 범죄, 생활 안전, 응급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요구되므로 안전 영역의 평가를 위한 핵심 지표는 안전 및 응급 의료 관련 변수들로 구성한다.

셋째, ‘환경’ 영역은 누스바움의 자연 동화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물, 공기 등의 자연 환경과의 교감과 공존을 의미한다. 환경 영역의 평가를 위한 핵심 지표는 환경 오염 및 자연환경 관련 변수들로 구성된다.

넷째, ‘경제’ 영역은 누스바움의 환경 통제 영역 중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부의 축적, 공정한 기회 등의 내용을 의미한다. 경제 영역의 평가를 위해서 구성한 핵심 지표는 소득, 경제 활동, 일자리 관련 변수들로 구성한다.

다섯째, ‘교육’ 영역은 누스바움의 상상과 사유, 감정, 이성의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되는 가장 포괄적인 역량이다. 교육 역량은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 영역의 평가를 위해 구성한 핵심 지표는 교육 환경 관련 변수들로 구성된다.

여섯째, ‘관계 및 사회 참여’ 영역은 누스바움의 관계와 환경 통제 가운데 정치 관련 영역에 해당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으며 개인이 소속된 집단 및 사회 내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본 영역의 평가를 위한 핵심 지표는 사회적 관계 및 배제를 평가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여가’ 영역은 누스바움의 유희 영역에 해당되며 문화적 삶을 향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여가 영역의 평가를 위한 핵심 지표는 문화, 여가 시설 관련 변수들이 주로 활용된다.

이상의 7가지 역량 영역 이외에 주관적 만족감은 행복을 구성하는 개인적·심리적·정서적 기본 요소이다. 그러므로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역량을 중심으로 지표 체계를 구성하되 주관적 만족감을 행복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미래연구원이 2019년 제시한 행복지표 체계는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 참여, 여가, 삶의 만족도 등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영역을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 지수 등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표 2-3).

먼저, OECD, 통계청의 지표는 주거 영역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은 환경과 함께 주거 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2019)의 지표는 누스바움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영역을 구성하면서 주거 부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19년 연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기본틀은 유지한 채 주거비 관련 지표를 경제 영역에 구성하고자 한다. 주거 환경과 관련한 지표는 환경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의 지표 체계는 경제 영역을 소득, 일자리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으나 국회미래연구원(2019)의 행복지표는 경제 영역에서 생산, 일자리 등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OECD,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표 체계는 국가 단위의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나, 국회미래연구원의 행복지표 체계는 시·군·구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 역량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시·군·구 단위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등 기존 행복지표 체계에서 포함하고 있는 지표들이 제외되거나 대체되어 구성되었다. 즉, 본 연구는 지역간 비교를 통해 지역 역량을 살펴보는 것으로 OECD의 BLI 등 국가간 비교를 위한 지표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표 2-3] 행복 영역 비교

국회미래연구원 행복지표 (8개 영역)	OECD, BLI (11개 영역)	통계청, 삶의 질 지표 (11개 영역)	보건사회연구원 행복 지수 (7개 영역)
건강	건강	건강	건강
안전	안전	안전	
환경	환경	환경	주거와 환경의 질
경제	소득	소득/소비/자산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일자리	고용/임금	일
교육	교육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공동체	가족/공동체	관계
	시민 참여	시민 참여	
여가	일과 삶의 균형	여가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	주관적 웰빙	삶의 가치와 목표
	주거	주거	
			거버넌스의 질

국회미래연구원은 행복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지역적·사회적 여건과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연구에서는 전자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는 시·군·구, 시·도 수준에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주관적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지역 역량(regional capability)에 주목하여 행복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전국의 시·군·구, 시·도를 대상으로 역량 지표를 검토하고 지역 간 비교하는 것으로 기존의 행복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0년 ‘대한민국 행복조사 연구’에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해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측정한다. 본 연구는 행복과 관련 있는 생활 및 사회 제반 환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주로 7가지 역량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토한다.

제2절 행복지표 체계 검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지표 재검토

국회미래연구원의 2019년 행복 지표 체계 프레임워크 구축 및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표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4] 행복지표 1.0

	통계명	출처	비고 (결측치 여부)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지역 사회건강조사(통계청)	결측치 없음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수	e-지방지표(통계청)	강원도 고성군 (2016)사용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수	e-지방지표(통계청)	결측치 없음
	건강 생활 실천율	지역 사회건강조사(통계청)	결측치 없음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수	국립정신 건강센터(보건복지부)	결측치 없음
안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기관별통계(통계청)지방자치단체	추정 데이터
	인구 천명당 cctv 대수	공공 데이터포털표준데이터	추정 데이터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e-지방지표(통계청)	결측치 없음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공공 데이터포털표준데이터	누적 자료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중앙응급 의료센터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결측치 없음
환경	환경 체감도	기관별통계(통계청)지방자치단체	추정 데이터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도시계획현황(통계청)	결측치 없음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통계청, 산업 폐수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결측치 없음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e-지방지표(통계청)	결측치 없음
	미세 먼지(PM2.5)	대기 오염도현황(통계청)	결측치 대체

	통계명	출처	비고 (결측치 여부)
경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e-지방지표(통계청)	광주광역시 2015년 자료 활용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e-지방지표(통계청)	결측치 없음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e-지방지표(통계청)	결측치 없음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e-지방지표(통계청)	결측치 없음
교육	종사자 천명당 영세자영업자수	인구총조사(통계청)	결측치 없음
	학업 성취도(기초학력미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수 데이터
	교원 1인당 학생수	e-지방지표(통계청)	결측치 없음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수	e-지방지표(통계청)	결측치 없음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수	e-지방지표(통계청)	결측치 없음
	인구 십만명당 학교수	e-지방지표(통계청), 한국도시통계(행정안전부)	결측치 없음
관계 및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주제별 통계 및 사회통합(통계청)	결측치 없음
	인구 십만명당 사회적 기업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결측치 없음
	1인 가구 비율(독거노인 가구 제외)	e-지방지표(통계청)	미추홀구(2017)
	독거노인 가구 비율	e-지방지표(통계청)	미추홀구(2017)
	가족 관계 만족도	기관별 통계 및 지방자치단체	추정 데이터
여가	여가 활용 만족도	기관별통계 지방자치단체	추정 데이터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수	e-지방지표 (통계청)	결측치 없음
	인구 천명당 체육 관련 여가 시설수	기관별통계 (통계청)	결측치 없음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수	e-지방지표 (통계청)	결측치 없음
	인구 십만명당 도서관수	공공 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결측치 없음
삶의 만족도	안녕 지수 (삶의 만족도, 행복)	카카오 같이가치	응답값 보정

우리는 2019년에 포함된 일부 지표의 방향성, 영역과 지표의 적절성, 추정치 사용 등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국책 연구 기관, 지역 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들과의 자문 회의를 거쳐 행복지표 2.0 후보안을 도출하였다. 이는 2019년 행복지표의 프레임 워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영역별 측정 가능한 지표 후보를 제시한 것이다.

[표 2-5] 행복 지표(2.0) 후보안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건강 생활 실천율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 건강센터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최근 1년 동안 보건 기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안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교통사고와 화재의 평균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범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생활 안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공공 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국립중앙의료원,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응급실 운영 기관 수	「응급 의료현황통계」
환경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 비율 * 도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공원 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1일 폐수 방류량	환경부, 「산업 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미세 먼지(PM 2.5)	연 평균 미세 먼지 (미세 먼지(PM2.5) 월별 도시별 대기 오염도)	환경부, 「대기 오염도 현황」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주민 등록 인구 천명당 사업체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주택 매매 가격을 기준 시점(2017.11=100.0)과 조사 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 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처
	주택 전세 가격 지수	주택 전세 가격을 기준 시점(2017.11=100.0)과 조사 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 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처
	상용직 비중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비율	통계청, 한국도시통계
교육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 생산액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교원 1인당 학생 수	한 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로 재적 학생수를 총 교원 수로 나눈 값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통계청,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시설 학원 수		지역통계총괄과
	대학교 학생 수	대학교에 재적되어 있는 학생의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인구 천명당 총 보육 시설 수(0~5세)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관계/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인구 십만명당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대인 관계 만족도	자신의 삶에 있어 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0-10점) 평균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공동체 소속감	공동체 소속감에 대한 만족도(0-10점) 평균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이웃에 대한 신뢰도	이웃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약간 신뢰”와 “매우 신뢰”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가족에 대한 신뢰도	가족/친척에 대한 신뢰도에 “약간 신뢰”와 “매우 신뢰”에 응답하는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시민단체/지역 사회단체에 “간혹 참여”, “활발히 참여”, “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자원 봉사/사회 복지/자선 단체에 “간혹 참여”, “활발히 참여”, “매우 활발히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기반 시설총람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신고 체육 시설업 현황
	인구 만명당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생활 문화 시설 수	* 생활 문화 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센터, 평생 학습관, 문화의 집, 생활영상시설(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 포함	지역 문화현황통계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인구 한명당 문화 예산 관련 예산액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및 단체의 수 *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제도에 의해 법인단체(사단 법인, 재단 법인) 및 임의 단체로 등록된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노인(60세 이상) 천명당 노인 여가복지 시설 수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전반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움을 느끼는 정도 (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삶의 의미	전반적으로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정도(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삶의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2 전문가 델파이

행복지표 2.0 후보군의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행복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2회)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전문가들은 삶의 질 연구 경험이 풍부한 사회학, 정책학 등 전공의 학자군, 각 시도 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었으며, 이 중 델파이 1회차 조사에 43명, 2회차 조사에 40명이 응답하여 2회 모두 응답한 전문가들은 총40명이다. 1차 및 2차 조사의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가. 1차 조사 설계

1) 각 지표의 적합도 평가

8개 영역별로, 각 영역에 속하는 지표들이 해당 영역을 측정하는데에 적합한 지표인지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2) 영역별 지표의 우선순위 평가

8개 영역별로, 각 영역에 속하는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1위부터 순서대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영역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8개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합계가 100%가 되도록 평가하도록 하였다.

나. 2차 조사 설계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응답자들의 응답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1) 각 지표의 적합도 평가

1차 조사 응답의 평균, 표준 편차, 사분위수 범위, 본인의 1차 조사 응답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지표의 적합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2) 영역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1차 조사에서 영역별 지표의 우선순위를 물어보았다면, 2차 조사에서는 우선순위를 상대적 중요도로 환산하여 제시하고, 다시 한번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를 상대적 중요도로 환산할 때에는 순위 합계 가중치, 순위 역수 가중치를 모두 제시하고 2차 조사 응답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3) 영역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1차 조사 응답의 평균, 표준 편차, 사분위수 범위, 본인의 1차 조사 응답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8개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합계가 100%가 되도록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지표 적합성 및 중요도 평가

가. 적합도 평가

지표의 적합도는 5점 척도(매우 부적합 ~ 매우 적합)로 질문한 후, 이를 100점 척도로 환산하였다(매우 부적합 0점 ~ 매우 적합 100점). 적합도 평균이 50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표가 '부적합' 또는 '매우 부적합'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CVR(내용타당도 계수) 산출

적합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 타당도 계수인 CVR값을 산출하였다. CVR값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

$$CVR = \frac{N_e - \frac{N}{2}}{\frac{N}{2}}$$

N_e = 해당 지표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
(100점 척도에서 75점, 100점 평가)

CVR값이 음수인 경우는 해당 지표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Lawshe(1975)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응답자가 40명인 경우, CVR값이 0.300이상이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보고 있다.

2) 합의도 산출

적합도 평가 결과에 대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합의에 이르렀는지 보기 위해 '합의도'를 산출하였다. 합의도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되며, 합의도가 1에 가까울수록 응답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text{합의도} = 1 - (\text{3분위수} - \text{1분위수})/\text{중위수}$$

나. 상대적 중요도 산출

1) 영역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1차 조사에서는 영역별 지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게 한 후, 이를 상대적 중요도로 변환하여 2차 조사에서 제시하였다.

우선순위를 상대적 중요도로 변환할 때에는 순위 합계 가중법, 순위 역수 가중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 2-6] 순위합계 가중법과 순위역수 가중법

지표	순위	순위 합계 가중법		순위 역수 가중법	
		순위의 역순위 (N-Ri+1)	(표준화) 가중치	순위의 역수(1/Ri)	(표준화) 가중치
A	1	7	0.250	1.000	0.386
B	2	6	0.214	0.500	0.193
C	3	5	0.179	0.333	0.129
D	4	4	0.143	0.250	0.096
E	5	3	0.107	0.200	0.077
F	6	2	0.071	0.167	0.064
G	7	1	0.036	0.143	0.055
합계		28	1.000	2.593	1.000

2차 조사에서는 직접 상대적 중요도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별도의 산출 과정이 필요 없었다.

2) 전체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2차 조사에서는 영역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와 8개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후, 전체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게 된다.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는 해당 지표가 속한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와, 해당 지표가 속한 영역 안에서 다른 지표들에 비해 갖는 상대적 중요도의 곱으로 계산된다.

예시) 건강 영역의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의 상대적 중요도
= '건강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 건강 영역 내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의 상대적 중요도

3) 합의도, 수렴도, CV값 산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할 때에도, 적합도와 마찬가지로 합의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수렴도와 CV값도 산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begin{aligned} \text{수렴도} &= (\text{3분위수} - \text{1분위수}) / 2 \\ \text{CV(변이 계수)} &= \text{표준 편차} / \text{평균} \end{aligned}$$

수렴도는 응답자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0에 가까울수록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V값은 변이 계수인데, 0.5 이하일 경우 지표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0.5~0.8 사이일 경우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추가 조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0.8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행복지표 2.0 도출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영역별 지표의 적합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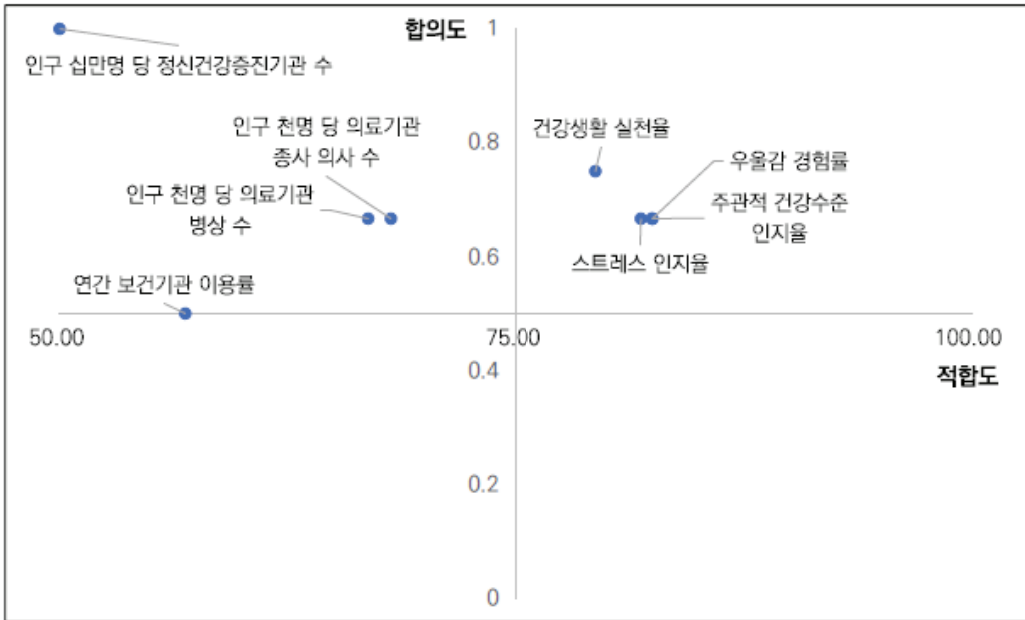
가. 건강 영역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건강 생활 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은 적합도 평균이 75점(적합)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CVR값도 기준값보다 높았다.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와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는 적합도 평균이 60점 대로 ‘보통’(50점)과 ‘적합’(75점) 사이에서 ‘적합’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에 위치하며, CVR값이 기준값과 같거나 낮았다.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와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은 적합도가 50점 대로 ‘보통’에 가깝고, CVR값도 음수로 나타나 해당 지표가 적합(75점 또는 100점)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수가 전체 응답자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기】 건강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CVR	합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79.07	24.35	82.50	18.95	0.850	0.667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69.19	24.90	66.88	21.47	0.200	0.667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68.02	26.35	68.13	21.17	0.300	0.667
	건강 생활 실천율	76.16	20.38	79.38	13.74	0.850	0.750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55.81	23.04	50.00	16.98	-0.600	1.000
	스트레스 인지율	77.91	22.63	81.88	13.85	0.900	0.667
	우울감 경험률	79.65	22.00	82.50	14.10	0.900	0.667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59.88	23.87	56.88	21.92	-0.150	0.500



[그림 2-2] 건강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나. 안전 영역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은 적합도 평균이 75점(적합)보다 높았고, CVR값도 기준값 이상으로 높았다.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은 적합도 평균이 70.00점으로 ‘적합’(75점)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CVR값이 기준값보다 높았다.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는 적합도가 58.13점으로 ‘보통’에 가까운 편이었으며, CVR값이 음수로 나타나 해당 지표가 적합(75점 또는 100점)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전체 응답자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표 2-8] 안전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CVR	합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안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76.16	21.10	78.75	16.55	0.800	0.667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81.98	19.91	86.88	12.64	1.000	0.667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78.49	20.83	85.00	12.40	1.000	0.667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58.72	21.05	58.13	19.10	-0.200	0.500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69.77	25.91	70.00	18.08	0.500	0.750



[그림 2-3] 안전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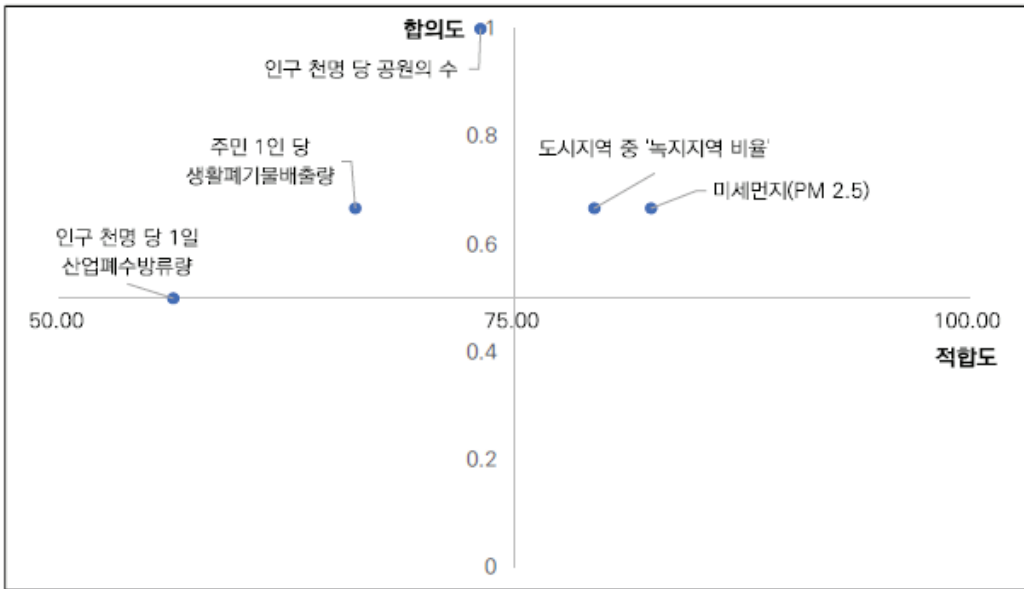
다. 환경 영역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과 ‘미세 먼지(PM 2.5)’는 적합도 평균이 75점(적합)보다 높고, CVR값도 기준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는 적합도 평균이 75점(적합)에는 약간 미치지 못했으나, CVR값이 기준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적합도 평균이 66.25점으로 ‘보통’(50점)과 ‘적합’(75점)의 중간에 위치했고, CVR값이 기준값보다 낮았다.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은 적합도 평균이 56.25점으로 ‘보통’(50점)에 가까웠고, CVR값이 음수로 나타나 해당 지표가 적합(75점 또는 100점)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전체 응답자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표 2-9] 환경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CVR	합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환경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75.58	22.15	79.38	17.80	0.750	0.667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73.26	25.82	73.13	21.47	0.550	1.000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59.88	24.48	56.25	17.68	-0.350	0.500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68.60	24.45	66.25	18.39	0.250	0.667
	미세 먼지(PM 2.5)	80.23	25.33	82.50	20.57	0.800	0.667



[그림 2-4] 환경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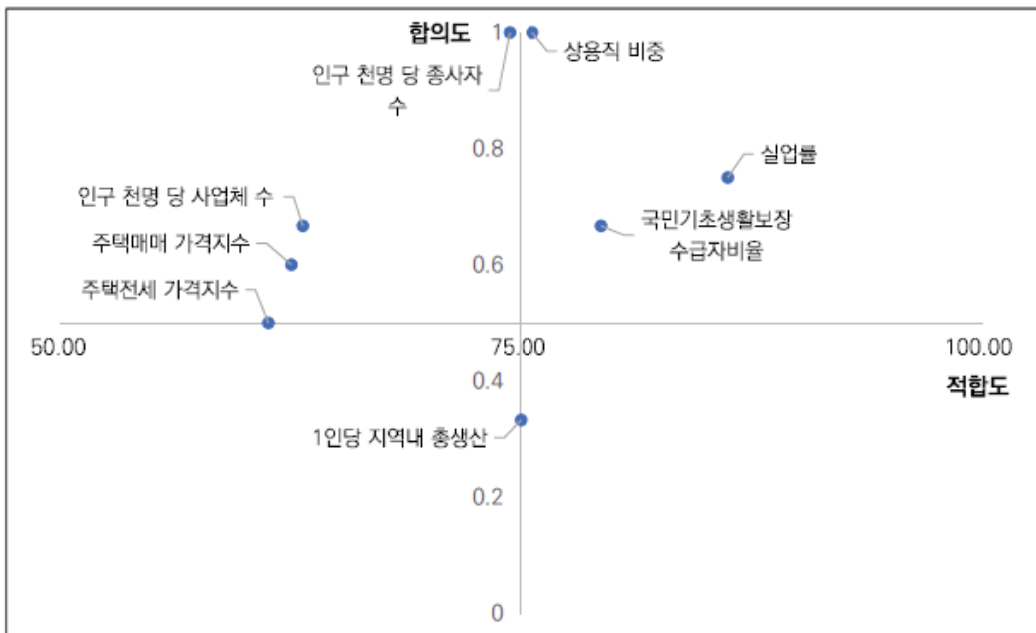
라. 경제 영역

‘상용직 비중’, ‘실업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적합도 평균이 75점(적합)이상이었으며, CVR값도 기준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합의도가 0.333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는 적합도 평균이 74.38점으로서의 ‘적합’(75점)에 약간 못 미쳤으나 CVR값은 기준값 이상이었다.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와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적합도 평균이 60점대로 ‘보통’(50점)과 ‘적합’(75점)의 중간에 위치했으며, CVR값도 기준값보다 낮았다. ‘주택 전세 가격 지수’의 경우 CVR값이 음수로 나타나 해당 지표가 적합(75점 또는 100점)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경제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CVR	합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71.51	22.87	74.38	15.49	0.600	1.000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63.37	24.61	63.13	20.40	0.150	0.667
	주택 매매 가격 지수	63.37	24.00	62.50	16.98	0.000	0.600
	주택 전세 가격 지수	62.79	24.01	61.25	18.73	-0.100	0.500
	상용직 비중	73.26	24.03	75.63	15.49	0.750	1.000
	실업률	81.40	24.45	86.25	15.96	0.850	0.750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73.84	24.37	79.38	15.90	0.750	0.667
	1인당 지역내 총생산	71.51	25.34	75.00	20.41	0.450	0.333



[그림 2-5] 경제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마. 교육 영역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는 적합도가 75점(적합)이상이고, CVR값도 기준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와 ‘대학교 학생 수’는 적합도가 50점 초반대로 ‘보통’에 가까웠고, CVR값도 음수로 나타나 해당 지표가 적합(75점 또는 100점)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수가 전체 응답자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표 2-11] 교육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CVR	합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75.00	22.49	75.63	18.33	0.700	1.000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51.74	24.64	50.00	19.61	-0.550	1.000
	대학교 학생 수	50.58	21.47	51.88	15.39	-0.650	1.000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79.07	26.12	82.50	17.17	0.850	0.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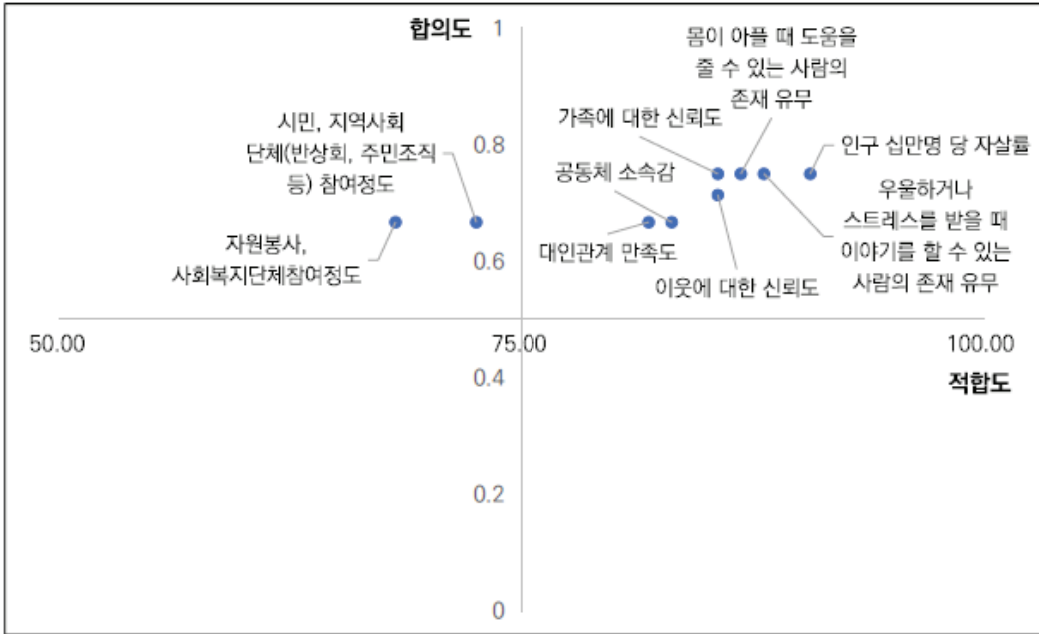
[그림 2-6] 교육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바. 관계/사회 참여 영역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와 ‘자원봉사, 사회 복지단체 참여 정도’는 적합도 평균이 ‘보통’(50점)과 ‘적합’(75점) 사이로 나타났으나, CVR값은 기준값 보다 높았다. 그 외의 지표들은 모두 적합도 평균이 80점 이상으로 높았고 CVR값도 기준값보다 높았다.

[표 2-12] 관계/사회 참여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CVR	합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관계/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83.14	22.97	90.63	13.50	0.950	0.750
	대인 관계 만족도	78.49	22.21	81.88	16.00	0.900	0.667
	공동체 소속감	80.23	21.52	83.13	16.40	0.900	0.667
	이웃에 대한 신뢰도	81.40	20.48	85.63	16.88	0.900	0.714
	가족에 대한 신뢰도	80.23	24.74	85.63	17.80	0.850	0.750
	시민, 지역 사회 단체 (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73.26	21.41	72.50	16.79	0.450	0.667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73.84	21.10	68.13	21.17	0.400	0.667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80.23	22.20	86.88	14.97	0.900	0.750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81.98	22.71	88.13	16.97	0.900	0.750



[그림 2-1] 관계/사회 참여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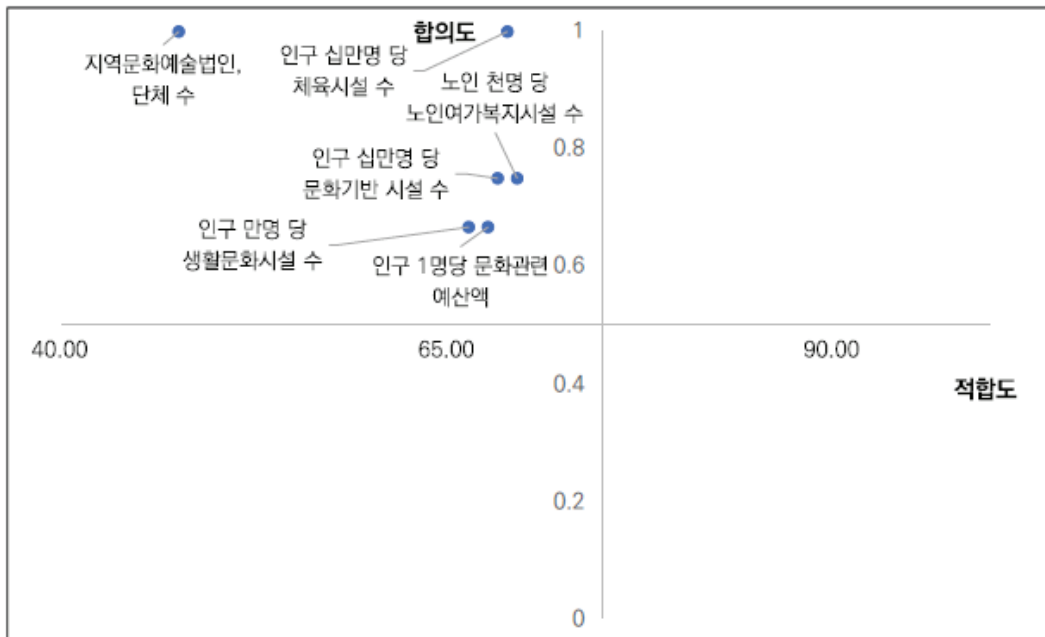
사. 여가 영역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시설 수’는 적합도 평균이 60점대로 ‘보통’(50점)과 ‘적합’(75점) 중간으로 나타났으며, CVR 값은 기준값보다 높았다.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는 적합도 평균이 47.50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했으며, CVR값도 음수로 나타나 해당 지표가 적합(75점 또는 100점)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수가 전체 응답자 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표 2-13] 여가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CVR	합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69.19	26.64	68.13	19.60	0.500	0.750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69.77	25.91	68.75	20.99	0.550	1.000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68.60	27.87	66.25	23.03	0.350	0.667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68.02	25.19	67.50	22.07	0.400	0.667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55.23	22.86	47.50	21.03	-0.700	1.000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68.02	26.35	69.38	16.49	0.500	0.750



[그림 2-8] 여가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아. 주관적 안녕감 영역

주관적 안녕감 영역에서는 모든 지표의 적합도 평균이 ‘적합’(75점)이상으로 나타났고, CVR값도 기준값보다 높았다.

[표 2-14] 주관적 안녕감 영역 지표의 적합도 평가 결과

영역	지표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CVR	합의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86.63	23.37	90.00	19.45	0.900	0.750
	인생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로움	79.07	22.45	81.25	14.71	0.850	0.667
	삶의 의미	80.23	24.74	85.63	14.86	0.900	0.667
	삶의 만족도	89.53	18.28	91.25	13.34	0.950	0.750



[그림 2-9] 주관적 안녕감 영역 지표의 적합도와 합의도

자. 지표의 적합 여부 검토

지표의 적합/부적합 여부, 추가 검토 필요 여부를 응답자들이 평가한 적합도의 평균 값과, 산출한 CVR값, 합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표 2-15] 지표의 적합 여부 분류 기준

구분	기준
부적합	적합도가 50점 이하이거나 50점에 가깝고, CVR값이 음수이며 합의도는 높은 지표. 즉, 적합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이 합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
검토 필요	적합도가 50점 보다 높고 75점보다 낮거나, CVR값이 기준값보다 낮고, 합의도는 보통 수준이라 검토가 필요한 지표
합의도 확인 필요	적합도가 75점 이상, CVR값도 기준값 이상이나 합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지표

8개 영역, 49개 지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4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9개, 합의도가 낮아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1개였다.

[표 2-16] 지표의 적합 여부 분류 결과

영역	지표	검토 결과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건강 생활 실천율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부적합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검토 필요
안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검토 필요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영역	지표	검토 결과
환경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검토 필요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검토 필요
	미세 먼지(PM 2.5)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검토 필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	검토 필요
	주택 전세 가격 지수	검토 필요
	상용직 비중	
	실업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1인당 지역내 총생산	합의도 확인 필요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부적합
	대학교 학생 수	부적합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관계/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대인 관계 만족도	
	공동체 소속감	
	이웃에 대한 신뢰도	
	가족에 대한 신뢰도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사회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검토 필요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검토 필요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부적합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움	
	삶의 의미	
	삶의 만족도	

2 영역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가. 건강 영역

건강 영역에서 합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는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와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으로 나타났으며, CV값은 모든 지표에서 0.5이하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건강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영역	지표	상대적 중요도		합의도	수렴도	CV
		평균	표준 편차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0.201	0.066	0.550	0.045	0.327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0.103	0.044	0.600	0.020	0.428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0.102	0.039	0.663	0.017	0.380
	건강 생활 실천율	0.136	0.044	0.682	0.022	0.324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0.091	0.042	0.333	0.030	0.464
	스트레스 인지율	0.137	0.040	0.667	0.025	0.290
	우울감 경험률	0.136	0.035	0.679	0.023	0.261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0.094	0.046	0.300	0.035	0.487

나. 안전 영역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의 합의도가 안전 영역의 다른 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CV값은 모든 지표에서 0.5이하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안전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영역	지표	상대적 중요도		합의도	수렴도	CV
		평균	표준 편차			
안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0.208	0.051	0.773	0.025	0.245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0.222	0.044	0.777	0.025	0.197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0.236	0.047	0.840	0.020	0.198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0.164	0.048	0.565	0.034	0.292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0.170	0.059	0.706	0.025	0.347

다. 환경 영역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의 합의도가 환경 영역의 다른 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CV값은 모든 지표에서 0.5이하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환경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영역	지표	상대적 중요도		합의도	수렴도	CV
		평균	표준 편차			
환경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0.243	0.077	0.783	0.025	0.315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0.199	0.069	0.588	0.041	0.349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0.164	0.055	0.713	0.025	0.337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0.178	0.055	0.725	0.025	0.308
	미세 먼지(PM 2.5)	0.215	0.061	0.763	0.025	0.284

라. 경제 영역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와 ‘실업률’의 합의도가 경제 영역의 다른 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CV값은 모든 지표에서 0.5이하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경제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영역	지표	상대적 중요도		합의도	수렴도	CV
		평균	표준 편차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0.130	0.040	0.588	0.025	0.310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0.109	0.036	0.625	0.019	0.335
	주택 매매 가격 지수	0.114	0.026	0.657	0.020	0.230
	주택 전세 가격 지수	0.116	0.036	0.604	0.024	0.307
	상용직 비중	0.133	0.040	0.635	0.024	0.302
	실업률	0.156	0.038	0.570	0.032	0.246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0.123	0.036	0.615	0.025	0.294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0.119	0.037	0.583	0.025	0.308

마. 교육 영역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의 합의도가 교육 영역의 다른 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CV값은 모든 지표에서 0.5이하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교육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영역	지표	상대적 중요도		합의도	수렴도	CV
		평균	표준 편차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0.271	0.068	0.791	0.029	0.252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0.208	0.076	0.556	0.050	0.365
	대학교 학생 수	0.211	0.052	0.750	0.025	0.246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0.310	0.065	0.721	0.042	0.209

바. 관계/사회 참여 영역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가족에 대한 신뢰도’,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의 합의도가 다른 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CV값은 모든 지표에서 0.5이하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관계/사회 참여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영역	지표	상대적 중요도		합의도	수렴도	CV
		평균	표준 편차			
관계/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0.142	0.063	0.500	0.033	0.445
	대인 관계 만족도	0.111	0.034	0.758	0.012	0.309
	공동체 소속감	0.110	0.035	0.725	0.014	0.318
	이웃에 대한 신뢰도	0.119	0.030	0.568	0.024	0.252
	가족에 대한 신뢰도	0.118	0.033	0.524	0.025	0.281
	시민, 지역 사회 단체 (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0.090	0.032	0.425	0.029	0.353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0.088	0.029	0.500	0.025	0.328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0.105	0.029	0.663	0.017	0.280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0.117	0.035	0.535	0.025	0.303

사. 여가 영역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시설 수’에서 합의도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에서 CV값이 0.5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23] 여가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영역	지표	상대적 중요도		합의도	수렴도	CV
		평균	표준 편차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0.192	0.063	0.613	0.039	0.326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0.181	0.061	0.763	0.024	0.339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0.184	0.053	0.769	0.023	0.291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0.163	0.056	0.677	0.025	0.344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0.131	0.074	0.615	0.025	0.565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0.150	0.072	0.429	0.040	0.479

아. 주관적 안녕감 영역

주관적 안녕감 영역에서는 모든 지표들의 합의도가 높은 편이었고, CV값도 0.5이하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주관적 안녕감 영역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영역	지표	상대적 중요도		합의도	수렴도	CV
		평균	표준 편차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0.298	0.059	0.750	0.038	0.199
	인생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로움	0.209	0.050	0.713	0.029	0.240
	삶의 의미	0.224	0.035	0.779	0.025	0.155
	삶의 만족도	0.270	0.042	0.803	0.025	0.156

3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주관적 안녕감’ 영역에서 합의도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CV값은 모든 영역에서 0.5이하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8개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영역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합의도	수렴도	CV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건강	0.167	0.078	0.163	0.031	0.667	0.025	0.189
안전	0.120	0.046	0.126	0.035	0.604	0.024	0.274
환경	0.104	0.028	0.106	0.034	0.925	0.004	0.318
경제	0.149	0.047	0.143	0.040	0.800	0.015	0.281
교육	0.105	0.035	0.106	0.031	0.694	0.015	0.296
관계/ 사회 참여	0.114	0.042	0.114	0.036	0.600	0.020	0.313
여가	0.105	0.037	0.105	0.027	0.763	0.012	0.257
주관적 안녕감	0.136	0.059	0.137	0.045	0.571	0.030	0.328

4 전체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산출

본 조사에서 설계한 행복지표 체계는, 영역별로 하위 지표의 수가 상이하다. 이 때문에 영역별 하위 지표의 수가 적은 영역에서,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가 비교적 높게 산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AHP 조사 방법론에서 사용하는 ‘절대적 우선순위 결정법’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영역별 하위 지표의 수를 고려한 전체 지표의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절대적 우선순위 결정법은 ‘대안 가운데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갖는 대안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모든 대안의 중요도를 나누어,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절대적 우선순위 결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전체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는 다음 표와 같다. 건강 영역의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경제 영역의 ‘실업률’, 주관적 안녕감 영역의 ‘행복감’ 등의 지표에서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26] 전체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주관적 안녕감 영역 포함)

영역	영역 상대적 중요도	지표	세부 지표 상대적 중요도	세부 지표 절대적 중요도	전체 지표 상대적 중요도
건강	0.167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0.201	1.000	0.034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0.103	0.511	0.017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0.102	0.508	0.017
		건강 생활 실천율	0.136	0.675	0.023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0.091	0.455	0.016
		스트레스 인지율	0.137	0.679	0.023
		우울감 경험률	0.136	0.676	0.023
안전	0.120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0.094	0.470	0.016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0.208	0.883	0.022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0.222	0.939	0.023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0.236	1.000	0.025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0.164	0.695	0.017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0.170	0.719	0.018		

영역	영역 상대적 중요도	지표	세부 지표 상대적 중요도	세부 지표 절대적 중요도	전체 지표 상대적 중요도
환경	0.104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0.243	1.000	0.021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0.199	0.820	0.018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0.164	0.676	0.014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0.178	0.734	0.016
		미세 먼지(PM 2.5)	0.215	0.886	0.019
경제	0.149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0.130	0.835	0.026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0.109	0.698	0.021
		주택 매매 가격 지수	0.114	0.735	0.022
		주택 전세 가격 지수	0.116	0.748	0.023
		상용직 비중	0.133	0.854	0.026
		실업률	0.156	1.000	0.031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0.123	0.792	0.024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0.119	0.766	0.023
교육	0.105	교원 1인당 학생 수	0.271	0.875	0.019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0.208	0.672	0.015
		대학교 학생 수	0.211	0.681	0.015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0.310	1.000	0.022
관계/ 사회 참여	0.114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0.142	1.000	0.023
		대인 관계 만족도	0.111	0.783	0.018
		공동체 소속감	0.110	0.774	0.018
		이웃에 대한 신뢰도	0.119	0.838	0.020
		가족에 대한 신뢰도	0.118	0.828	0.019
		시민, 지역 사회 단체 (반사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0.090	0.633	0.015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0.088	0.618	0.014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0.105	0.739	0.017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사람의 존재 유무	0.117	0.823	0.019

영역	영역 상대적 중요도	지표	세부 지표 상대적 중요도	세부 지표 절대적 중요도	전체 지표 상대적 중요도
여가	0.105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0.192	1.000	0.022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0.181	0.942	0.020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0.184	0.958	0.021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0.163	0.849	0.018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0.131	0.685	0.015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0.150	0.780	0.017
주관적 안녕감	0.136	행복감	0.298	1.000	0.028
		인생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로움	0.209	0.701	0.020
		삶의 의미	0.224	0.752	0.021
		삶의 만족도	0.270	0.907	0.025

주관적 안녕감 영역을 제외하고 산출했을 때에는, 그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건강 영역의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경제 영역의 '실업률', '상용직 비중'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2-27] 전체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주관적 안녕감 영역 제외)

영역	영역 상대적 중요도	지표	세부 지표 상대적 중요도	세부 지표 절대적 중요도	전체 지표 상대적 중요도
건강	0.193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0.201	0.193	0.038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0.103	0.098	0.019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0.102	0.098	0.019
		건강 생활 실천율	0.136	0.130	0.025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0.091	0.088	0.017
		스트레스 인지율	0.137	0.131	0.026
		우울감 경험률	0.136	0.130	0.026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0.094	0.091	0.018

영역	영역 상대적 중요도	지표	세부 지표 상대적 중요도	세부 지표 절대적 중요도	전체 지표 상대적 중요도
안전	0.139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0.208	0.123	0.024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0.222	0.131	0.026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0.236	0.139	0.027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0.164	0.097	0.019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0.170	0.100	0.020
환경	0.120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0.243	0.120	0.024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0.199	0.099	0.019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0.164	0.081	0.016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0.178	0.088	0.017
		미세 먼지(PM 2.5)	0.215	0.107	0.021
경제	0.172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0.130	0.144	0.028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0.109	0.120	0.024
		주택 매매 가격 지수	0.114	0.126	0.025
		주택 전세 가격 지수	0.116	0.129	0.025
		상용직 비중	0.133	0.147	0.029
		실업률	0.156	0.172	0.034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0.123	0.136	0.027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0.119	0.132	0.026
교육	0.122	교원 1인당 학생 수	0.271	0.107	0.021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0.208	0.082	0.016
		대학교 학생 수	0.211	0.083	0.016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0.310	0.122	0.024

영역	영역 상대적 중요도	지표	세부 지표 상대적 중요도	세부 지표 절대적 중요도	전체 지표 상대적 중요도
관계/ 사회 참여	0.132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0.142	0.132	0.026
		대인 관계 만족도	0.111	0.103	0.020
		공동체 소속감	0.110	0.102	0.020
		이웃에 대한 신뢰도	0.119	0.110	0.022
		가족에 대한 신뢰도	0.118	0.109	0.021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0.090	0.083	0.016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참여 정도	0.088	0.081	0.016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0.105	0.097	0.019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사람의 존재 유무	0.117	0.108	0.021		
여가	0.122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0.192	0.122	0.024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0.181	0.115	0.023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0.184	0.117	0.023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0.163	0.104	0.020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0.131	0.083	0.016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0.150	0.095	0.019

5 행복지표 2.0 도출

앞에서 설명한 적합도와 중요도를 반영하여 최종 산출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표 2-28). 지표 선정은 영역별 적합도(75점 이상)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와 영역별 지표 수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각 영역별 지표에 대해 투입/결과 지표, 객관적/주관적 지표, 자료 단위 등에 대해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행복을 구성하는 지표를 결과 지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으로서 지역 경제, 정주여건 등과 관련된 지표를 투입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투입과 결과 지표는 상대적일 수 있을 것이다.

[표 2-28] 행복지표 2.0

영역	지표명	투입 / 결과 지표	객관적 / 주관적 지표	자료 단위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결과	주관적	시군구, 시도
	건강 생활 실천율	결과	객관적	시군구, 시도
	스트레스 인지율	결과	주관적	시군구, 시도
	우울감 경험률	결과	주관적	시군구, 시도
안전	교통사고(지역 안전 등급)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화재(지역 안전 등급)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범죄(지역 안전 등급)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생활 안전(지역 안전 등급)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환경	녹지 지역 비율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미세 먼지(PM 2.5)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상용직 비중	투입	객관적	시도
	실업률	투입	객관적	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영역	지표명	투입 / 결과 지표	객관적 / 주관적 지표	자료 단위
교육	교원 1인당 학생수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관계 및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결과	객관적	시군구, 시도
	대인 관계 만족도	결과	주관적	시도
	공동체 소속감	결과	주관적	시도
	이웃에 대한 신뢰도	결과	주관적	시도
	가족에 대한 신뢰도	결과	주관적	시도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결과	주관적	시도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투입	객관적	시도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투입	객관적	시군구, 시도
	삶의 만족도	결과	주관적	시도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결과	주관적	시도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움	결과	주관적	시도
	삶의 의미	결과	주관적	시도

제3장

대한민국 행복 역량 지표 분석

제1절 행복 역량 지표 실태

제2절 영역별 분석

제3절 소결

제 1절 행복 역량 지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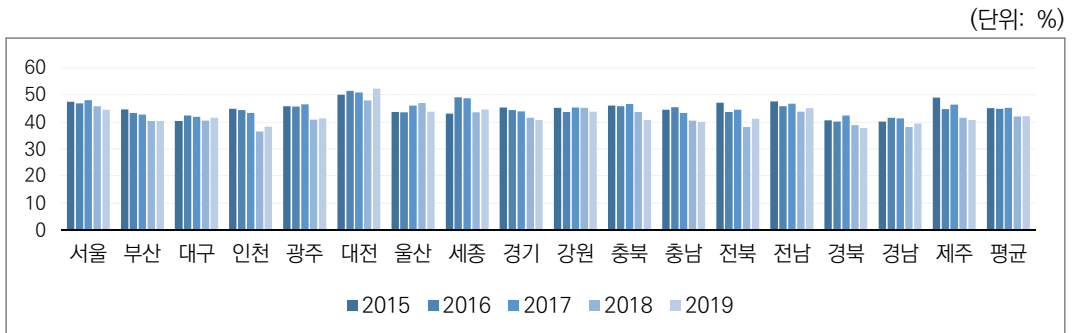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건강

건강 영역은 좋은 신체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건강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는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건강 생활 실천율’, 그리고 정신 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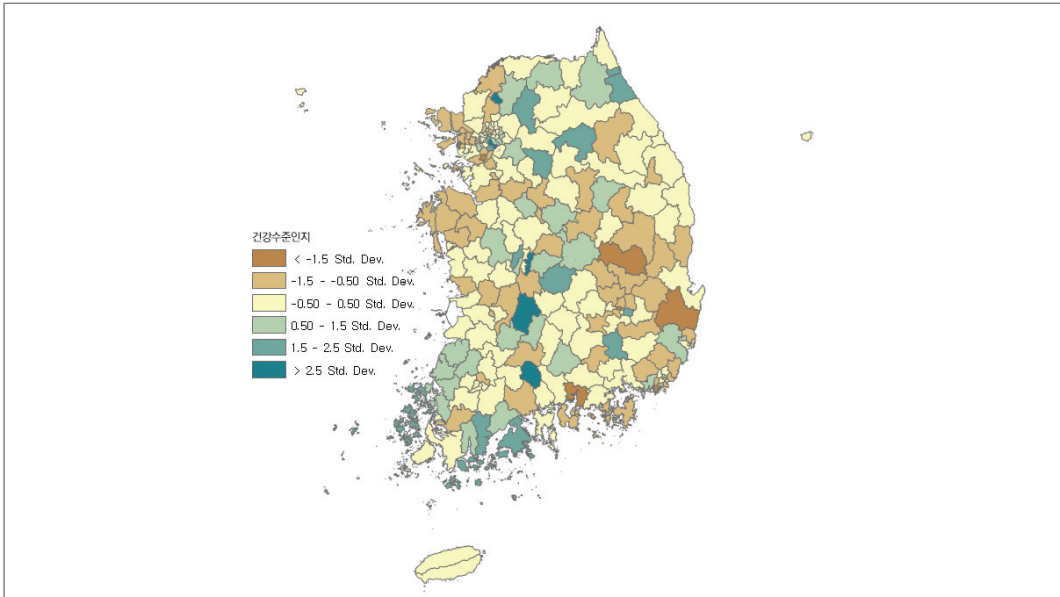
가. 주관적 지표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로서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조정한 표준화율을 활용하였다. 시도별 최근 5개년도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건강 수준을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52.4%)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37.8%)이었다.



[그림 3-1]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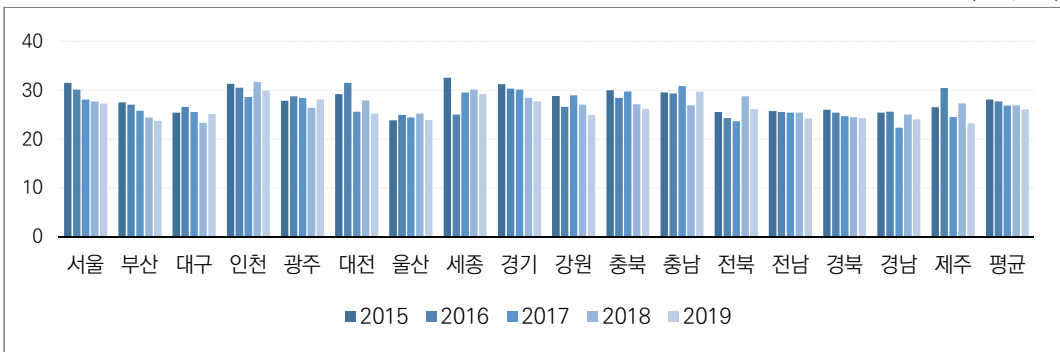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파란색 지역이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은 지역이고 빨간색 지역은 낮은 지역이다.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동구(68.3%)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동구(29.7%)로 나타났다.



[그림 3-2] 건강 수준 인지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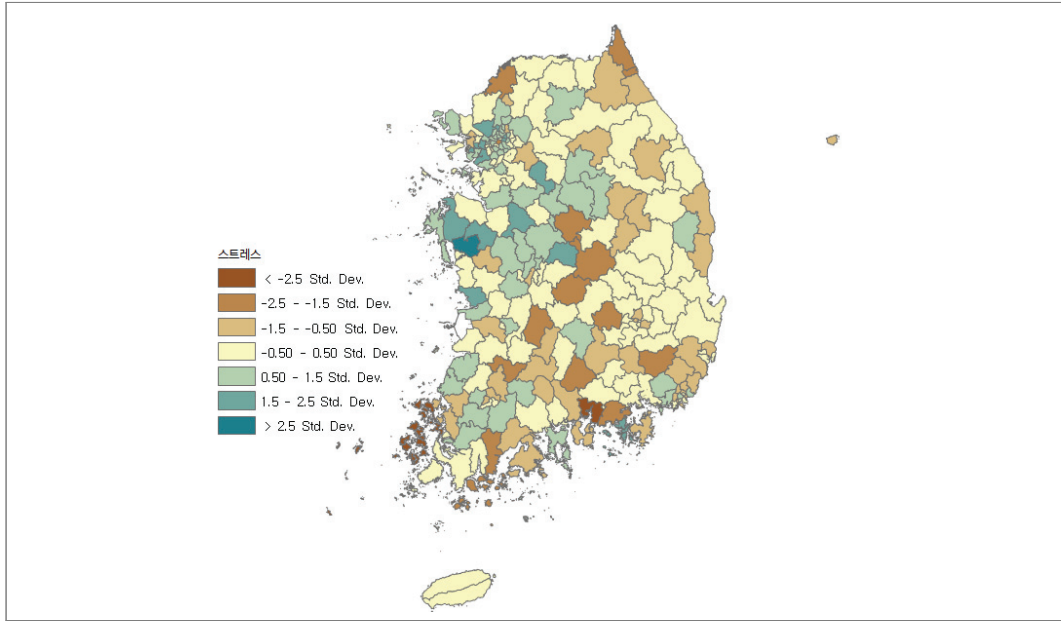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다. 최근 5개년을 살펴보면 시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5개년에 대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울산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3-3] 스트레스 인지율(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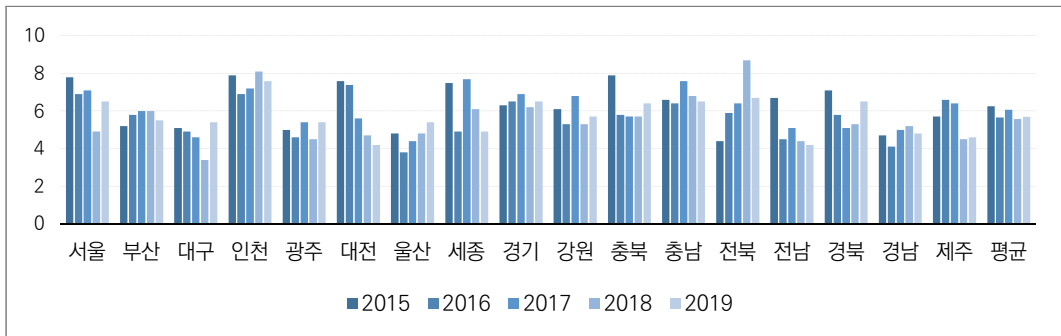
‘스트레스 인지율’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남 사천시가 가장 낮은 10%로 나타났으며, 충남 홍성군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 스트레스 인지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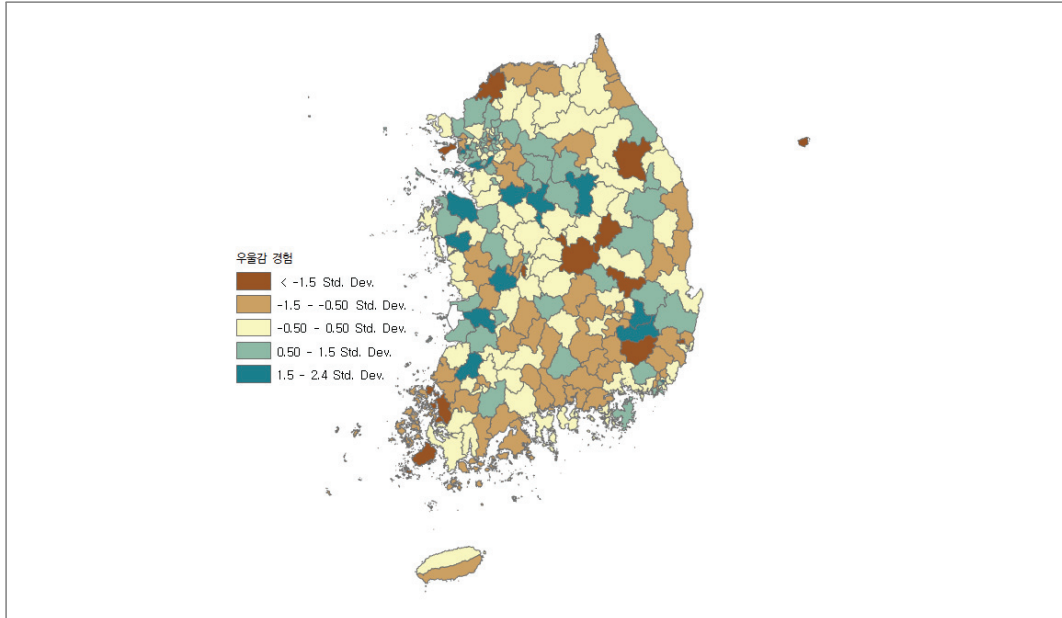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다. 시도별로 보면, 2019년 기준 대전이 4.2%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이 7.6%로 가장 높았다.

(단위: %)



[그림 3-5] 우울감 경험률(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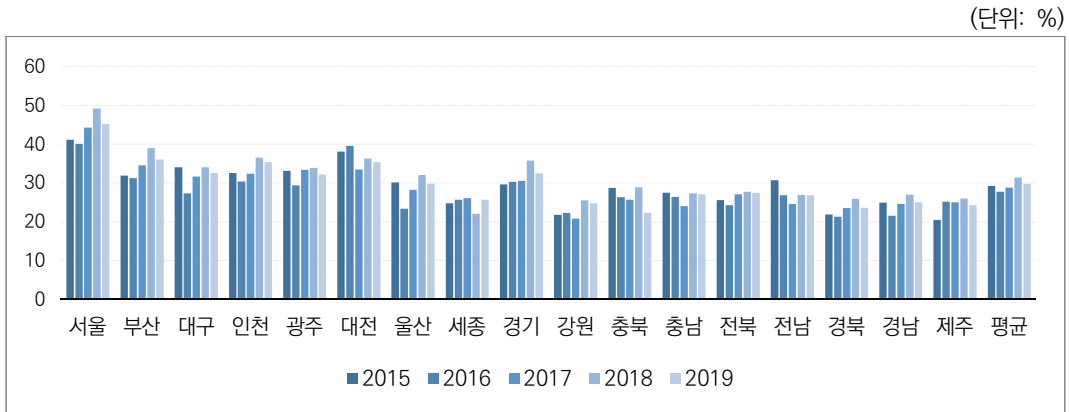
‘우울감 경험률’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파란색은 우울감 경험이 높은 지역이고 빨간색은 우울감 경험이 낮은 지역이다. 울릉군은 0.1%로 가장 낮았으며, 미추홀구 10.5%. 장성군 10.4%, 경산시 10.3%, 제천시 10.3%은 높은 지역이다.



[그림 3-6] 우울감 경험률(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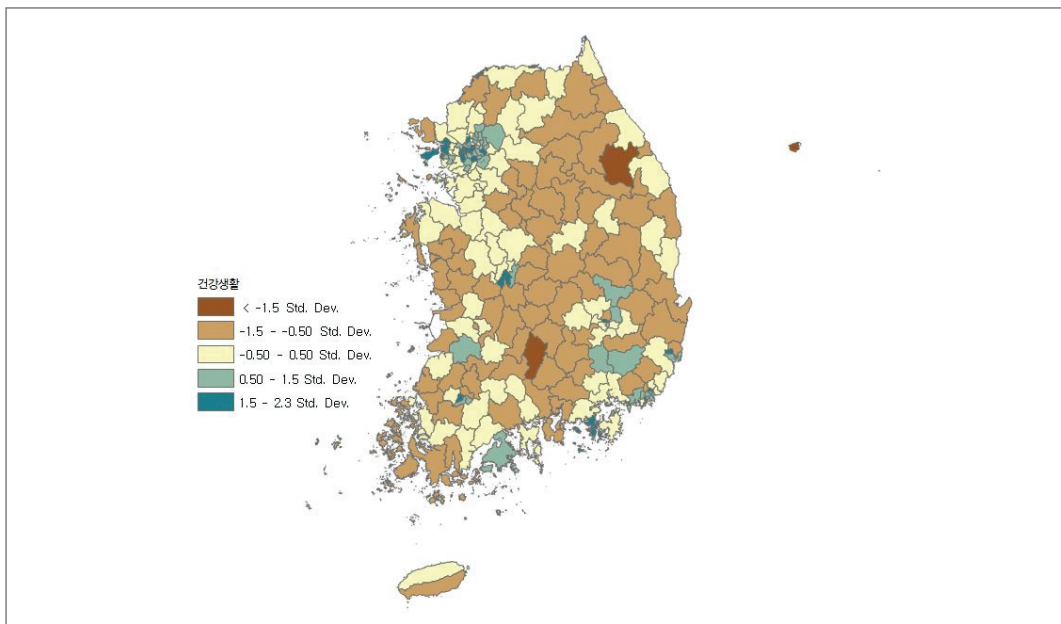
가. 객관적 지표

‘건강 생활 실천율’은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로 표준화율을 사용하였다. 최근 5개년 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기준, 건강 생활 실천율이 가장 높은 시도 지역은 서울로 45.2%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22.3%를 나타냈다.



[그림 3-7] 건강 생활 실천율(2015-2019)

건강 생활 실천율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용산구가 54.7%로 가장 높았으며, 제일 낮은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9.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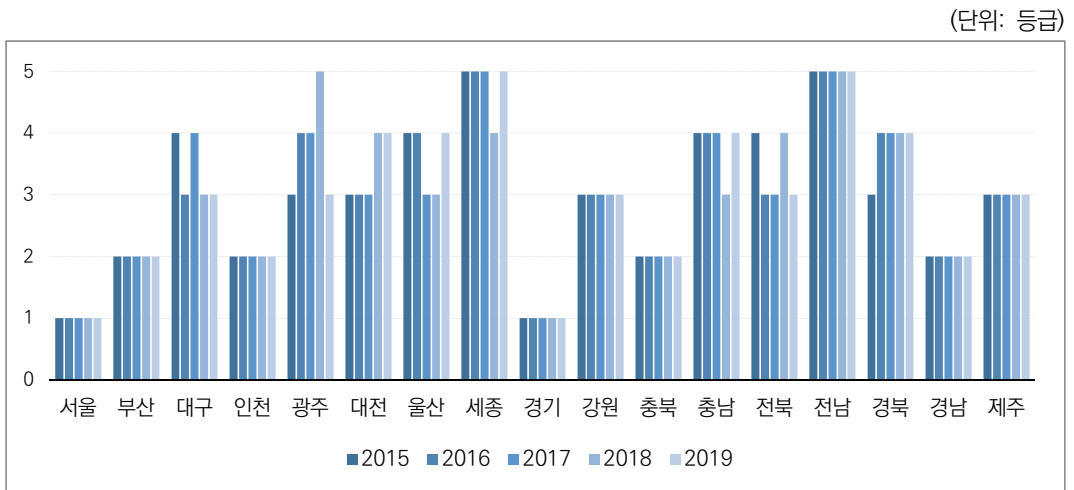


[그림 3-8] 건강 생활 실천율(2019)

2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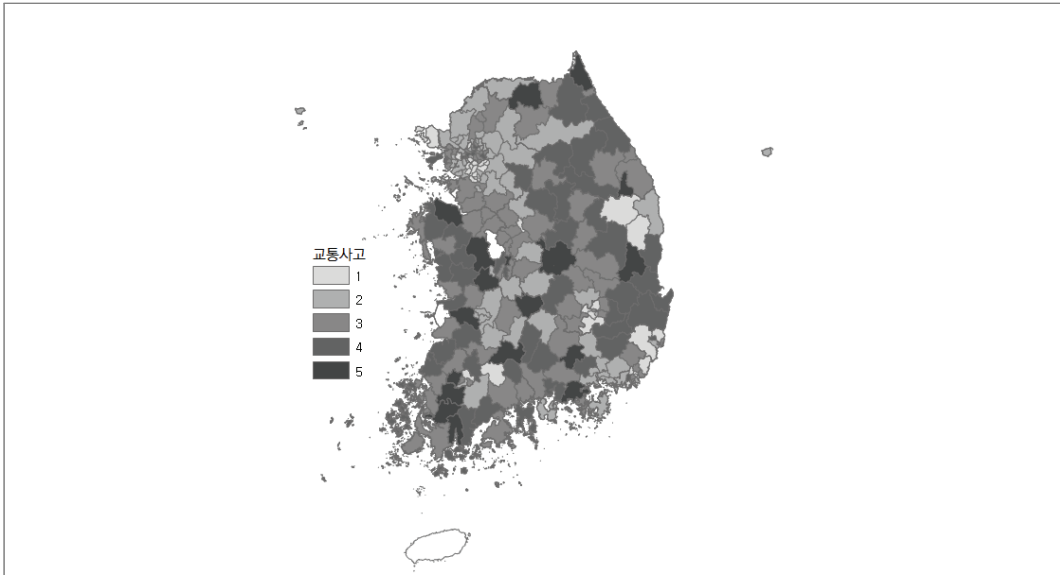
안전 영역은 지역 안전 등급 현황을 활용하였으며,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 안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역 안전 등급은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것이다.

먼저 교통사고 안전 등급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시와 전남이 비교적 높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아 교통사고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5개 년도 연속 1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에 있어 안전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9] 교통사고 안전 등급(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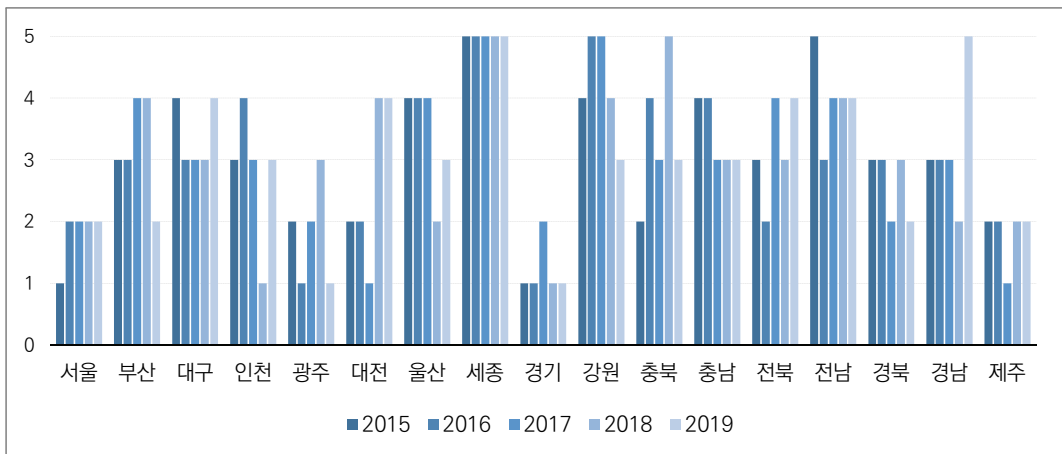
교통사고 안전 등급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1등급으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은 은평구, 부산 동래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기장군, 대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주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증평군, 곡성군, 영양군, 봉화군 등이다.



[그림 3-10] 교통사고 안전 등급(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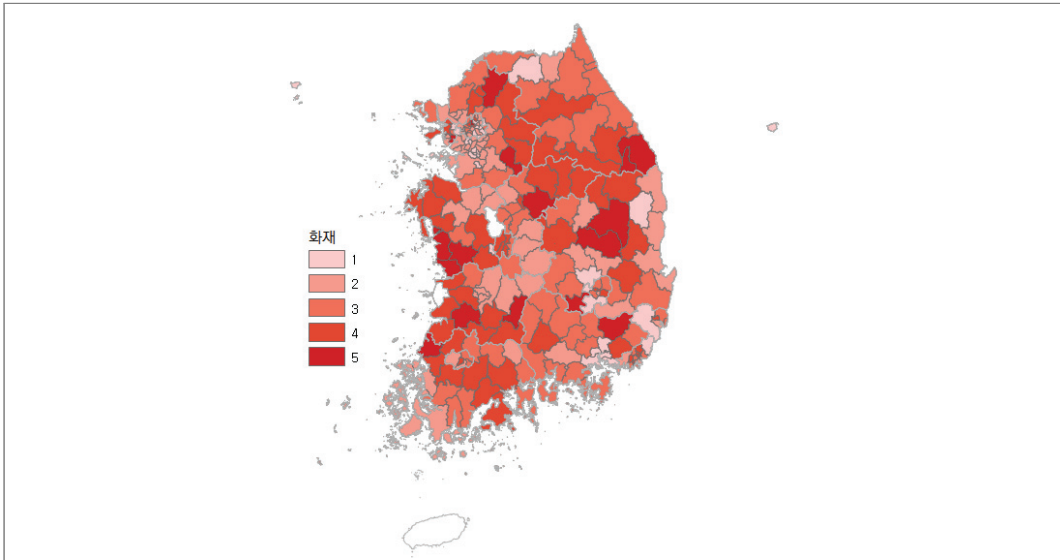
화재 안전 등급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최근 5년동안 모두 5등급으로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등급)



[그림 3-11] 화재 안전 등급(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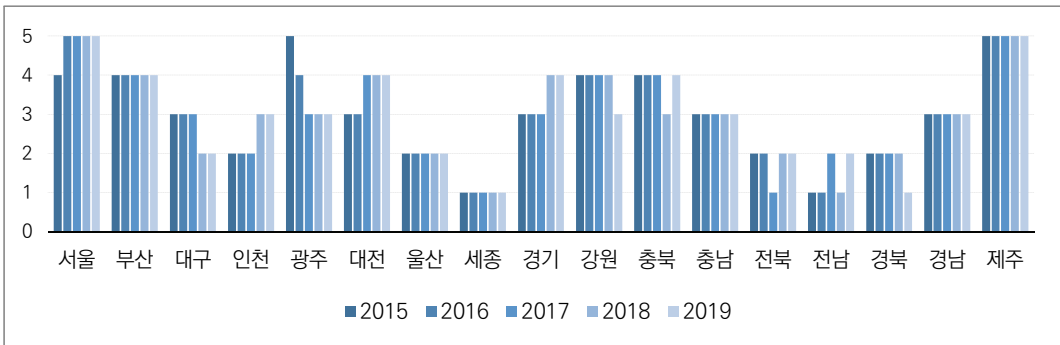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화재 안전 등급 1등급인 지역은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기장군, 달성군, 계약구, 용진군, 울주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구리시, 오산시, 화천군, 계룡시, 영양군, 칠곡군, 울릉군, 창원시 등이다.



[그림 3-12] 화재 안전 등급(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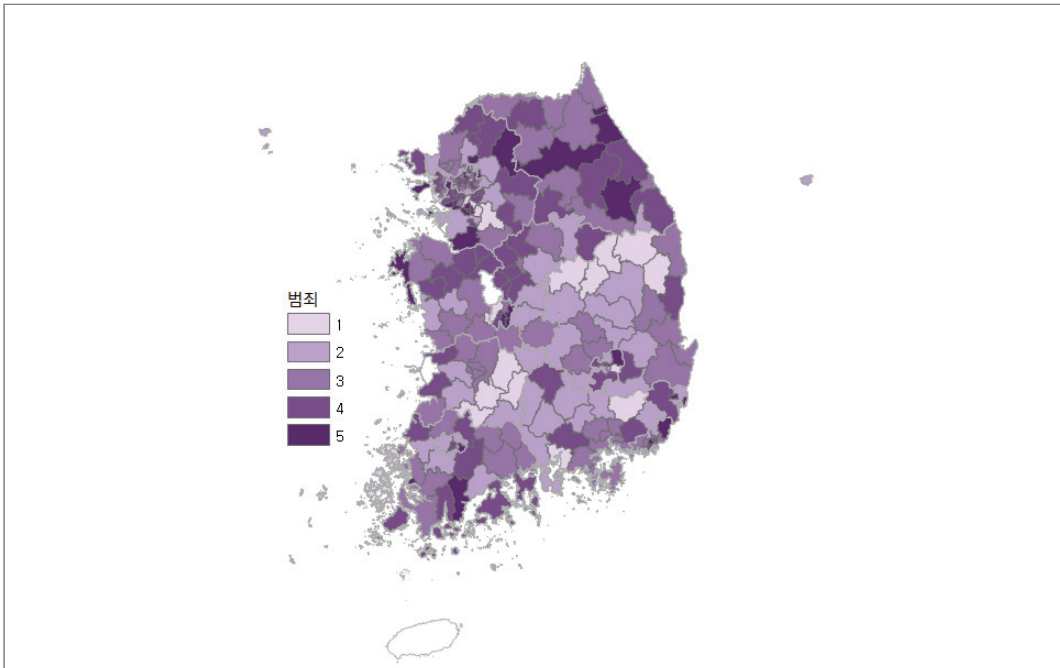
범죄 안전 등급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최근 5개년 동안 모두 1등급을 받아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았으며, 반면 제주도는 5개년 모두 5등급을 받았고, 서울도 최근 4년 동안 5등급을 받아 범죄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등급)



[그림 3-13] 범죄 안전 등급(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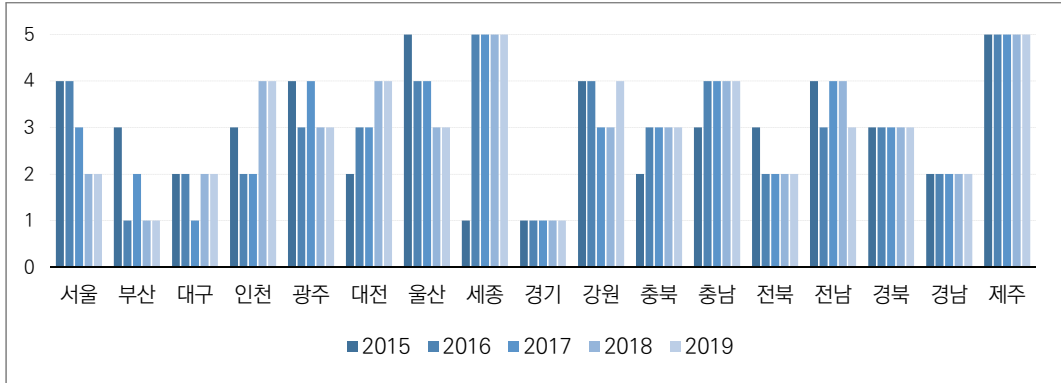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범죄 안전 등급 1등급인 지역은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 수성구,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의왕시, 용인시, 계룡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신안군,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사천시, 밀양시 등이다.



[그림 3-14] 범죄 안전 등급(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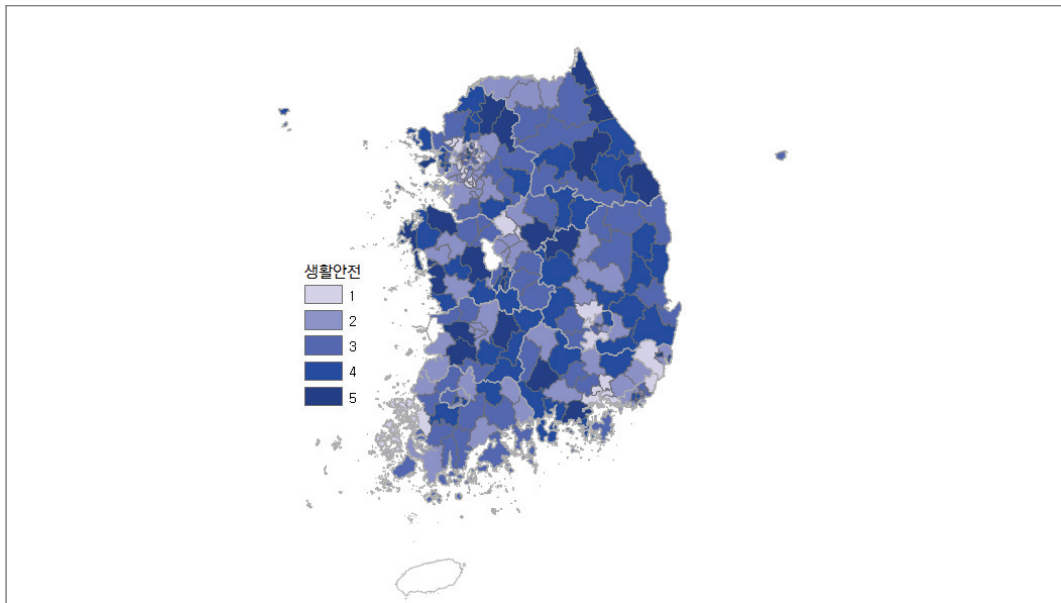
생활 안전 등급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1등급을 받았으며 제주는 최근 5년 동안 5등급을 받아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등급)



[그림 3-15] 생활 안전 안전 등급(2015-2019)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생활 안전 안전 등급 1등급인 지역은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군포시, 증평군, 진천군, 무안군, 신안군, 칠곡군, 창원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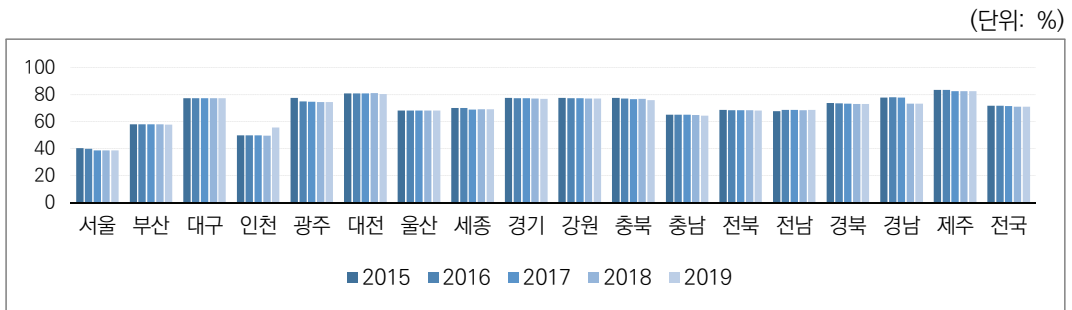


[그림 3-16] 생활 안전 안전 등급(2019)

3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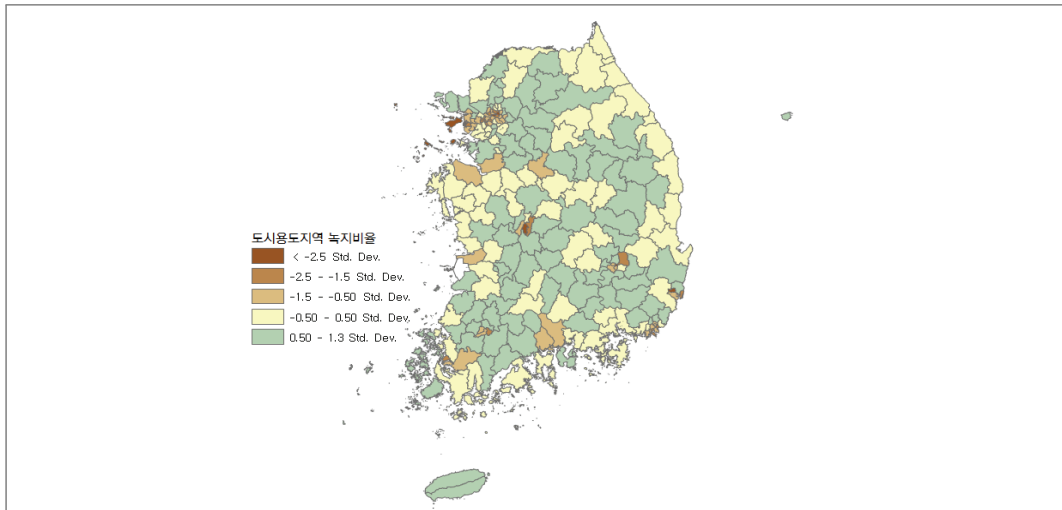
환경 영역은 맑고 풍족한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수 있는 지를 의미한다. 환경 영역의 지표는 ‘도시 지역 중 녹지 비율’, ‘인구 천명당 공원 수’, ‘미세 먼지 대기 오염 수준’ 등이다.

녹지 비율의 경우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39.8%, 2019 기준), 제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82.7%, 2019 기준).



[그림 3-17] 도시 용도 지역 녹지 비율(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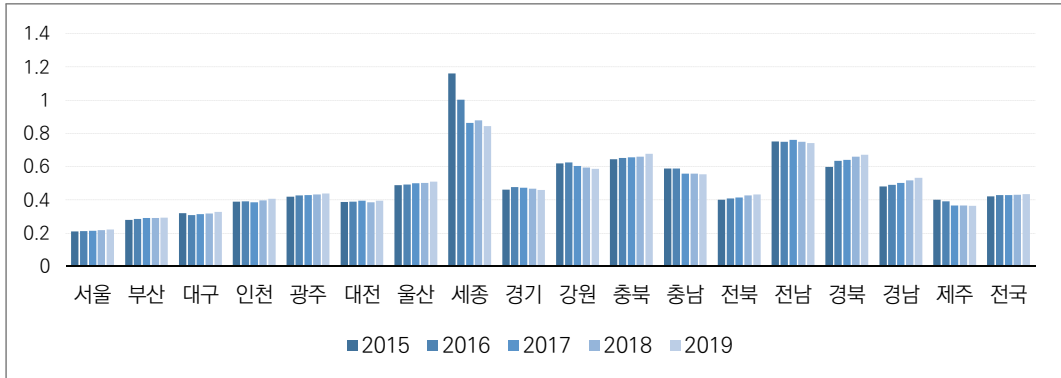
시군구별로 녹지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중구가 0.25%로 가장 낮았으며 동대문구가 2.6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8] 도시 용도 지역 녹지 비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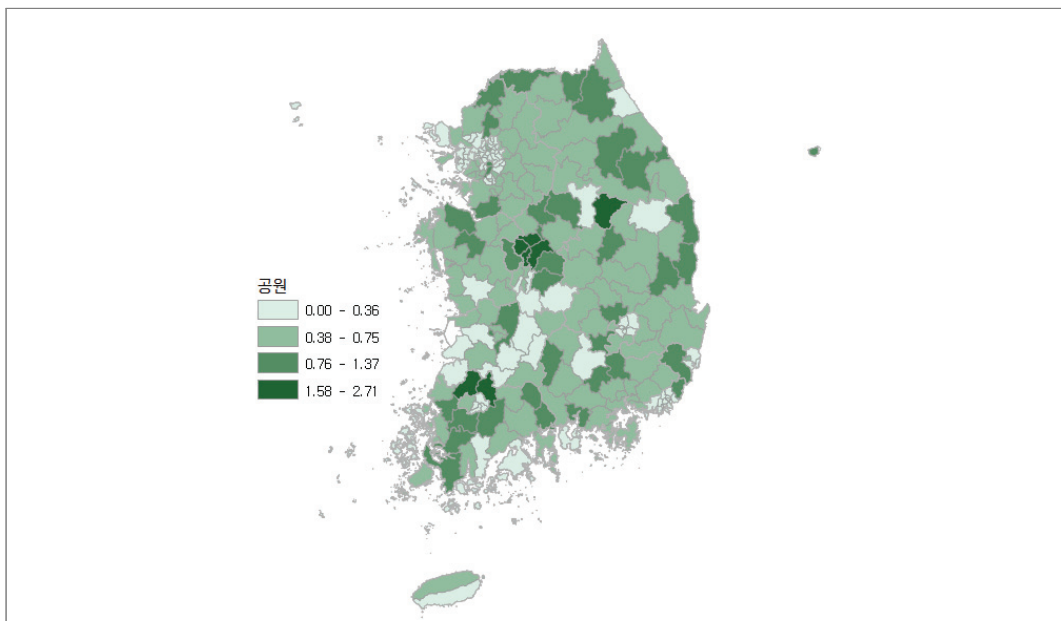
인구 천명당 공원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가장 높으며(0.8개, 2019 기준), 서울시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0.2개, 2019 기준).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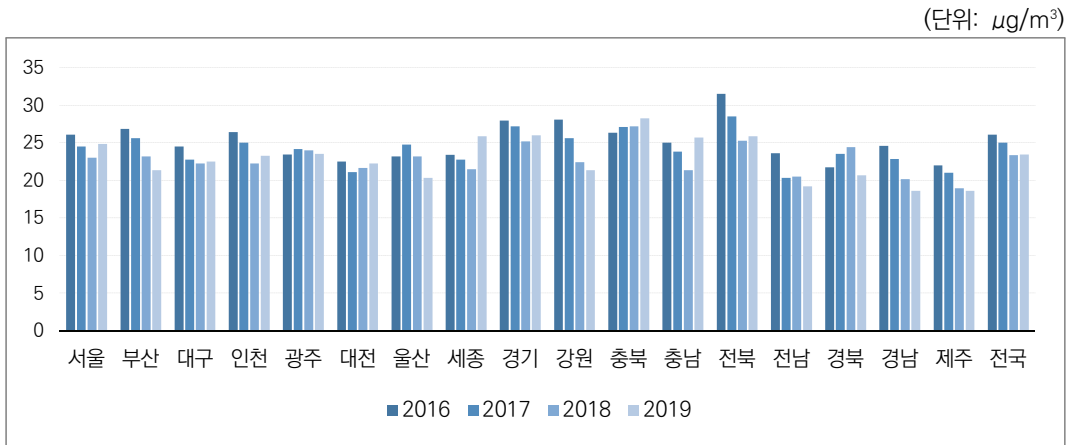
[그림 3-19] 인구 천명당 공원 수(2015-2019)

시군구별로 인구 천명당 공원수 지표를 살펴보면, 인천 중구(0.07개), 성북구(0.09개), 부산 동구(0.09개), 합천군(0.09개) 등이 공원이 적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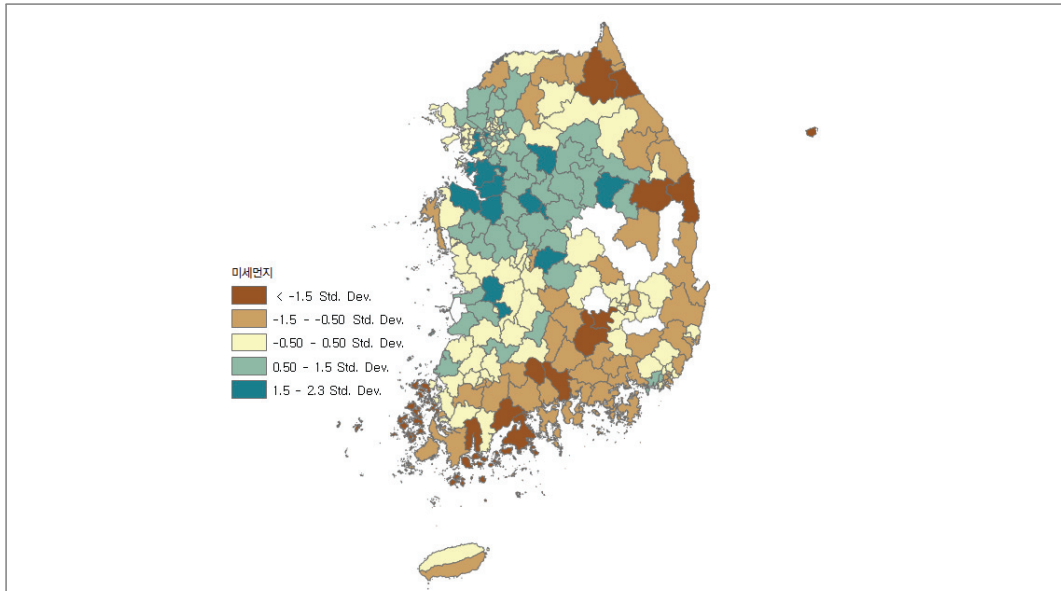
[그림 3-20] 인구 천명당 공원 수(2019)

미세 먼지 대기 오염도의 경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전북, 충북, 경기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미세 먼지(PM2.5) 대기 오염도(2016-2019)

미세 먼지 오염도에 대해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증평군, 당진시, 부천시, 아산시, 여주시, 익산시, 시흥시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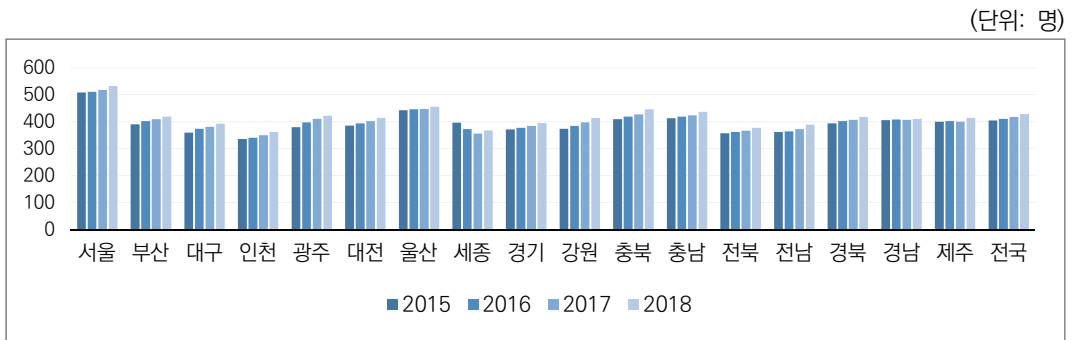


[그림 3-22] 미세 먼지(PM2.5) (2019)

4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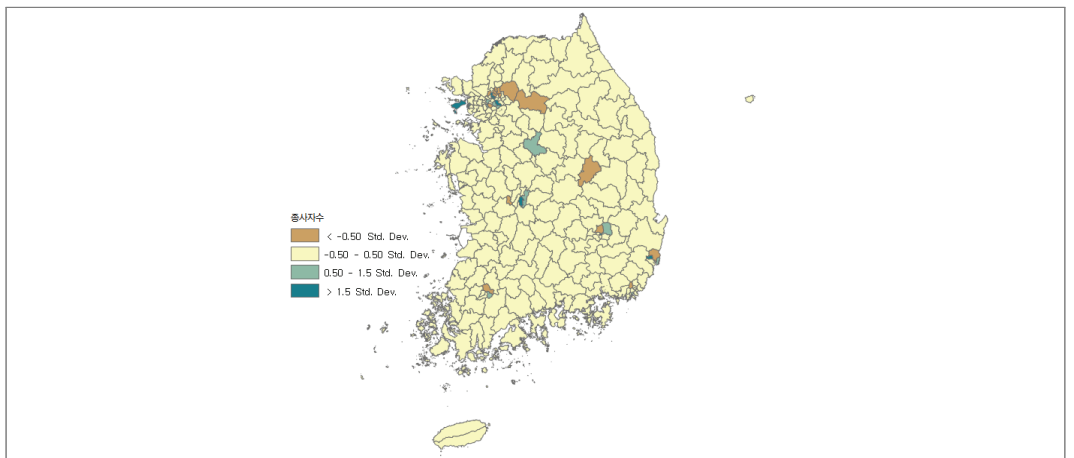
경제 영역은 해당 지역 거주민이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빈곤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지를 살펴본다. 경제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로는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상용직 비중’, ‘실업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등이다.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533.6명, 2018 기준)이 가장 높았다. 울산(456.1명, 2019 기준)의 경우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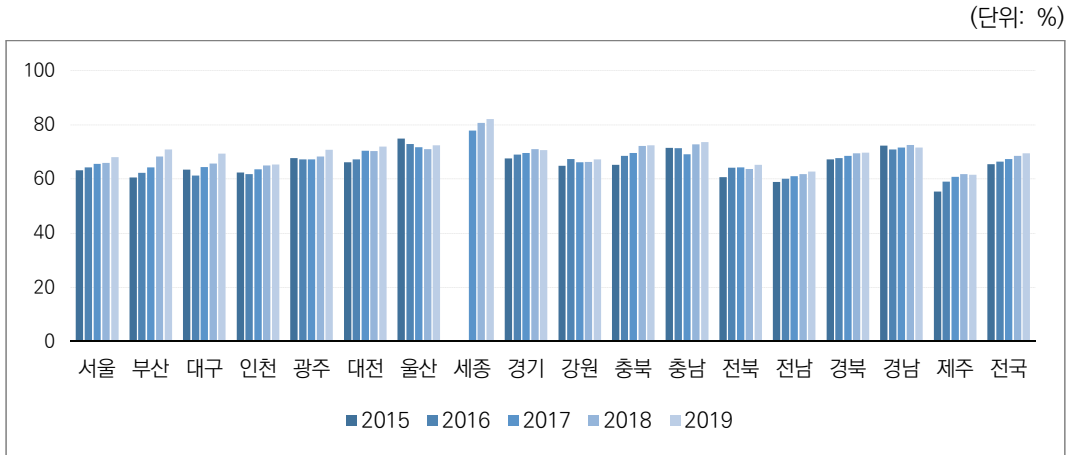
[그림 3-23]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2015-2018)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은평구(186.4명)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중구(3,106.2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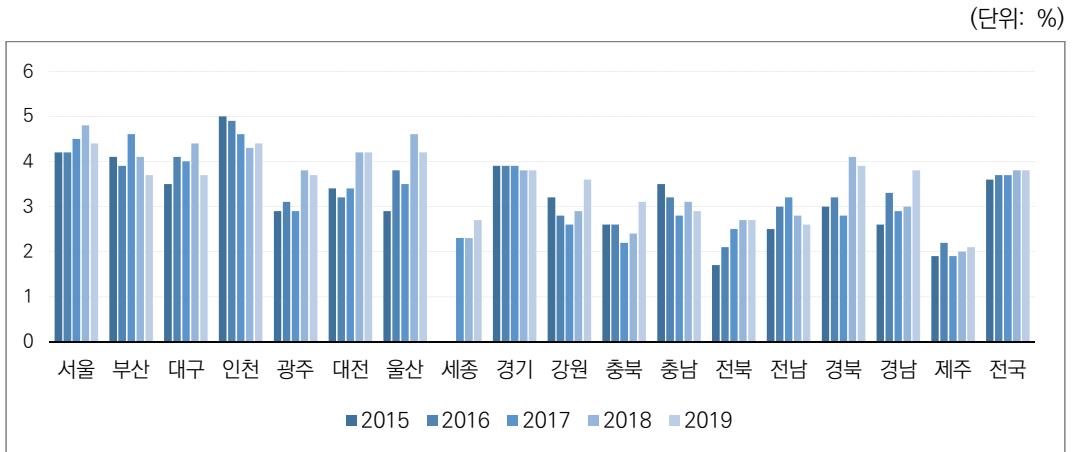
[그림 3-24]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2018)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2.2%)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울산을 제외하고는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3-25] 상용직 비중(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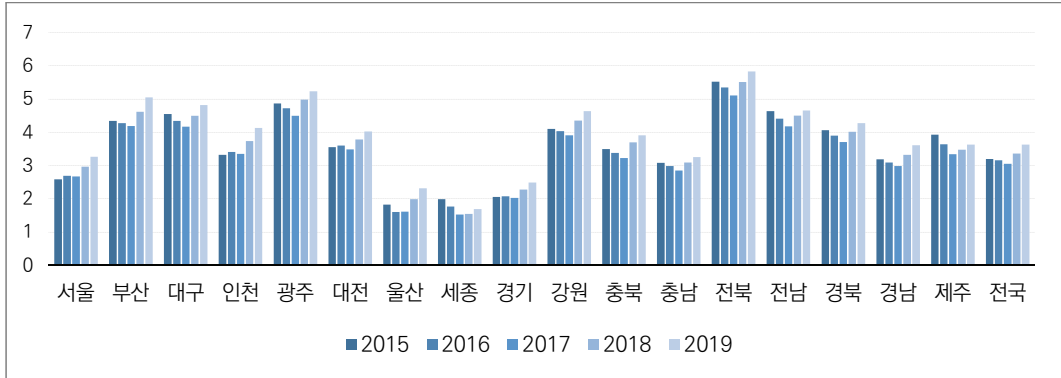
실업률을 살펴보면, 제주도(2.1%)가 가장 낮으며, 세종시(2.7%)와 전라북도(2.7%)역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26] 실업률(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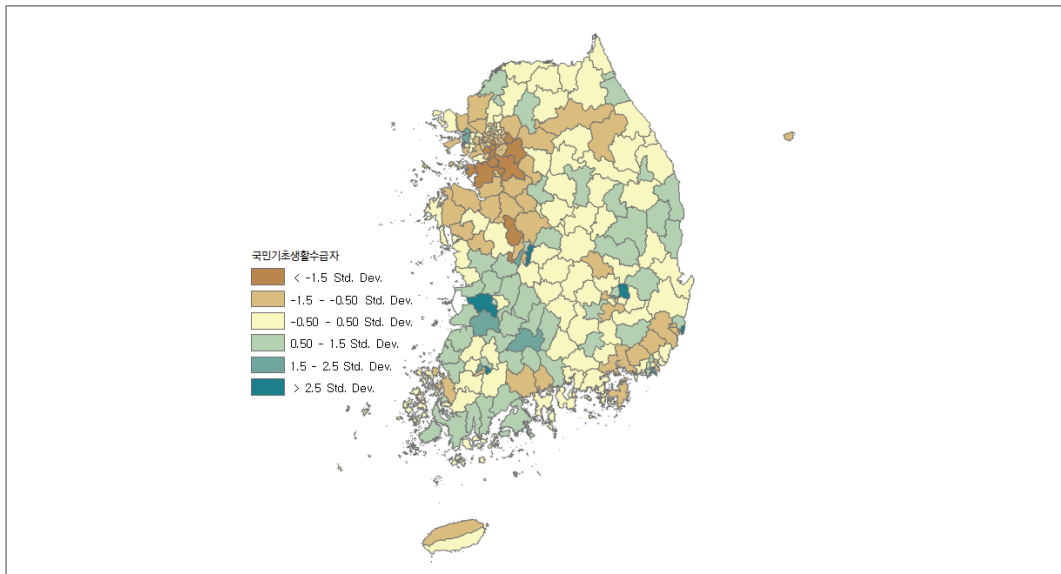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의 경우, 세종시(1.7%)와 울산시(2.3%), 경기도(2.4%)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3-27]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2015~2019)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부산 영도구(9.58%), 부산 동구(9.25%), 김제시(8.72%)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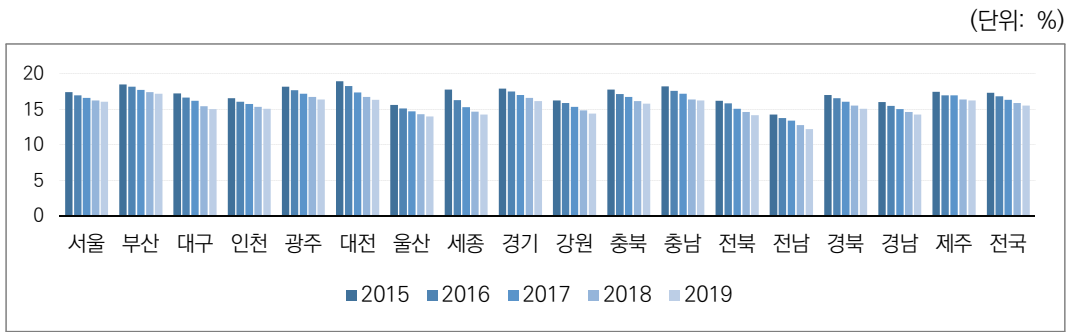


[그림 3-28]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5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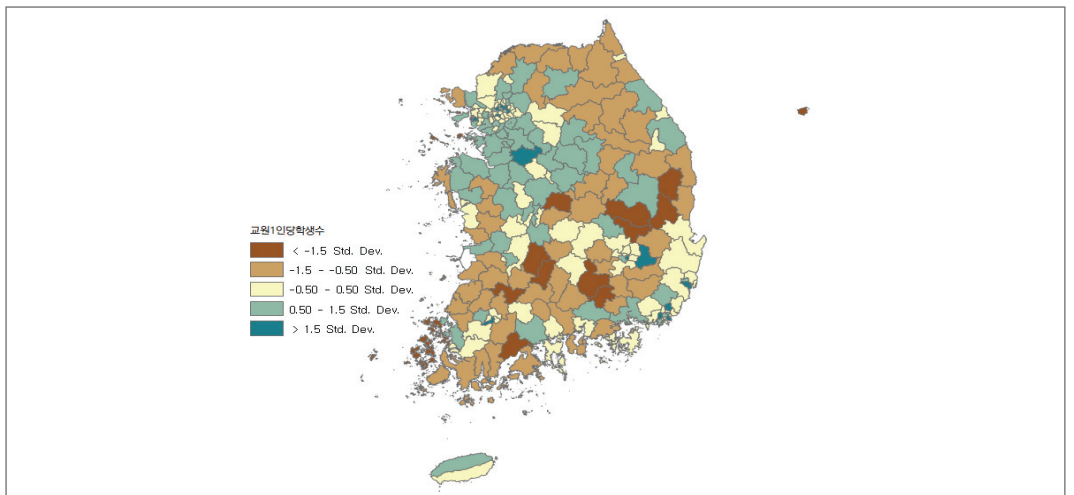
교육 영역은 사회 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5년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17.14명, 2019 기준)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20, 2019 기준)이다.



[그림 3-29] 교원 1인당 학생수(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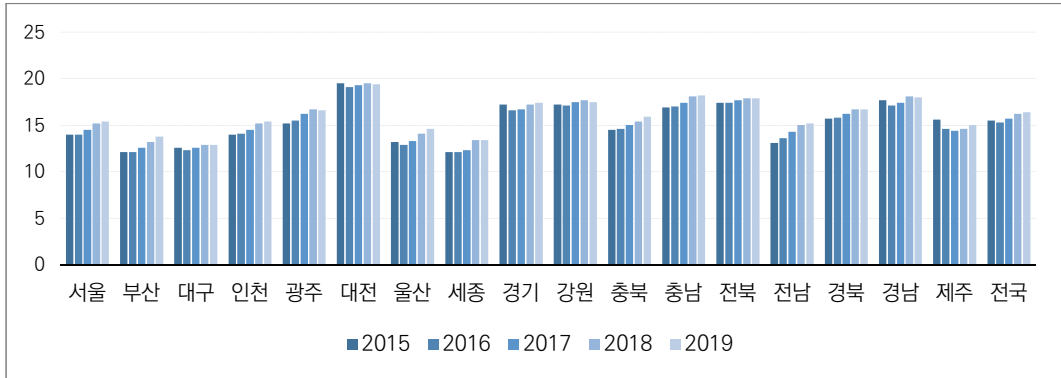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초 자치 단체는 경산시 24.56명, 광주 동구 24.44명, 부산 사상구 23.79명, 서울 동대문구 22.67명 등이다.



[그림 3-30] 교원 1인당 학생 수(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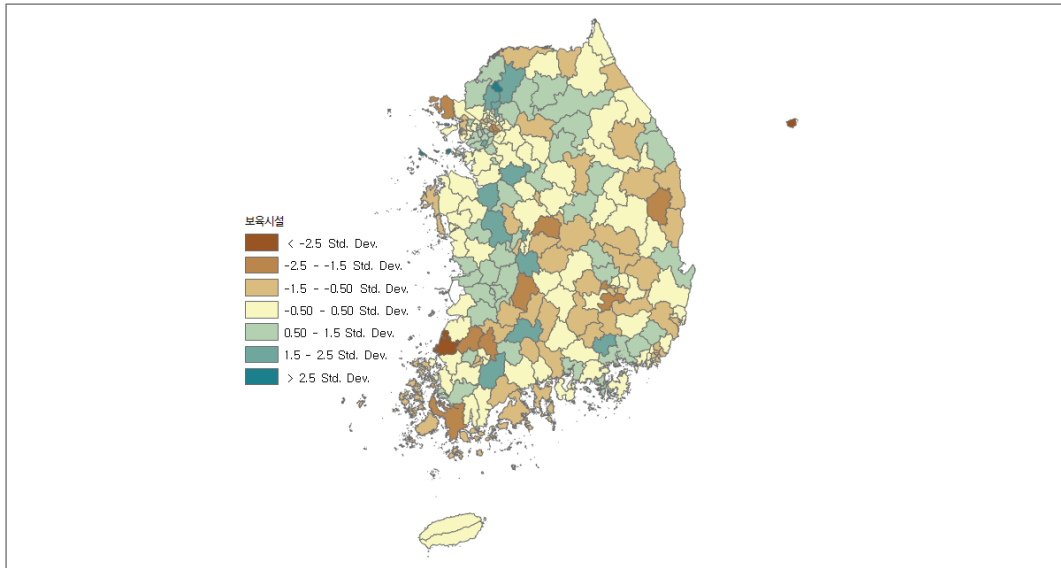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는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대구시가 12.9개로 가장 적으며, 대전시는 19.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그림 3-31]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2015-2019)

시군구별로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를 살펴보면, 울릉군 4.1개, 영광군 7.4개, 진안군 7.5개, 장성군 7.9개 등으로 이 지역들은 타 지역에 비해 보육 시설이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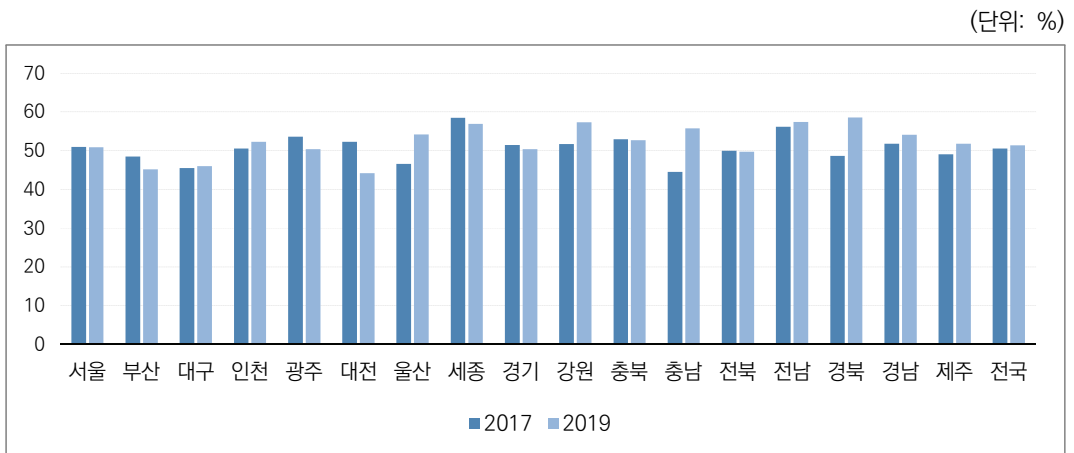
[그림 3-32]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2019)

6 관계 및 사회참여

관계 및 사회 참여 영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며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관계 및 사회 참여는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대인 관계 만족도,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의 여부를 통해 측정한다.

가. 주관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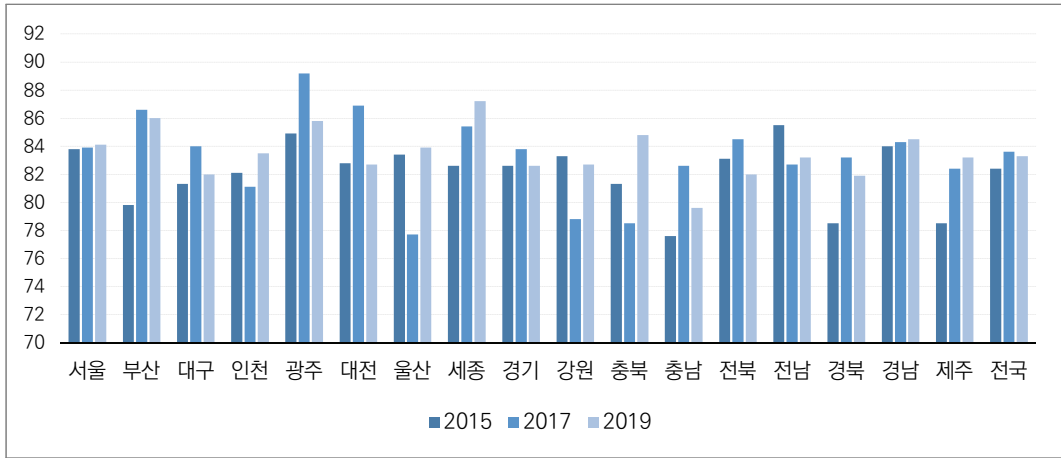
대인 관계 만족도의 경우, 2019년 기준 경북(58.6%), 전남(57.4%), 강원(57.3%) 등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3] 대인 관계 만족도(2017-2019)

사회 관계망을 측정하기 위해 살펴본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기준 세종시가 87.2%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86%, 광주 85.8% 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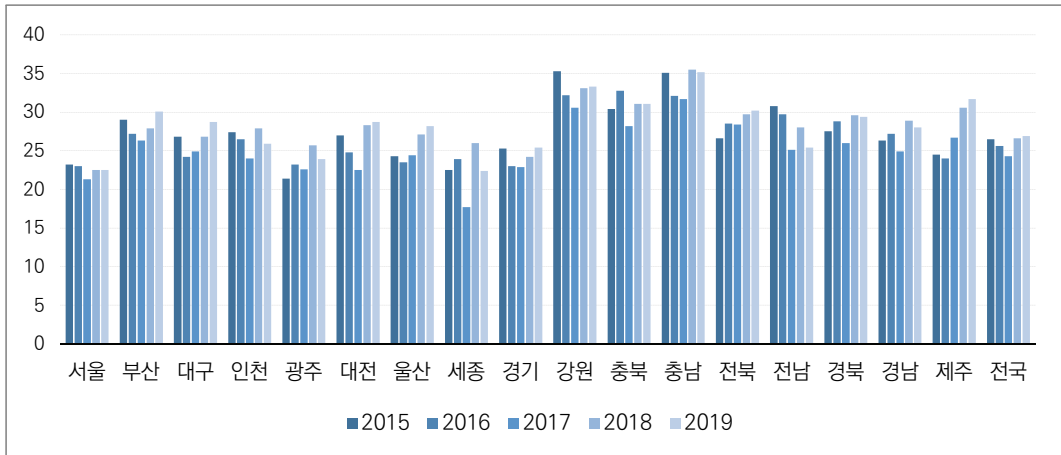


[그림 3-3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있음(2017-2019)

나. 객관적 지표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의 경우 충남(35.2%), 강원(33.3%)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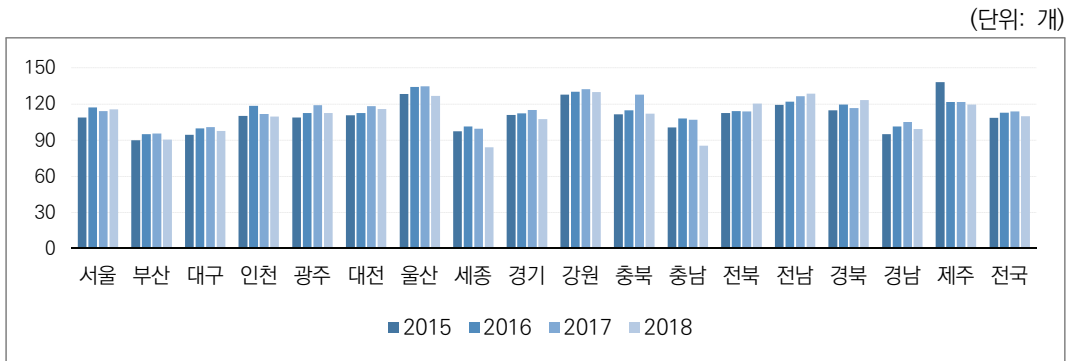


[그림 3-35]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2015-2019)

7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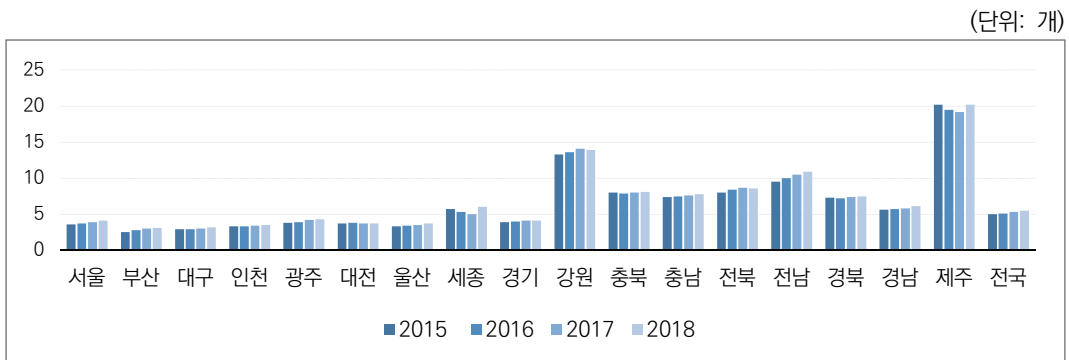
여가 영역은 일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문화적 삶을 향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여가 영역의 지표는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를 포함한다.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강원도(129.9개)가 가장 많았으며, 전남(128.6개), 울산(126.7개) 등이 많은 편이다. 반면, 세종(84개), 충남(85.4개)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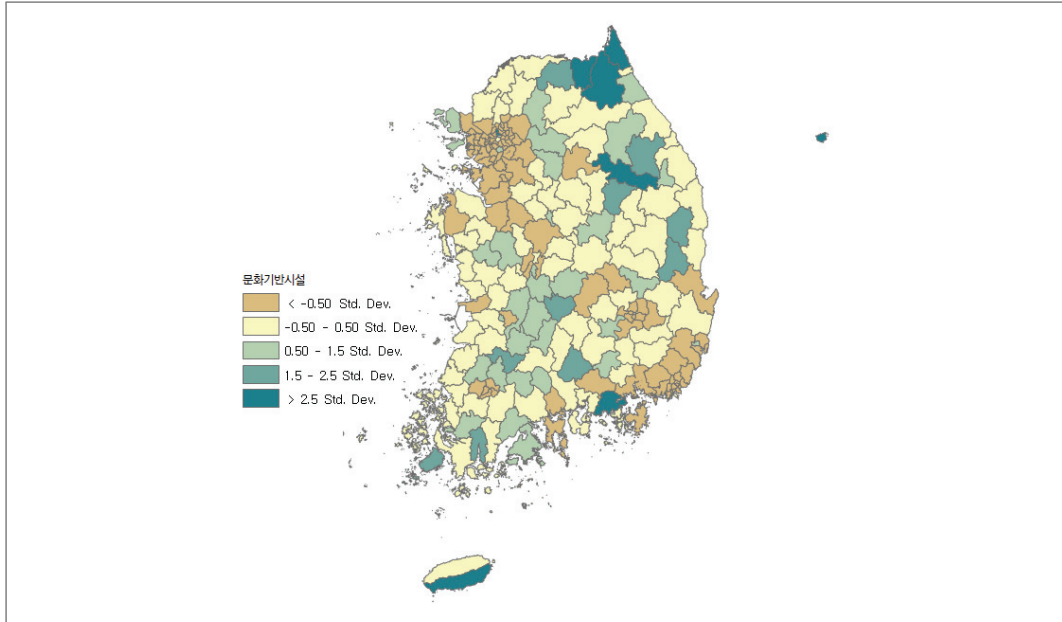
[그림 3-36]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2015~2018)

문화 기반 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을 포함하는 시설로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20.2개)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강원(13.9개)과 전남(10.9개)도 높은 편이다.



[그림 3-37]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2015~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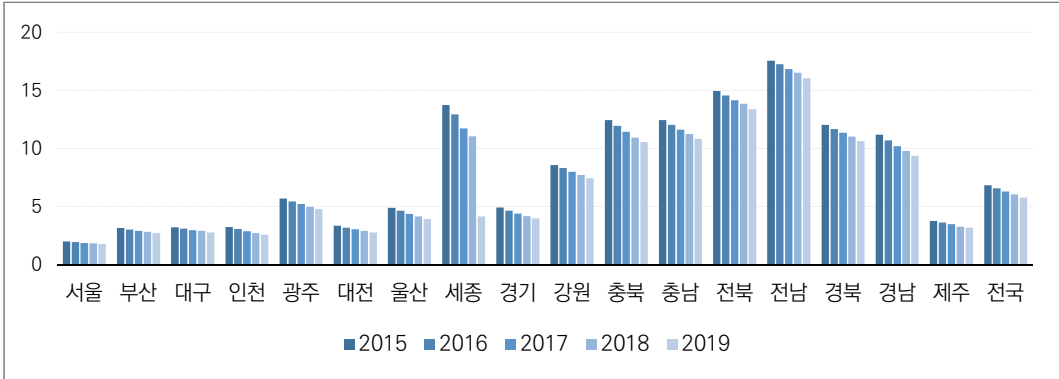
문화 기반 시설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중랑구(1.2개), 부산시 수영구(1.7개) 등이 적으며, 영월군(68개), 고성군(46.2개), 서울시 종로구(41.2개), 울릉군(40.7개), 양구군(38.4개), 서귀포시(38.1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8]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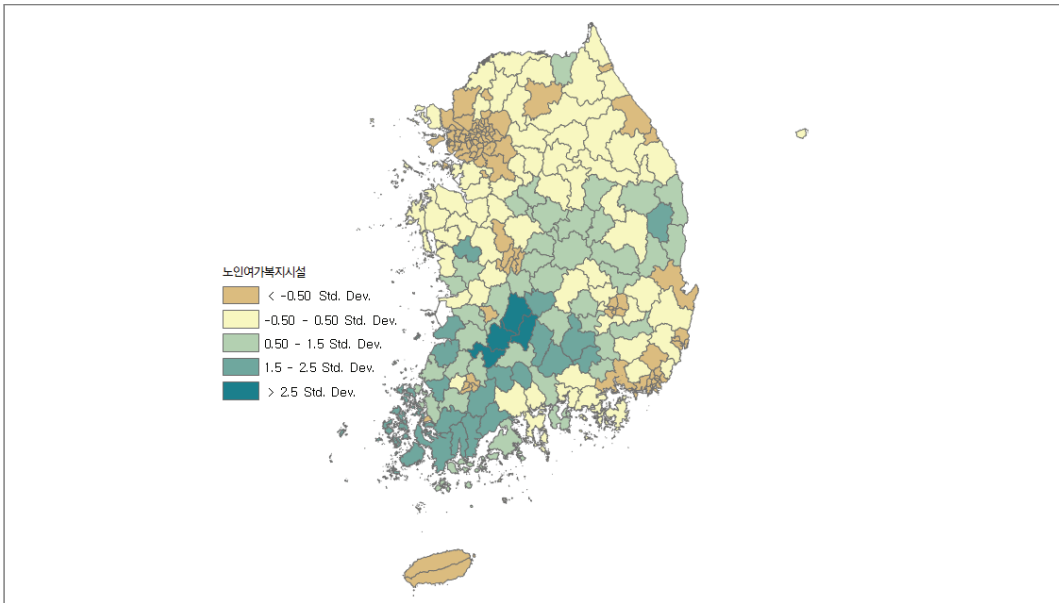
노인 천명당 여가 복지 시설 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화 추세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6.04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1.81개)로 나타났다.

(단위: 개)



[그림 3-39]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2015~2019)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적으며 순창군(31.5개), 진안군(29.7개), 장수군(29.1개), 임실군(27.9개) 등 호남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0]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2019)

제2절

영역별 분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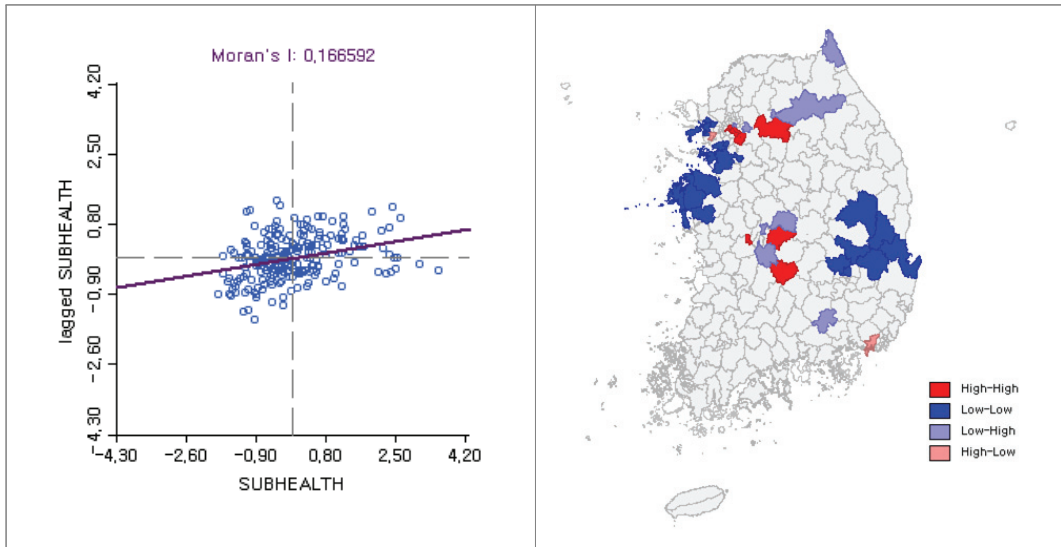
1 공간 분석

여기에서는 공간 자기 상관 이론과 공간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영역별 지표의 공간 분석과 시각화 절차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영역별 데이터가 갖는 공간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 자기 상관성은 영역별 지표 특성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지역 사회의 제반 현상은 공간상에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자기 상관의 탐색을 위한 분석지표로 각 영역별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국지적 모란 지수(Local Moran's I)를 활용한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을 적용해 국지적 공간 자기 상관의 유형화 및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모란 지수(Moran's I)'는 공간의 자기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모란 지수의 범위는 -1과 1 사이에 위치하며, -1과 1에 가까울수록 공간 상관성이 크고 0에 가까울수록 공간 상관성이 작음을 의미한다. 국지적 모란 지수(Local Moran's I)는 보다 국지화 시켜 특정 지역과 그 주변을 둘러싼 지역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주변 지역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을 찾는 방법(국토연구원, 2009)으로 이를 지도로 시각화할 수 있다. 즉, LISA 분석은 국지적 모란 지수(Local Moran's I) 통계량으로 공간 자기 상관 정도를 측정하고 클러스터 맵(cluster map)을 보여준다. LISA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p < 0.05$)을 지닌 지역에 대한 공간 통계 분석 방법으로, 일종의 군집 및 이상치(cluster and outlier)를 판별한다. LISA 분석을 통해 국지적 공간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높은 값이 높은 값과 인접해 있는 High-High(1사분면), 낮은 값이 낮은 값과 인접해 있는 Low-Low(3사분면), 낮은 값이 높은 값과 인접해 있는 Low-High(2사분면), 높은 값이 낮은 값과 인접해 있는 High-Low(4사분면) 등의 4가지 군집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Anselin et a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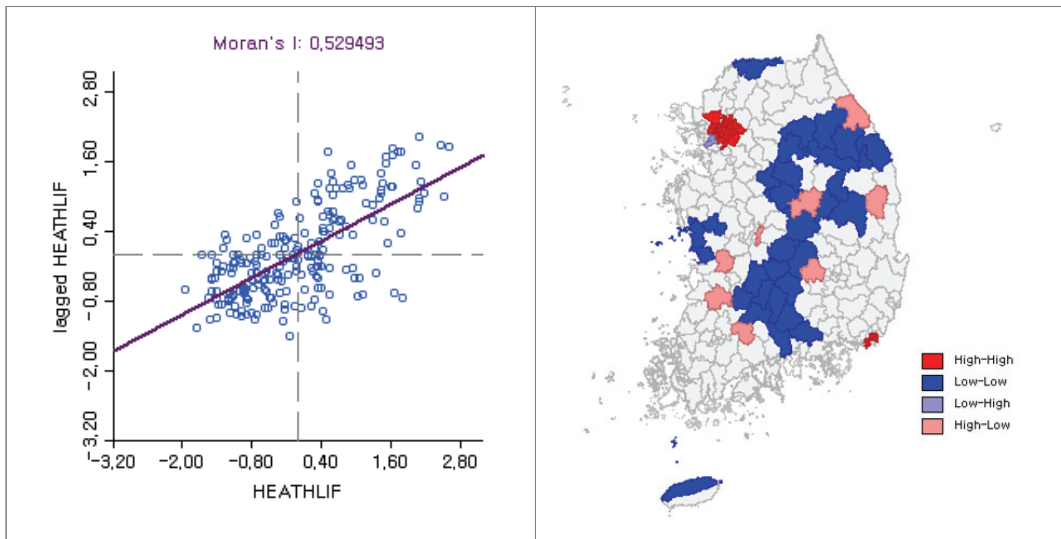
가. 건강 영역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의 모란 지수(Moran's I)는 0.166으로 공간 상관성은 낮은 편이다. LISA분석을 통해 유의수준 내(p-value=0.05) 군집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단위 공간과 그 주변 공간이 모두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이 높은 지역은 H-H(High-High) 유형으로 군집을 형성한다(짙은 빨간색). H-H 지역은 모두 9개 지역으로 용산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성남시, 양평군, 옥천군, 계룡시, 무주군이다. 또한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이 낮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19개 지역으로 대구 북구,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포항시, 안동시, 영천시, 군위군, 청송군, 칠곡군이다. 이에 반하여 단위 공간의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은 높지만 주변 공간은 낮은 H-L(High-Low) 유형은 부산 강서구, 인천 남동구 등 2개 지역이 나타났다. 그리고 단위 공간의 건강 수준 인지율은 낮지만 주변 공간은 높은 L-H(Low-High) 유형의 지역은 성동구, 대덕구, 하남시, 홍천군, 고성군, 보은군, 금산군, 의령군 등 8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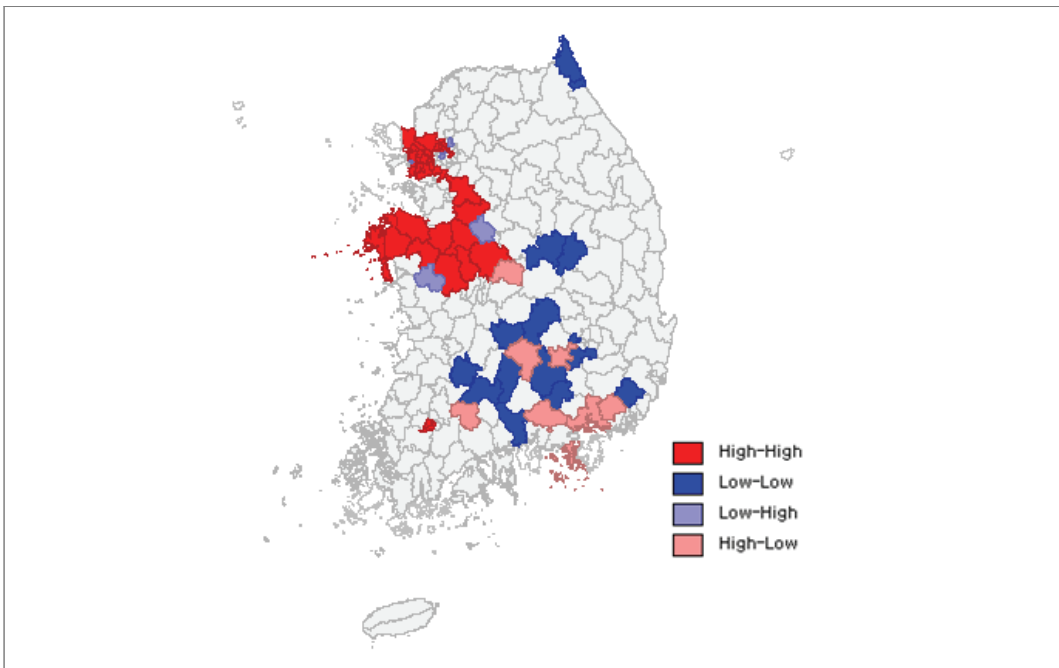
[그림 3-41]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 LISA 분석

건강 생활 실천율의 모란 지수는 0.529로 공간 상관성이 높은 편이다. 건강 생활 실천율에 대한 LISA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공간과 그 주변 공간이 모두 주관적 공간 수준 인지율이 높은 지역은 H-H(High-High) 유형으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등 40개 지역이다. 또한 건강 생활 실천율이 낮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충주시,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예천군,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시 등 32개 지역이다. 반면 이상치(outlier) 특성을 보이는 H-L(High-Low) 유형은 대전 동구, 강릉시 등이며, L-H(Low-High) 유형의 지역은 시흥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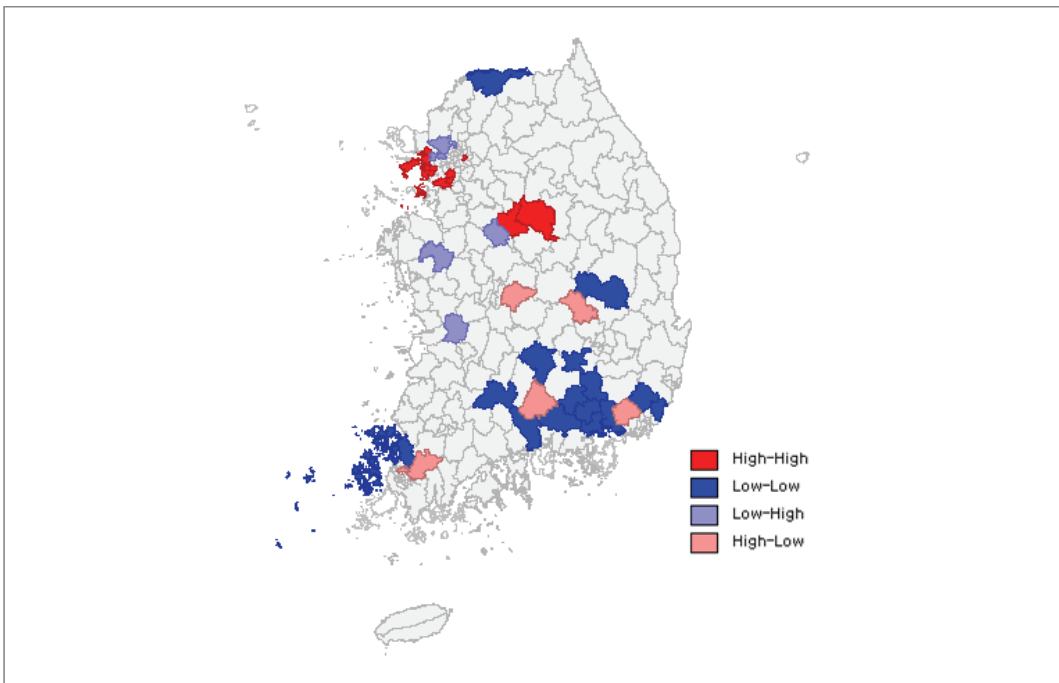
[그림 3-42] 건강 생활 실천 LISA 분석

스트레스 인지율의 모란 지수는 0.271이며, LISA 분석 결과는 그림과 같다. 단위 공간과 그 주변 공간이 모두 주관적 공간 수준 인지율이 높은 지역은 H-H(High-High) 유형으로 군집을 형성하는데,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 서구, 남구, 세종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시흥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등이 이러한 유형이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대구 달성군, 속초시, 고성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김천시, 문경시, 예천군, 양산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다. 이에 반하여 단위 공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높지만 주변 공간은 낮은 H-L(High-Low) 유형의 지역은 보은군, 곡성군, 고령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창군이며, 반대로 단위 공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낮지만 주변 공간은 높은 L-H(Low-High) 유형의 지역은 서울 중구, 용산구, 노원구, 인천 동구, 진천군, 청양군이다.



[그림 3-43] 스트레스 L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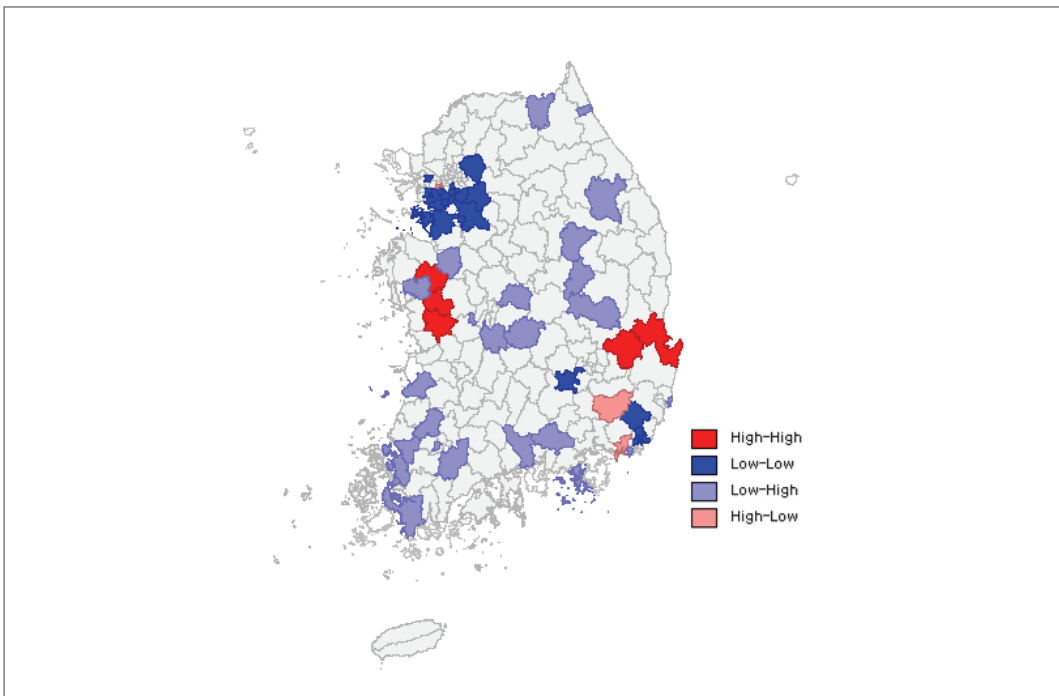
우울감 경험률의 모란 지수는 0.134로 공간 상관성은 낮은 편이며, LISA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단위 공간과 그 주변 공간이 모두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지역은 H-H(High-High) 유형으로, 광진구,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충주시, 음성군이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이 낮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기장군, 철원군, 남원시, 무안군, 신안군, 의성군, 고령군,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이다. 반면, 단위 공간의 우울감 경험률은 높지만 주변 지역은 낮은 H-L(High-Low) 옥천군, 영암군, 구미시, 김해시, 산청군이며, 반대인 L-H(Low-High) 유형의 지역은 서울 강서구, 계양구, 고양시, 진천군, 예산군, 익산시이다.



[그림 3-44] 우울감 L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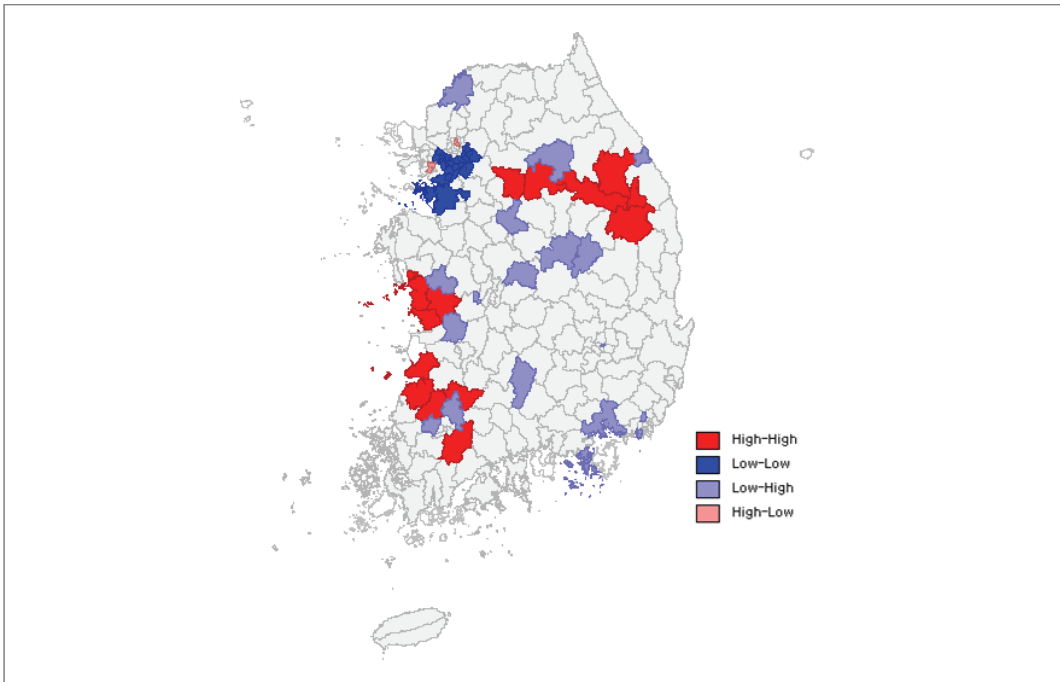
나. 안전 영역

아래의 그림은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등급에 대한 LISA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교통사고 안전 등급은 값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을 의미한다(0: 안전). 교통사고에 취약해 안전 등급이 높은 H-H(High-High) 유형은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포항시, 영천시이다. 또한 교통사고 안전 등급이 낮은 지역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금천구, 서초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남동구, 계양구,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고령군, 양산시 등이다. 반면, 단위 공간의 교통사고 안전 등급은 낮지만 주변 지역은 높은 L-H(Low-High) 유형은 사하구, 인천 서구, 울산 동구, 속초시, 정선군, 양구군,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홍성군, 부안군, 목포시, 화순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의성군, 예천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이며, 그 반대인 H-L(High-Low) 지역은 구로구, 부산 강서구, 밀양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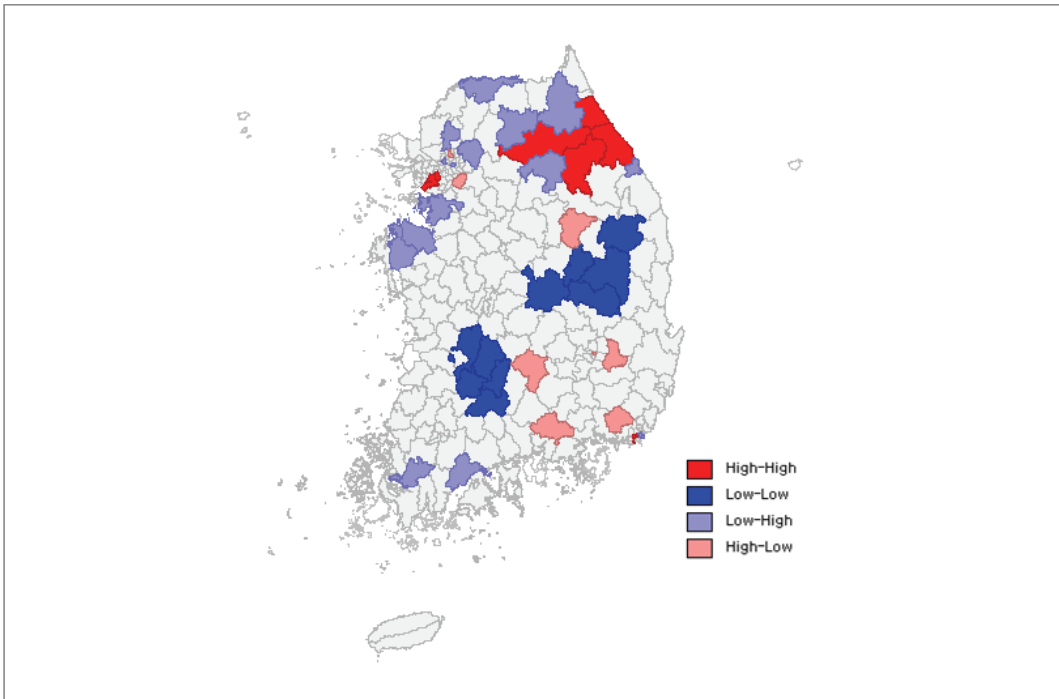
[그림 3-45] 교통사고 LISA 분석

화재 안전 등급은 아래의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다. 화재 안전 등급은 값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의미하는데(0: 안전), 등급이 높은 H-H(High-High) 유형은 여주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화순군, 장성군, 봉화군이다. 또한 화재 안전 등급이 낮은 지역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이다. 반면, 단위 공간의 화재 안전 등급은 낮지만 주변 지역은 높은 L-H(Low-High) 유형은 부산 북구, 사하구, 대구 중구, 광산구, 연천군, 동해시, 횡성군, 보은군, 음성군, 계룡시, 청양군, 익산시, 담양군, 문경시, 예천군, 창원시, 통영시, 함양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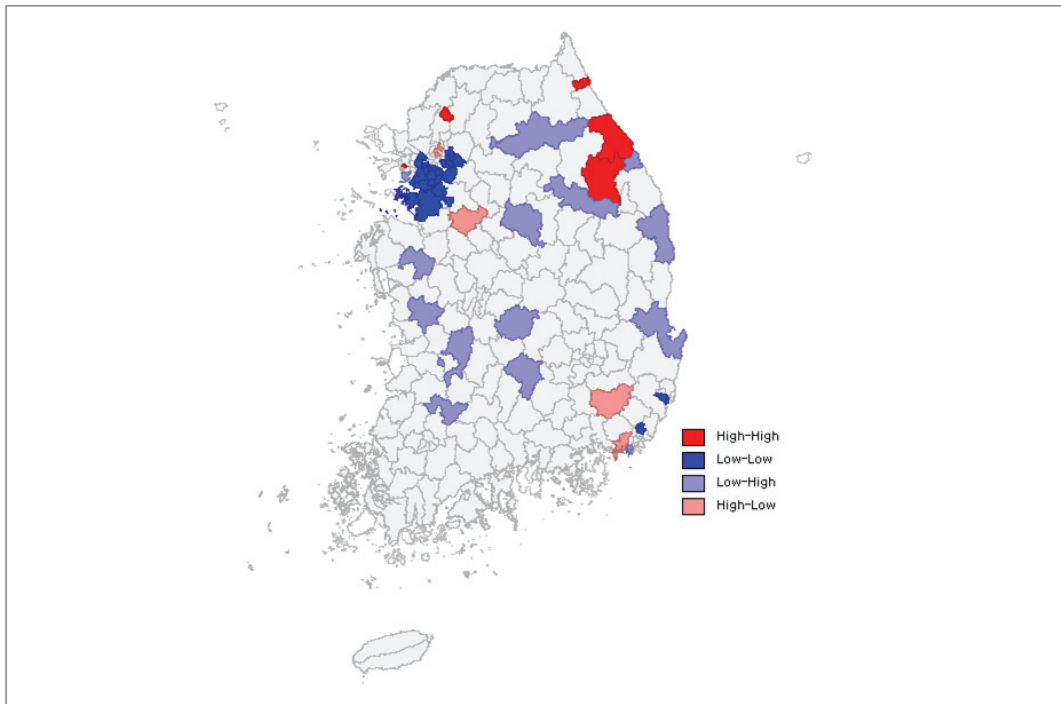
[그림 3-46] 화재 LISA 분석

범죄 안전 등급을 살펴보면, 등급이 높은 H-H(High-High) 유형은 부산 서구, 동구, 광명시, 시흥시, 강릉시, 홍천군, 평창군, 양양군이다. 또한 범죄 안전 등급이 낮은 지역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이다. 반면, 단위 공간의 범죄 안전 등급은 낮지만 주변 지역은 높은 L-H(Low-High) 유형은 성동구, 서대문구, 부산 남구, 남양주시, 화성시, 양주시, 춘천시, 동해시, 횡성군, 철원군, 인제군, 서산시, 당진시, 보성군, 영암군이며, 그 반대인 H-L(High-Low) 지역은 강북구, 대구 중구, 성남시, 단양군, 경산시, 진주시, 김해시, 거창군이다.



[그림 3-47] 범죄 L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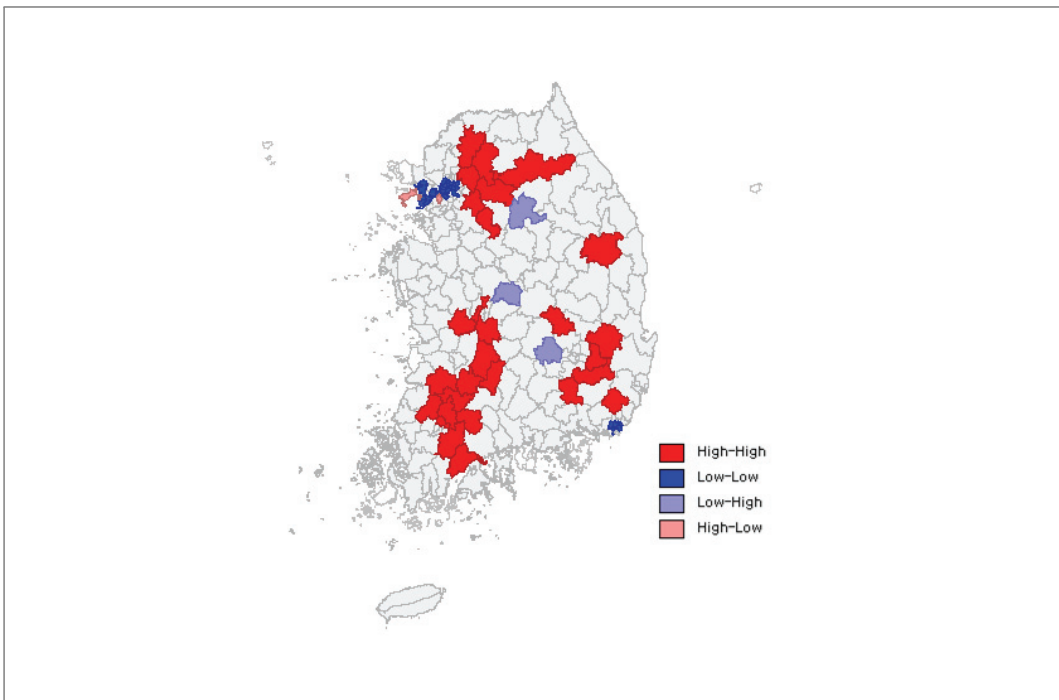
생활 안전 등급을 살펴보면, 등급이 높은 H-H(High-High) 유형은 인천 동구, 동두천시, 강릉시, 속초시, 정선군이며, 등급이 낮은 L-L(Low-Low) 유형은 광진구, 중랑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금정구, 울산 남구,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다. 단위 공간의 범죄 안전 등급은 낮지만 주변 지역은 높은 L-H(Low-High) 유형은 사하구, 연수구, 동해시, 홍천군, 영월군, 충주시, 영동군, 부여군, 예산군, 완주군, 순창군, 포항시, 울진군, 거창군이며, 그 반대인 H-L(High-Low) 지역은 종로구, 강북구, 부산 강서구, 안성시, 밀양시이다.



[그림 3-48] 생활 안전 L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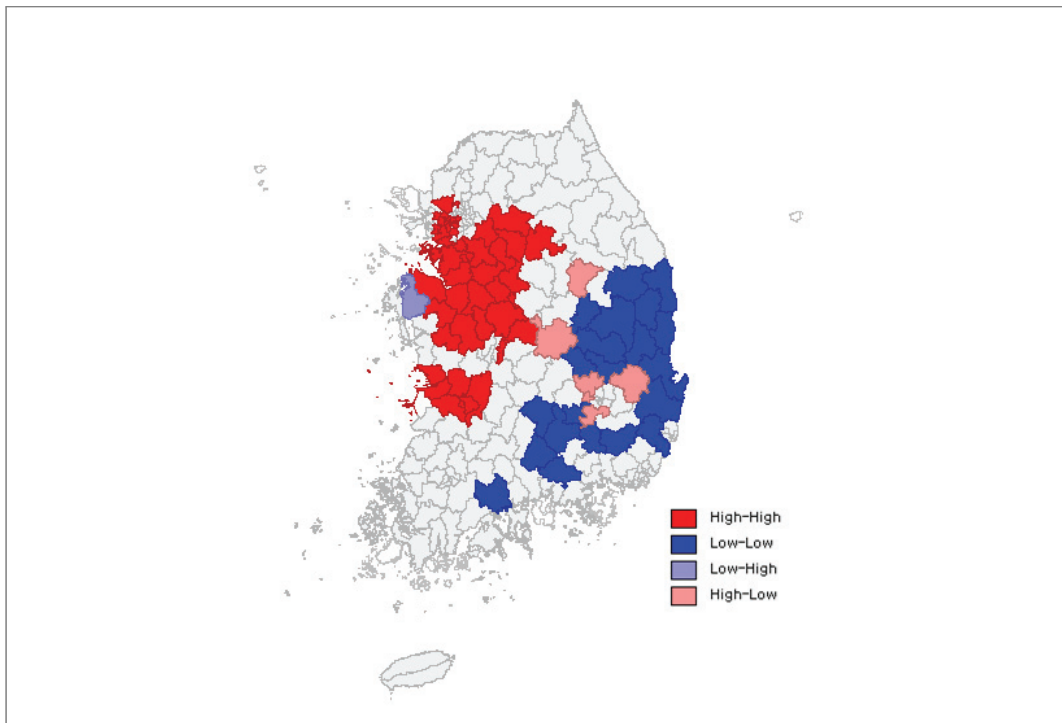
다. 환경 영역

녹지 지역의 모란 지수는 0.472로 공간 상관성은 높은 편이며 LISA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녹지 비율이 높은 군집 지역을 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 광주 북구, 대전 서구, 대덕구, 남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논산시, 금산군, 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담양군,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장성군,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양산시, 창녕군이다. 또한 녹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부산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부천시이다. 반면, 단위 공간의 녹지 비율은 낮지만 주변 지역은 높은 L-H(Low-High) 유형은 원주시, 보은군, 성주군이며, 그 반대인 H-L(High-Low) 지역은 인천 중구, 광명시이다.



[그림 3-49] 녹지 지역 L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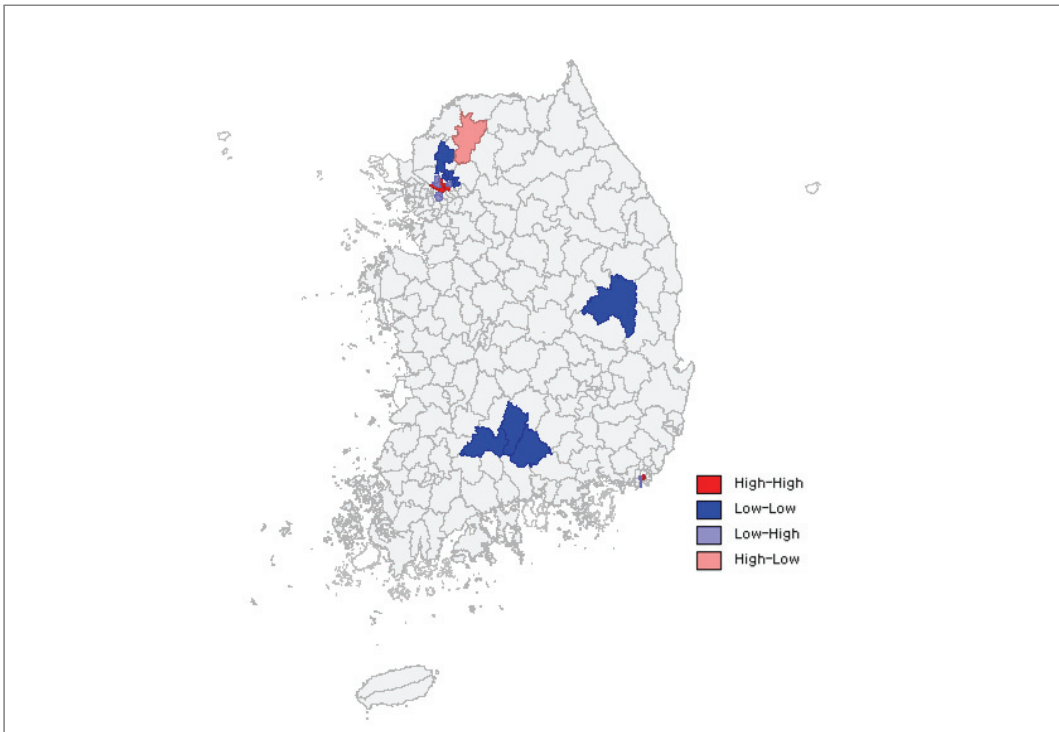
미세 먼지 대기 오염도의 Moran 지수는 0.411로 공간 상관성은 높은 편이며 LISA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세 먼지 대기 오염도가 높은 군집 지역인 H-H(High-High) 유형은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인천 남동구, 계양구, 대전 동구, 세종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오산시, 시흥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원주시,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이다. 또한 미세 먼지 오염도가 낮은 지역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울주군, 순천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진주시, 밀양시, 창녕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이다.



[그림 3-50] 미세 먼지 L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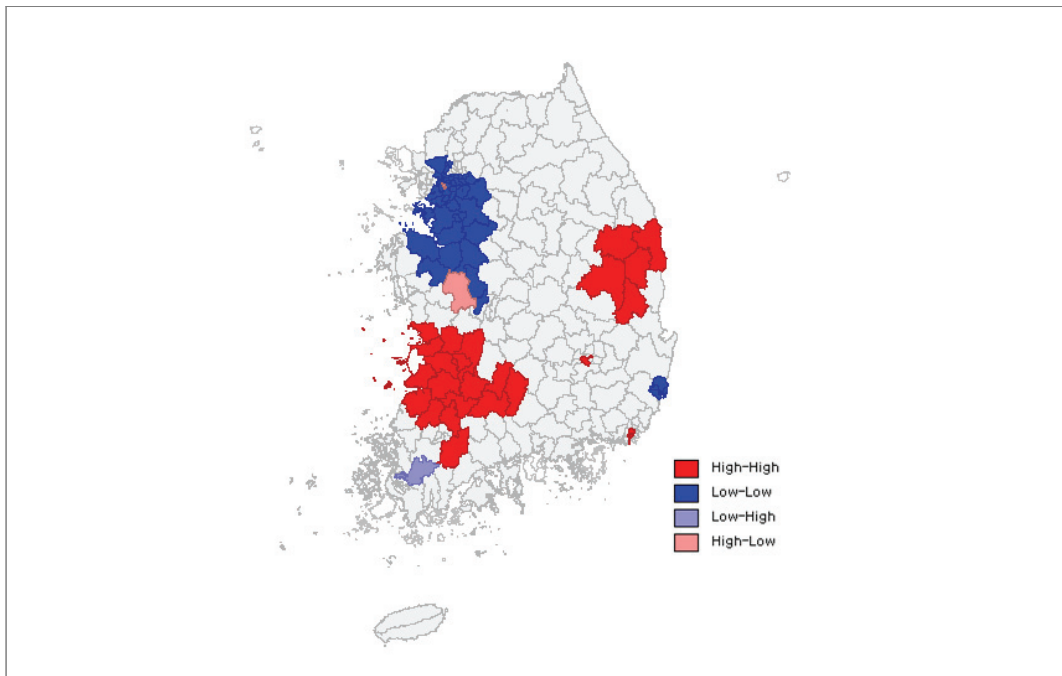
라. 경제 영역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의 모란 지수는 0.133이며 LISA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군집 지역을 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부산 동구이다. 또한 종사자 수 비율이 낮은 지역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구리시, 양주시, 남원시, 안동시, 산청군, 함양군이다. 반면, 해당 지역의 종사자 수 비율은 낮지만 주변 지역은 높은 L-H(Low-High) 유형은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부산 서구이며, 그 반대인 H-L(High-Low) 지역은 포천시이다.



[그림 3-51] 종사자 수 L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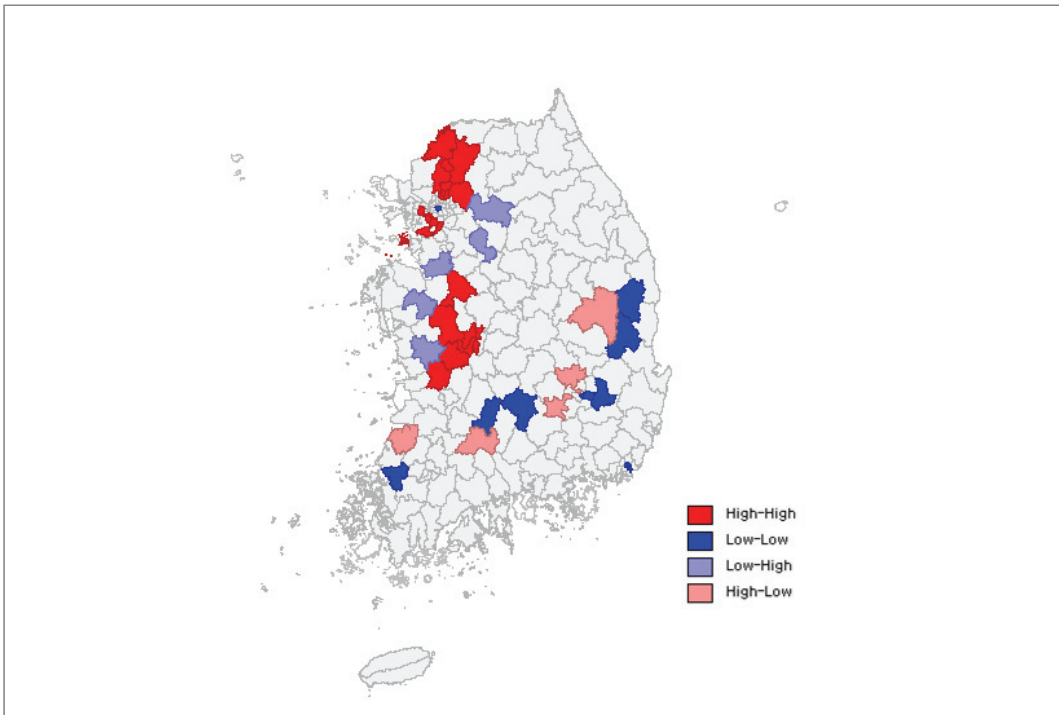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의 Moran 지수는 0.498로 자기 상관성이 높은 편이다. LIS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중이 높은 군집 지역을 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 부산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대구 중구, 달서구, 서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함양군이다. 또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서울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세종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이다. 반면, 해당 지역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은 낮지만 주변 지역은 높은 L-H(Low-High) 유형은 영암군이며, 그 반대인 H-L(High-Low) 지역은 금천구, 공주시이다.



[그림 3-52]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L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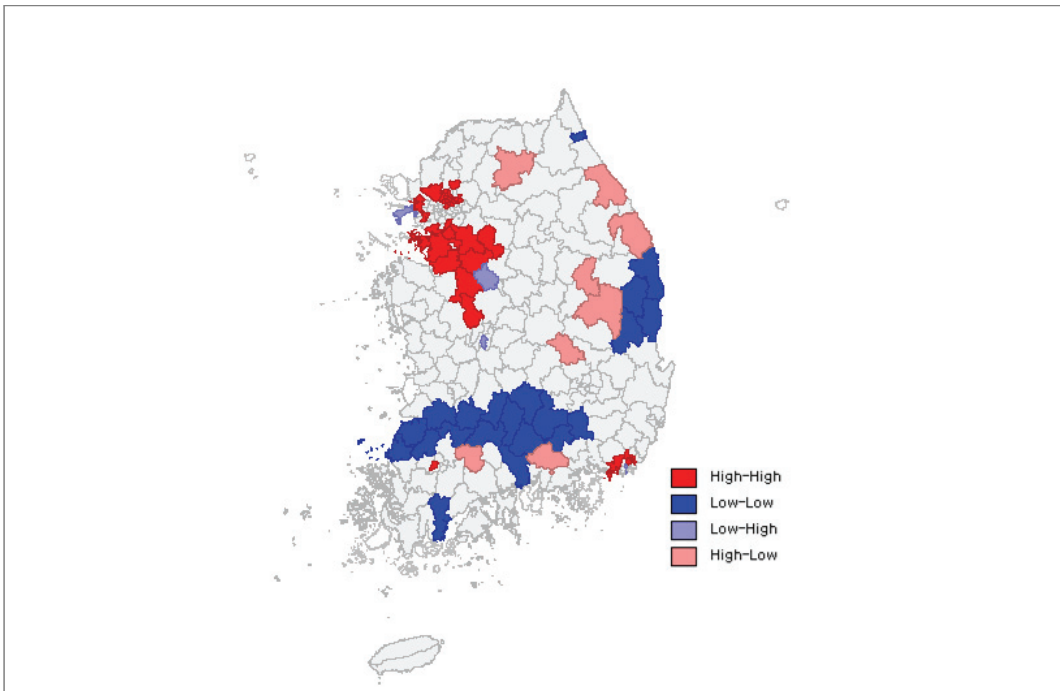
마. 교육 영역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의 모란 지수는 0.215이며, LIS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 시설 수가 많은 군집 지역을 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의왕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익산시이다. 또한 유아 수에 비해 보육 시설 수가 적은 지역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용산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 남구, 수성구, 장수군, 함평군,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거창군이다.



[그림 3-53] 보육 시설 L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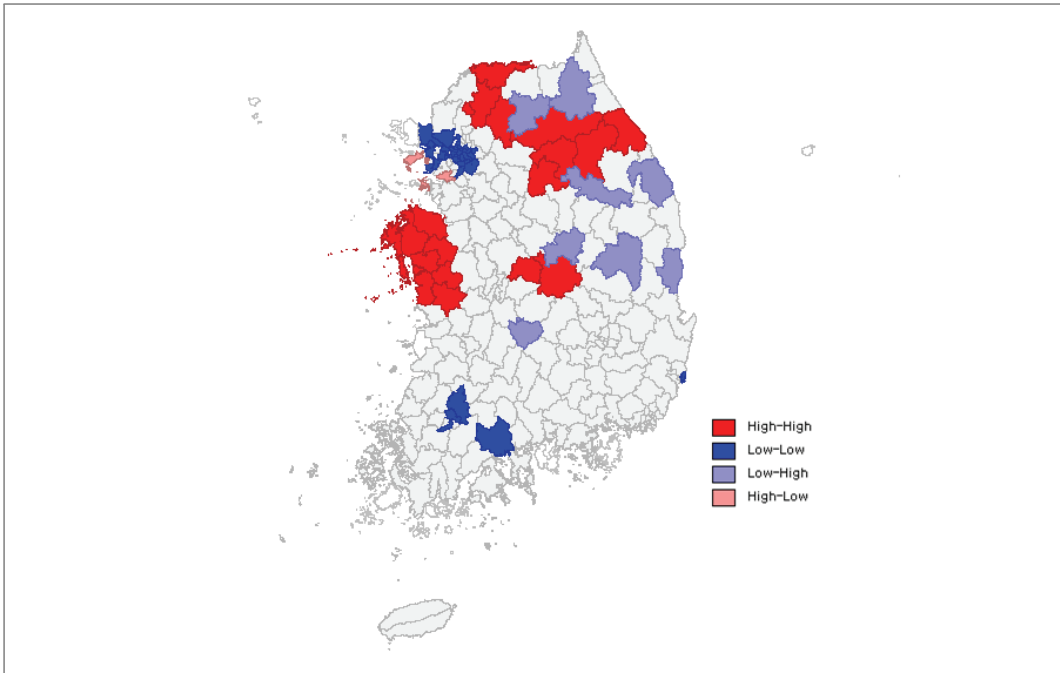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모란 지수는 0.283이며, LIS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높은 군집 지역을 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인천 남동구, 서구, 광주 서구, 세종시, 수원시, 의정부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천안시이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속초시,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장흥군, 영광군, 장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이다. 반면, 해당 지역의 학생 수는 낮지만 주변 지역은 높은 L-H(Low-High) 유형은 부산 서구, 인천 중구, 대전 중구, 진천군이며, 그 반대인 H-L(High-Low) 지역은 춘천시, 강릉시, 삼척시, 곡성군,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진주시이다.



[그림 3-54] 교원 1인당 학생수 LISA 분석

바. 관계 및 사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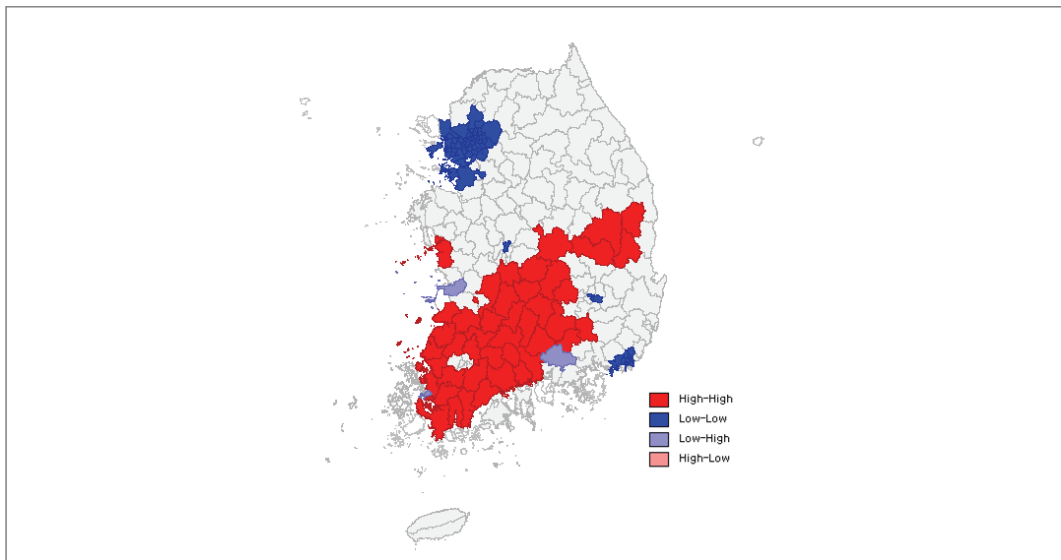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의 모란 지수는 0.258이며, LIS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살률이 높은 군집 지역을 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보은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상주시이다. 또한 자살률이 낮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 동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광주 남구, 북구, 울산 동구,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과천시, 의왕시, 김포시, 순천시, 담양군이다. 반면, 해당 지역의 자살률은 낮지만 주변 지역은 높은 L-H(Low-High) 유형은 춘천시, 삼척시, 영월군, 인제군, 무주군, 안동시, 문경시, 영덕군이며, 그 반대인 H-L(High-Low) 지역은 인천 중구, 안산시이다.



[그림 3-55] 자살률 LISA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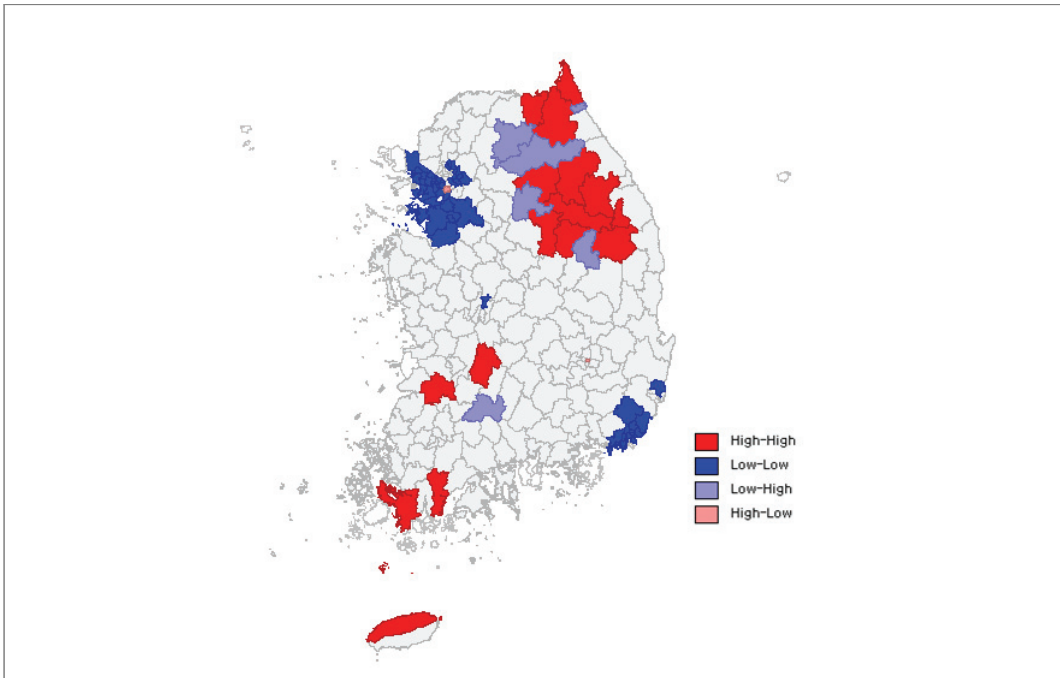
사. 여가 영역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의 모란 지수는 0.722로 공간 상관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LIS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 여가 복지 시설수가 높은 군집 지역을 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 영동군, 보령시, 금산군,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다. 또한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 낮은 지역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서울시 전지역(25개구), 부산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덕구,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이다. 반면, 해당 지역의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은 낮지만 주변 지역은 높은 L-H(Low-High) 유형은 군산시, 목포시, 진주시이다.



[그림 3-56] 노인 여가 복지 시설 LISA 분석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의 Moran 지수는 0.333이며 LISA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 기반 시설이 높은 군집 지역을 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제천시, 단양군, 정읍시, 진안군, 장흥군, 해남군, 봉화군, 제주시이다. 또한 문화 기반 시설이 낮은 지역은 L-L(Low-Low) 유형의 군집 지역은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인천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덕구, 울산 북구,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양산시이다. 반면, 해당 지역의 문화 기반 시설은 낮지만 주변 지역은 높은 L-H(Low-High) 유형은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 남원시, 영주시이며, 그 반대인 H-L(High-Low) 유형은 대구 중구, 과천시이다.



[그림 3-57] 문화 기반 시설 LISA 분석

2 상관관계 분석

전국 시군구별로 수집한 행복 지표들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가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이들 변수들의 평균, 표준 편차 등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 주요 지표의 기술 통계량

영역	변인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건강	건강 수준 인지	229	42.80	7.224
	건강 생활	229	28.924	9.8328
	스트레스	229	24.753	4.3754
	우울감 경험	229	5.538	2.0872
안전	교통사고	226	3.01	1.141
	화재	226	3.01	1.141
	범죄	226	3.01	1.135
	생활 안전	226	3.01	1.141
환경	녹지 지역	229	64.7466	21.24100
	미세 먼지	220	22.5519	3.99943
경제	종사자 수	229	436.767	261.1013
	기초 생활 수급자	229	4.3721	1.54486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229	12.6800	4.43178
	보육 시설	229	15.714	3.3499
관계 및 사회 참여	자살률	228	29.732	8.7825
여가	문화 기반 시설	229	10.300	9.3336
	노인 여가 복지 시설	229	9.28	7.445

행복 지표들 간 상관성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우울감은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간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p < .001$)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건강 수준 인지율과 음의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와 스트레스 간의 상관성도 유의미하게 나타나($p < .01$) 범죄 등급이 높은 지역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 먼지는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p < .001$) 미세 먼지 오염이 높은 지역일수록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은 건강 생활 실천율, 스트레스, 미세 먼지와 각각 음의 상관성($p < .001$)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인지율, 교통사고, 화재와 양의 상관성($p < .001$)을 나타냈다.

자살률은 건강 생활 실천율과 음의 상관관계($p < .001$), 화재, 생활 안전과 양의 상관관계($p < .001$),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p < .001$)를 보였다. 즉,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건강 생활 실천이 낮으며, 화재와 생활 안전 등급이 높아 취약하며,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문화 기반 시설(도서관, 박물관, 기타 지역 문화 시설)은 건강 생활 실천율, 스트레스, 우울감 등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으며(각각 $p < .001$), 녹지 지역,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와 양의 상관성(각각 $p < .001$)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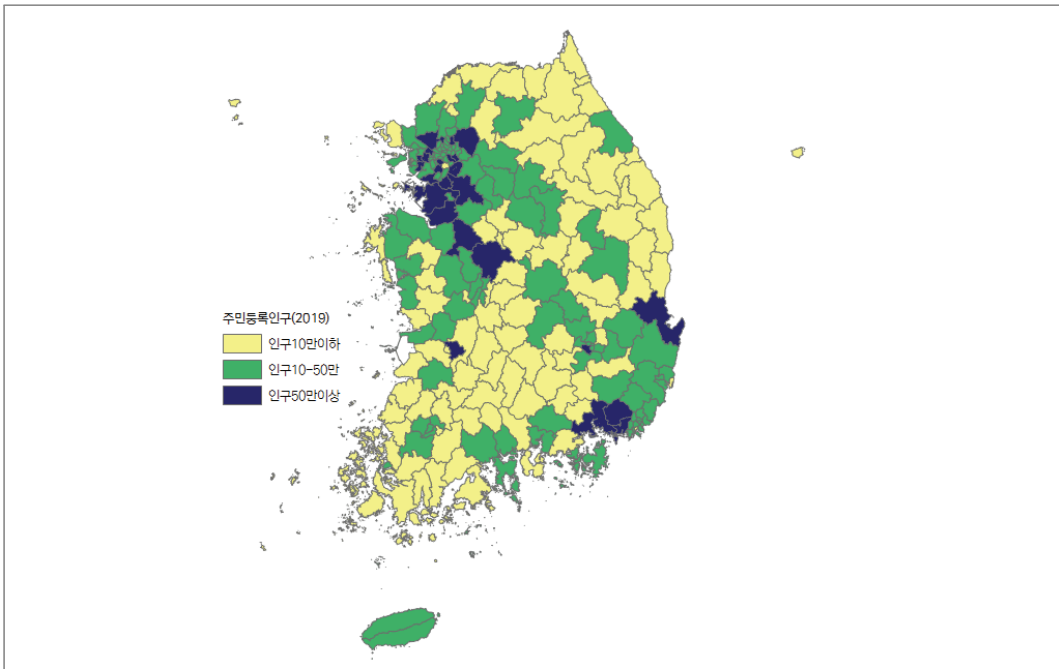
[표 3-2]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건강 수준	1																
2.건강 생활	.092	1															
3.스트레스	-.366***	.254***	1														
4.우울감	-.344***	.164*	.517***	1													
5.교통사고	.116	-.207***	-.174**	-.107	1												
6.화재	.024	-.262***	-.082	.009	.358***	1											
7.범죄	.042	.134*	.197**	.043	-.082	-.045	1										
8.생활 안전	-.007	-.181**	-.170*	-.045	.420***	.508***	-.004	1									
9.농지 지역	.112	-.499***	-.185**	-.191**	.061	.140*	-.194**	.013	1								
10.미세 먼지	-.100	.172*	.387***	.353***	-.115	-.037	.067	-.114	-.140*	1							
11.종사자	.034	.215**	.063	-.012	.157*	.106	.300***	.249***	-.333***	.082	1						
12.기초생활	.042	-.245***	-.287***	-.152*	.250***	.388***	.011	.413***	.031	-.272***	-.087	1					
13.학생수	-.180**	.425***	.398***	.341***	-.166*	-.111	.116	-.185**	-.270***	.367***	.143*	-.349***	1				
14.보육 시설	-.157*	.090	.177**	.201**	.001	.005	.138*	.067	-.028	.215**	.006	-.075	.323***	1			
15.자살률	.011	-.349***	-.119	-.147*	.118	.237***	.124	.332***	.151*	.003	-.071	.342***	-.022	-.022	1		
16.문화 기반 시설	.124	-.436***	-.265***	-.271***	.252***	.158*	-.019	.289***	.293***	-.256***	.091	.238***	-.237***	-.237***	.224**	1	
17.노인 여가 시설	.164*	-.589***	-.326**	-.253***	.243***	.188***	-.242***	.155*	.425***	-.225**	-.191**	.382***	-.271***	-.271***	.253***	.530***	1

***p<.001, **p<.01, *p<.05

3 군집 분석

여기에서는 전국 시군구를 인구 규모별로 분류하고, 행복지표별 특징이 인구 규모 집단간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 규모는 지역 경제, 지방 재정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 정책 수립 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기초 자치 단체인 시군구를 인구 10만 이하, 인구 10~50만, 인구 50만 이상 등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세 집단에 있어 행복 지표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58]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인구 기준 구분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인구 규모로 분류해 보면, 2019년 기준, 인구 10만 이하는 91개(39.7%), 인구 10만~50만 시군구는 113개(49.3%), 인구 50만 이상은 25개(10.9%)로 절반 정도가 10만~50만 규모에 해당된다.

[표 3-3] 인구 규모별 기초 지자체(시군구) 수 및 비율

구분	빈도	비중(%)
인구 10만 이하 기초 지자체	91	39.7
인구 10만~50만	113	49.3
인구 50만 이상	25	10.9
계	229	100.0

인구 규모에 따른 군집별로 행복 지표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4]와 같다.

먼저 건강 영역을 살펴보면, 건강 생활 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건강 생활 실천율은 인구 10만 이하 지역에서 23.0%로 가장 낮았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인구 10만 이하 지역에서 22.9%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에서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인구 10만 이하에서 4.75%로 가장 낮다.

안전 영역의 경우, 교통사고, 생활 안전이 99%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교통사고 등급은 인구 50만 이상 지역이 2.12등급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생활 안전 등급 역시 인구 50만 이상 지역이 2.16 등급으로 낮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은 미세 먼지의 차이가 99%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구 10만 이하의 미세 먼지 오염도는 21.04로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 영역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교육 영역은 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 세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은 인구 10만 이하 지역에서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구 10만~50만 지역 4.02%,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3.1%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인구 10만 이하 지역에서 가장 적어 8.96명이다.

관계 및 사회 참여 영역의 자살률 지표의 경우, 인구 10만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여가 복지 시설과 문화 기반 시설에 있어서도 인구 10만 이하 지역이 세 집단 중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인구 규모에 따른 주요 지표 비교 분석 결과

영역	지표	인구	평균	표준 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Scheffe)
건강	건강 수준 인지	10만이하(a)	44.34	7.870	4.013/.019	
		10-50만(b)	42.06	7.019		
		50만이상(c)	40.52	4.076		
	건강 생활 실천	10만이하(a)	23.007	7.9908	36.262/ .000**	a<b,c
	10-50만(b)	32.499	9.1982			
	50만이상(c)	34.308	7.8156			
	스트레스	10만이하(a)	22.884	4.3586	19.210/ .000**	a<b<c
	10-50만(b)	25.573	4.0148			
	50만이상(c)	27.852	2.9963			
	우울감	10만이하(a)	4.746	1.9702	12.562/ .000**	a<b,c
	10-50만(b)	5.973	2.1062			
	50만이상(c)	6.452	1.4089			
안전	교통사고	10만이하(a)	3.16	1.108	9.366/ .000**	c<b,a
		10-50만(b)	3.09	1.138		
		50만이상(c)	2.12	.881		
	화재	10만이하(a)	3.13	1.077	6.822/ .001*	a<b,c
	10-50만(b)	3.09	1.170			
	50만이상(c)	2.24	.970			
	범죄	10만이하(a)	2.97	1.197	1.057/.349	
	10-50만(b)	2.97	1.088			
	50만이상(c)	3.32	1.108			
	생활 안전	10만이하(a)	3.29	1.098	10.432/ .000**	c<b,a
	10-50만(b)	2.98	1.125			
	50만이상(c)	2.16	.943			
환경	녹지 지역	10만이하(a)	71.28	18.709	7.591/ .001*	c,b<a
		10-50만(b)	60.63	22.778		
50만이상(c)		59.54	16.806			
	미세 먼지	10만이하(a)	21.04	4.491	12.772/ .000**	a<b,c
	10-50만(b)	23.11	3.347			
	50만이상(c)	24.97	3.196			
경제	인구천명당 총사자수	10만이하(a)	415.348	190.201	.618/ .540	
		10-50만(b)	455.835	316.974		
50만이상(c)		428.544	198.980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10만이하(a)	5.145	1.239	27.270/ .000**	c<b<a
	10-50만(b)	4.024	1.547			
	50만이상(c)	3.136	1.155			

영역	지표	인구	평균	표준 편차	F/유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Scheffe)
교육	보육 시설	10만이하(a)	14.804	3.981	6.115/ .003	
		10-50만(b)	16.211	2.780		
		50만이상(c)	16.776	2.368		
교육	교원 1인당 학생수	10만이하(a)	8.960	3.708	98.832/ .000**	a<b,c
		10-50만(b)	15.108	3.082		
		50만이상(c)	15.242	1.897		
관계 및 사회 참여	자살률	10만이하(a)	32.633	11.174	10.041/ .000**	c,b<a
		10-50만(b)	28.316	6.458		
		50만이상(c)	25.516	2.925		
여가	노인 여가 복지시설	10만이하(a)	15.80	6.990	119.200/ .000**	c,b<a
		10-50만(b)	5.30	3.859		
		50만이상(c)	3.52	1.890		
여가	문화 기반 시설	10만이하(a)	17.346	9.632	70.820/ .000**	c,b<a
		10-50만(b)	6.152	5.852		
		50만이상(c)	3.400	.991		

**p<.001, *p<.005

제3절 소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영역별 지표 분석 결과, 일부 지표에 대해서 공간적 군집을 이루며 유사한 값들을 가지는 지역이 모여 있는 패턴을 나타냈다. 가령 건강 생활 실천율은 공간 상관성이 높은 편(모란 지수 0.529)으로 서울시 23개 구, 부산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등이 건강 생활 실천율이 높은 군집 지역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강원도, 충북, 경남, 전북 등의 산간 내륙 농촌 지역은 건강 생활 실천율이 낮은 군집을 형성하였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도 공간 상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모란 지수 0.498),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역시 공간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모란 지수 0.722). 그러므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은 특정 지역에 군집해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관찰되었다.

행복 지표들 간 상관성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건강 수준 인지율과 음의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낮은 건강 수준을 인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미세 먼지는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미세 먼지 오염이 높은 지역일수록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세 먼지 오염이 극심한 지역에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구 규모에 따라 인구 10만 이하 지역, 인구 10만~50만 지역, 인구 50만 이상 지역 등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본 결과 건강 생활 실천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인구 10만 이하 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건강 생활 실천도 낮고, 우울감 경험도 낮았으며, 스트레스 인지도도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은 건강 생활 실천도 많이 하지만 우울감과 스트레스 인지도 높은 경향을 나타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안전 영역에 있어서도 인구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교통사고와 생활 안전은 인구 50만 이상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나타났다. 환경 영역의 경우 인구 10만 이하 지역의 미세 먼지 오염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별 행복 제고 전략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된 정책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지자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맞는 지역 중심의 행복 제고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전략에 있어서 산간 지역이나 내륙 농촌 지역에서는 건강 생활 실천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도시 지역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를 위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의 행복 제고 전략

제1절 인구 변화와 지역 삶의 질

제2절 사례 연구

제3절 소결

제 1절 인구 변화와 지역 삶의 질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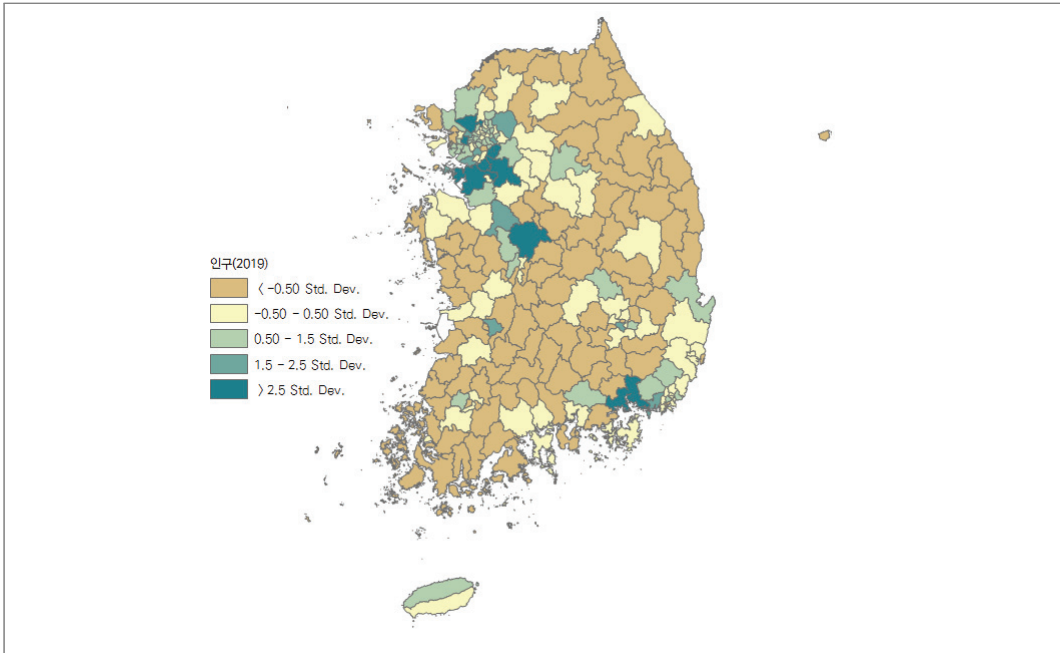
본 연구는 지역의 행복 제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미래 환경 변화, 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역 삶의 질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통 주제로 지역의 인구 감소 또는 인구 변화가 도출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과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의 행복 제고 전략을 논의하였다²⁾. 여기에서는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의 주요 이슈, 인구 변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시행 이후, 지방의 역할과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에 대한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지역 단위의 심각한 인구 감소 사례를 들 수 있다.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서 46.1%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의 인구 감소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는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감소시키고 지역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젊은 세대의 타 지역 유출 및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인구 문제는 일자리, 산업, 생활 인프라 등과 관련하여 지역의 삶의 질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국회미래연구원과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는 2020년 11월 12일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방향과 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으며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이용식 인천연구원 원장,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 김상협 제주연구원 원장,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각 지역 사례에 관련하여 토론문을 본 보고서 부록에 수록하였다.



[그림 4-1] 전국 시군구 인구 현황 및 분포

2019년 기준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4-1), 수도권 지역, 충청권과 동남권의 일부 지역의 시군구에 인구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인구 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살펴보면(표 4-1), 전국 단위에서는 연평균 0.437%의 증가율을 보인다. 그리고 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증가했다고 나타난다.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시의 사례를 들 수 있으며, 2011년 이후 2019년까지 약 17%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그 이외에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은 인천(0.922%), 경기(1.535%), 제주(1.331%)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인구 감소가 뚜렷한 지역은 부산(-0.454%), 전남(-0.366%)이며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는 해당 기간 동안 -0.31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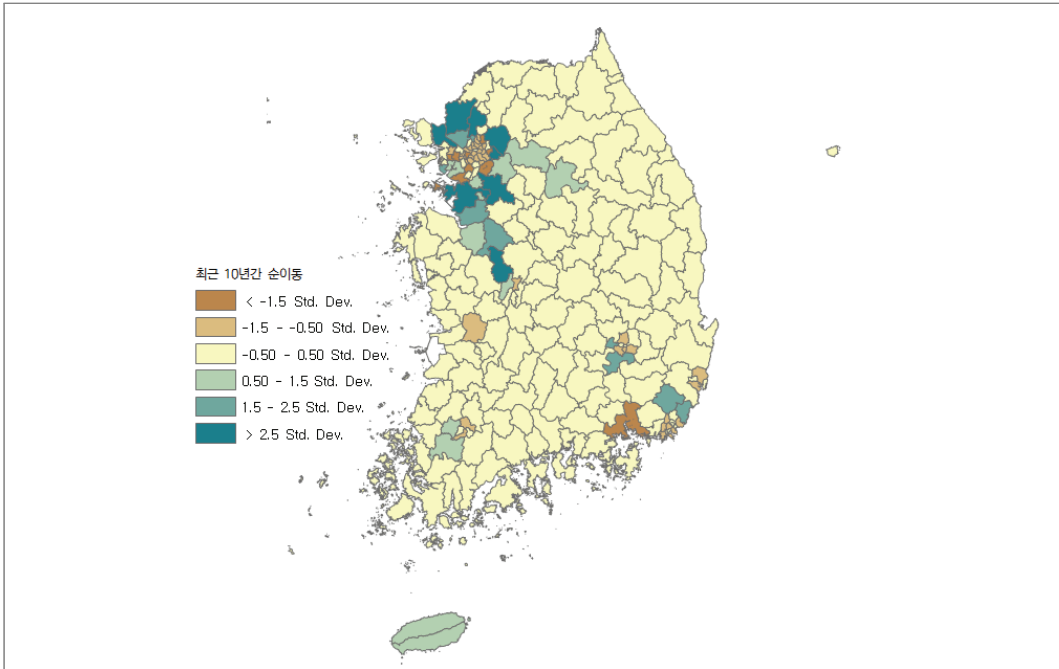
[표 4-1] 지역별 인구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명, %)

	2005	2010	2015	2019	2005-2019 연평균 증가율
전국	48,782,274	50,515,666	51,529,338	51,849,861	0.437%
서울특별시	10,167,344	10,312,545	10,022,181	9,729,107	-0.314%
부산광역시	3,638,293	3,567,910	3,513,777	3,413,841	-0.454%
대구광역시	2,511,306	2,511,676	2,487,829	2,438,031	-0.211%
인천광역시	2,600,495	2,758,296	2,925,815	2,957,026	0.922%
광주광역시	1,401,745	1,454,636	1,472,199	1,456,468	0.274%
대전광역시	1,454,638	1,503,664	1,518,775	1,474,870	0.099%
울산광역시	1,087,648	1,126,298	1,173,534	1,148,019	0.387%
세종특별자치시	-	-	210,884	340,575	17.053%
경기도	10,697,215	11,786,622	12,522,606	13,239,666	1.535%
강원도	1,513,110	1,529,818	1,549,507	1,541,502	0.133%
충청북도	1,488,803	1,549,528	1,583,952	1,600,007	0.516%
충청남도	1,962,646	2,075,514	2,077,649	2,123,709	0.565%
전라북도	1,885,335	1,868,963	1,869,711	1,818,917	-0.256%
전라남도	1,967,205	1,918,485	1,908,996	1,868,745	-0.366%
경상북도	2,688,491	2,689,920	2,702,826	2,665,836	-0.060%
경상남도	3,160,431	3,290,536	3,364,702	3,362,553	0.444%
제주특별자치도	557,569	571,255	624,395	670,989	1.331%

자료: KOSIS

최근 10년간의 순이동을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101,572명), 경기도 안산시(95,298명), 부천시(87,443명), 창원시(87,282명) 등이 순유출이 큰 지역이고, 경기도 화성시(268,635명), 세종시(232,352명), 김포시(191,564명) 등은 순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그림 4-2] 최근 10년간 인구 순이동 (전입-전출)

이상의 인구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근 10년 동안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일부 지역, 부산을 포함한 경남, 전남 지역의 인구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사례 연구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과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인구 변화와 지역 행복 제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여 각 지역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포럼에서 발표된 지역 사례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

부산광역시⁴⁾의 경우 동남권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동남권 인구는 2015년에 인구 정점(800만명)을 찍고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요인인 인구 이동을 보면, 2000년 이후 동남권은 타시도에서 동남권으로 연평균 16.6만명이 전입하고, 19.5만명이 타시도로 전출하여 연평균 약 3만명의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순유출 인구 중 청년층(15~34세)의 유출이 전체 유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동남권의 청년층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권역 내를 보면 실제 지난 20년간 부산이 동남권 전체 유출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경남, 울산의 인구 유출이 본격화 되는 경향이 있다. 동남권의 인구 유출은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76.0%, 충청권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유출은 동남권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전남⁵⁾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출산을 저하,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단기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보육, 고용, 복지, 산업 등을 융합한 종합적이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인구 변화에 적응하고,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기이다. 광주·전남은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지속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급격한 고령화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 감소세의 ‘완화’와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예의 ‘적응’ 전략으로 ‘지역주도’ 인구 정책을 설계하였다. 전남의 경우,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으로 자연 증감을 개선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3) 포럼 발표문 전문은 부록에 수록

4)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5)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적 인구 감소세 개선을 위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유도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광주와 전남은 사회적 감소의 주 연령층인 유소년 인구·청년 인구(0세~39세)를 위한 교육·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인구 순유입층인 장년층(40세~65세) 추가 유입 유도를 위한 귀농산어촌 유입 정책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부산, 광주·전남 지역 이외에 인구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세 지역의 사례를 고찰한다. 각각의 사례는 수도권/특별시(서울), 중부 지역/광역시(대전), 남부 지역/도(경남)의 특징을 가지며, 세 지역을 비교하여 특징과 공통점을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울 인구 변화와 삶의 질 제고 전략⁶⁾

가. 서론

1) 사회의 인구 구조의 변화

도시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인구’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시 정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한 때 한국 사회의 확장적 경제 발전과 개발 패러다임의 중추 역할을 하던 서울은 이제 천만 인구 시대의 종말이라는 언론의 머리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구의 감소와 인구 구성의 변화, 특히 고령층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서울은 인구 사회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의 변화가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고 예측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은 서울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점차 수면 위로 부각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십 수 년만 지나면 닥쳐올 초고령 사회에서 과연 누가 고령자들을 부양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 현재의 젊은 청년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노부모들과 함께 기꺼이 공존하려고 할 것인가?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전체의 생산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때 세대 간 갈등과 충돌은 정치와 사회 제도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서울은 현재의 인구 변화의 변동성 뿐 아니라 향후 인구 구조의 변화 역시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2005년 서울의 중위 연령은 34.1세였으나 2040년 서울의 중위 연령은 한국 나이로 52세로 예측된다. 50대 청년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더욱이 65세 이상 가구수가 2035년에는 서울 가구의 38.3%를 차지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고령화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양식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2040년 서울의 중앙을 차지할 세대는 현재 기준 25~26세 사이의 청년 세대이다. 헬조선을 외치는 현 청년들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년 세대가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1차적으로 주거 문제이나 이들의 경제 활동 공간은 여전히 서울이다.

6)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센터장)

따라서 서울의 총량적 인구는 줄더라도 주간 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서울의 인구 정책 입안에서 생활권 단위로서 수도권을 실제적으로 고려하여 통학권, 생활권 등 여러 차원에서 지역 연계를 통한 인구기반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

이렇게 변화하는 인구의 구성적 특성은 그 변화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인구 집단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적 이슈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북 특정 지역에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다고 하면 그 지역의 삶의 질 제고 정책은 고령자 중심의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고, 특정 자치구의 청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과반에 이른다고 하면 그 지역의 정책은 청년 세대 1인 가구에 집중되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연한 관점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관철되고 있지 않을 때도 있다. 정책이란 제한된 예산을 어떤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때로는 정책의 수혜자들 사이에 상호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은 최근 글로벌 정책 맥락에서도, 국내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도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무게 중심의 변화는 ‘경제 성장을 넘어서’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적 노력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결과, 세계 모든 지역에서 성장의 풍요와 결실을 경험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사회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대한 반성적 문제 의식이 제기되면서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성찰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서로 신뢰하며 공동체가 잘 작동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사회적 현상의 본질에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가?’와 같은 문제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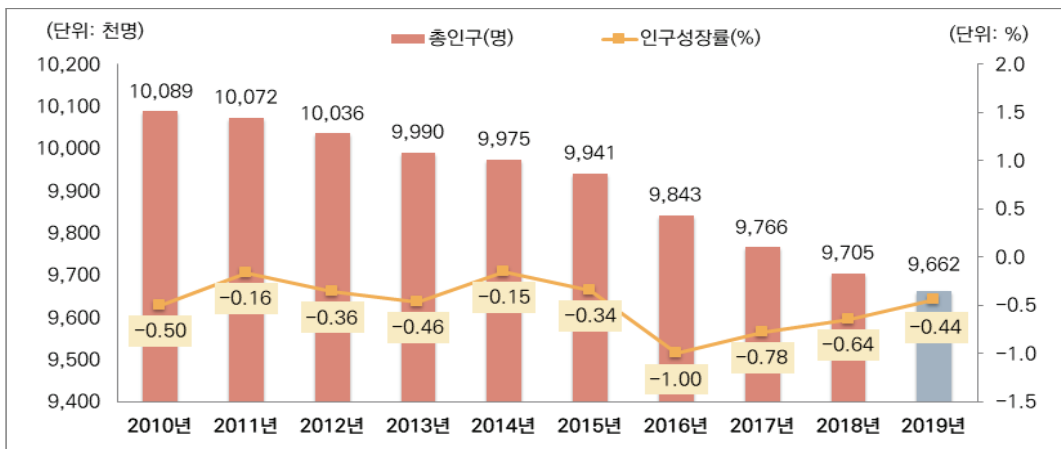
이같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지역 사회의 인구 현상의 변화를 진단하고, 그러한 인구 변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이슈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

지를 분석하여,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현상에 대응하여 어떤 정책과제를 내놓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은 '서울'이다. 서울은 한국의 다양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자,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역시 가장 활발하게 모색되고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나. 지역의 인구 변화 현황 및 전망

1) 서울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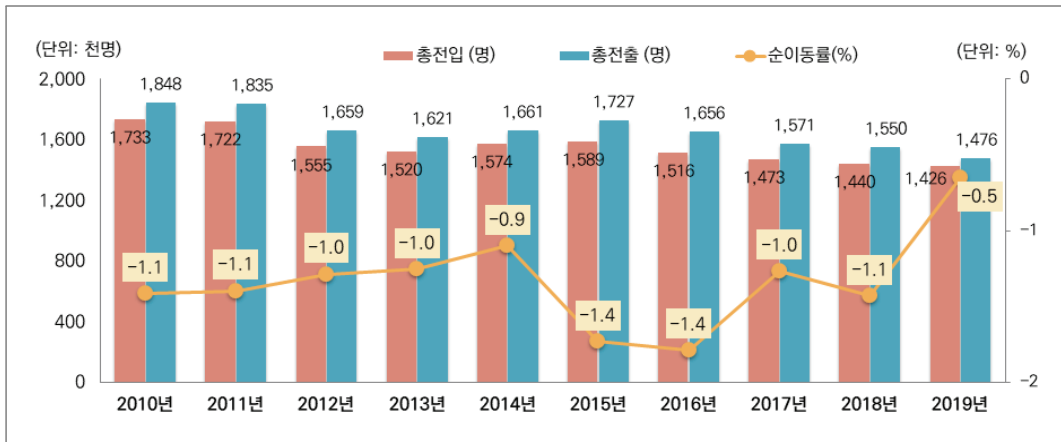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2017-2047)에 따르면 서울의 총인구는 2019년 기준 9,662,041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나타냈으며, 2047년에는 831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의 인구 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감소 추세이지만, 감소의 폭은 등락을 거듭했다. 다시 말하면 2013년까지는 감소의 폭이 계속 커지다가, 2014년 한 해 동안은 전년 대비 감소의 폭이 줄었다가 다시 감소의 폭이 커지면서 2016년 -1.00%까지 하락했다. 이후 2019년까지 인구 감소의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40년대(2040년 -0.55%, 2045년 -0.73%)까지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그림 4-3] 서울의 총인구

서울의 인구 감소의 특징 중 하나는 서울에서 줄어드는 인구가 수도권, 특히 경기도 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경기도의 인구 성장률은 증가의 폭의 차이는 있으나,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총인구의 감소는 자연 증감과 사회 증감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자연 증감으로서의 서울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 그리고 사회 증감으로서의 사회적 이동이 서울의 인구 감소의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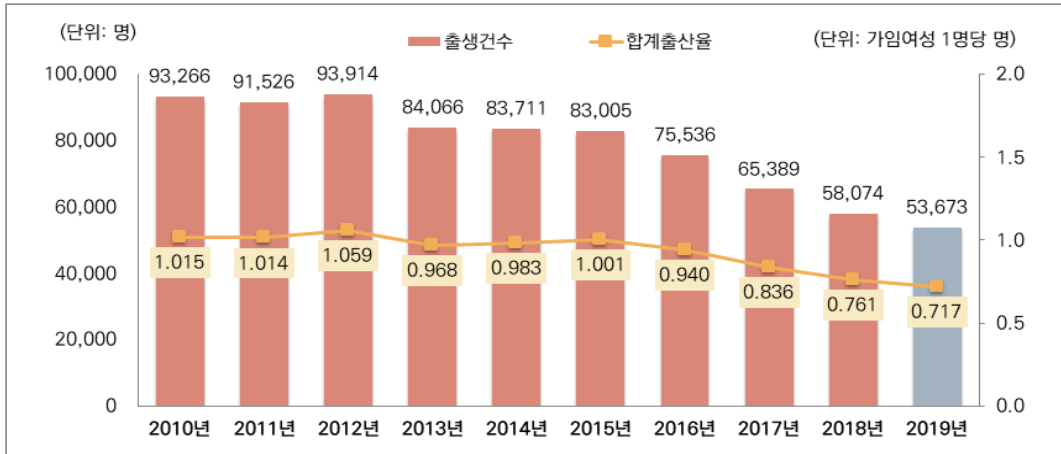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 이동통계

[그림 4-4] 순 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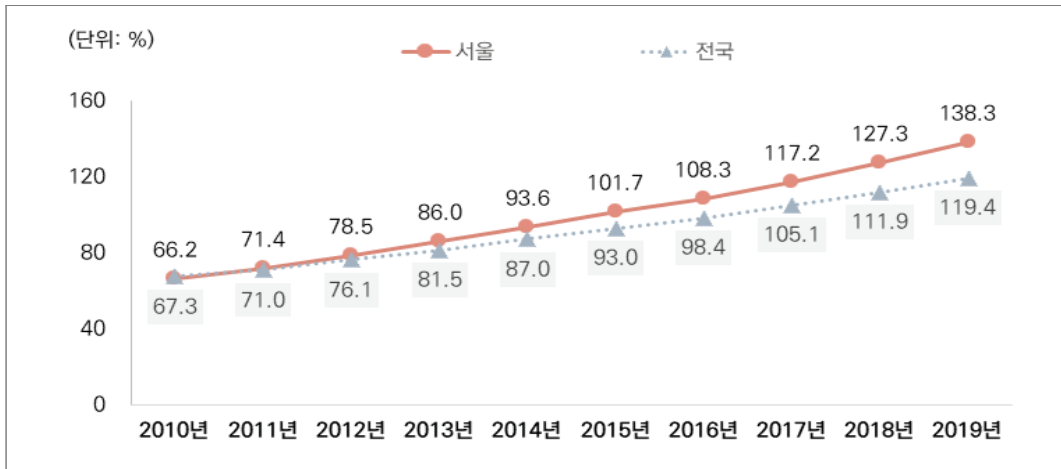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2010년 1.015명에서 2015년 1.001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간신히 1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6년 0.94명, 2017년 0.836명, 2018년 0.761명, 2019년 0.717명으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이러한 전국 최저 수준의 서울의 출산율은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서울의 비싼 주거비는 결혼한 부부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 양육의 부담 증가와 고용 불안 등 경제적 요인 또한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은 지난 10년 동안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71,753건에서 2018년 52,005건, 2019년 48,261건으로 낮아졌다. 반면 평균 초혼연령은 2019년 남자 33.7세, 여자 31.6세로 전국 평균 대비 각각 0.4세, 1.0세 높다.

노령화 지수가 2010년 66.2%에서 2019년 138.3%로 급증하여 2019년 현재 전국 기준인 119.4%보다 훨씬 높아 서울의 인구 고령화가 전국의 고령화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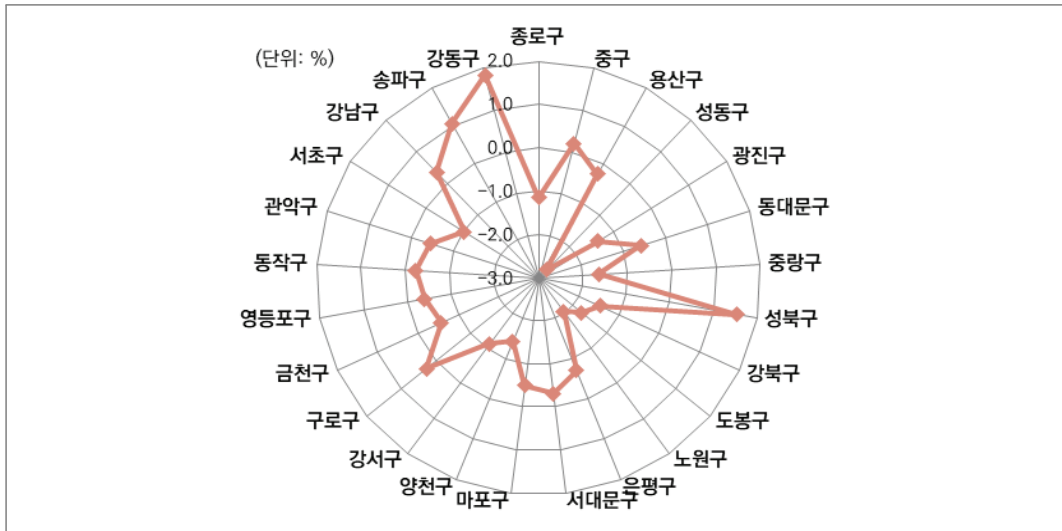
[그림 4-5] 합계 출산율



출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노령화지수

[그림 4-6] 노령화 지수

서울의 인구 감소의 사회적 원인인 인구의 유·출입으로서의 인구 이동은 서울의 인구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근거이다. 서울의 인구 이동은 2019년 기준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 이동률이-0.5%로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다. 전년도인 2018년의-1.1%에 비해 전출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서울은 여전히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은 인구유출 도시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순 이동률을 보면, 전입 인구가 더 많은 자치구는 강동구(1.8%), 성북구(1.5%), 송파구(1.1%), 강남구(0.3%) 순이며, 전출 인구가 더 많은 자치구는 성동구(-2.7%), 노원구(-2.0%)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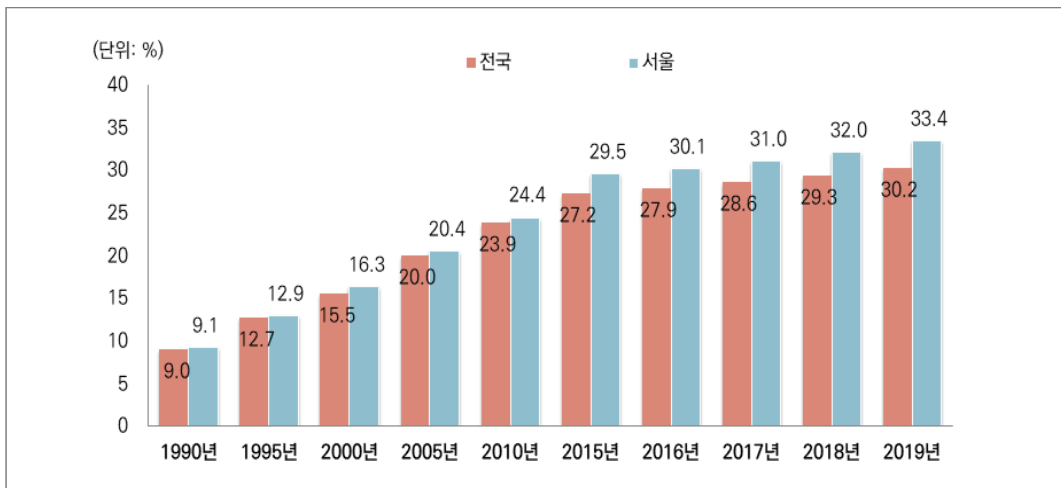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 이동통계, 2019

[그림 4-기] 순 이동률(자치구별)

서울의 인구 유입과 유출은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분석 단위를 좀 더 확장해서 장기적인 변화를 보면 수도권 내에서 인구 유입과 유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수도권 단위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 인구는 천만을 훌쩍 넘는 대도시권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의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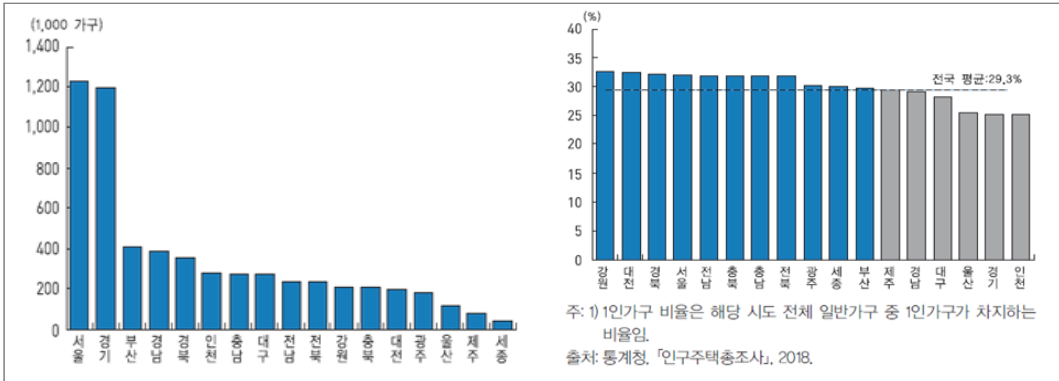
서울이 빠르게 ‘축소 가구화’ 되어가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면서 가구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에 불과 4.5%에 지나지 않았던 1인 가구가 1990년 9%를 넘더니 2000년에 16.3%, 2010년 24.4%, 2015년 29.5%, 2019년 33.4%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의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센서스 기준 매년의 인구 추계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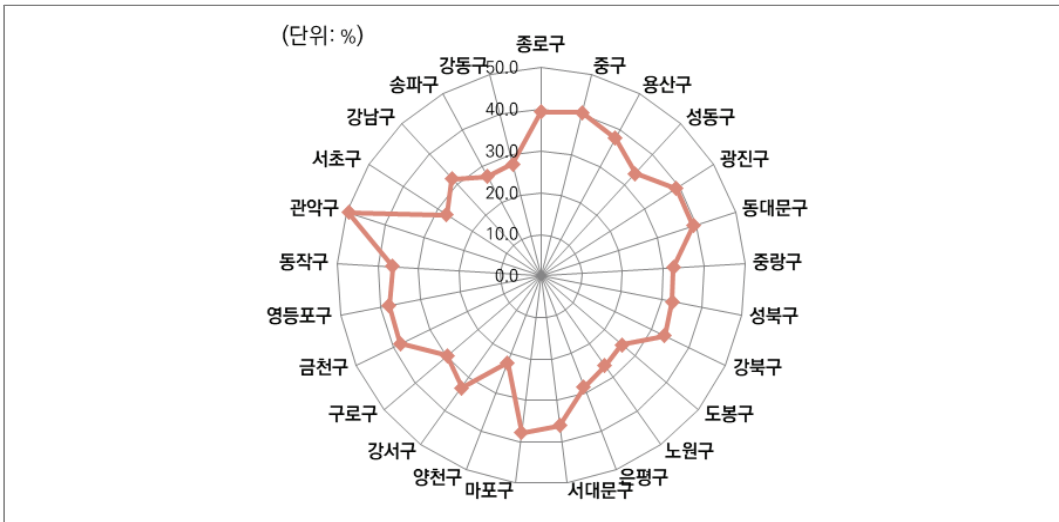
[그림 4-8] 서울의 1인 가구 비율

전국의 1인 가구는 총량으로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1인 가구의 41.5%를 차지한다. 지역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강원, 대전, 경북, 서울 순으로 높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지역들은 주로 고령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인 반면, 서울과 대전, 세종 등은 상대적으로 젊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울과 전국의 1인 가구 비율 격차도 2010년 이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4-9] 시도별 1인 가구 수와 1인 가구 비율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관악구인데, 전체 가구의 49.5%가 1인 가구이다. 중구의 1인 가구 비율도 40.5%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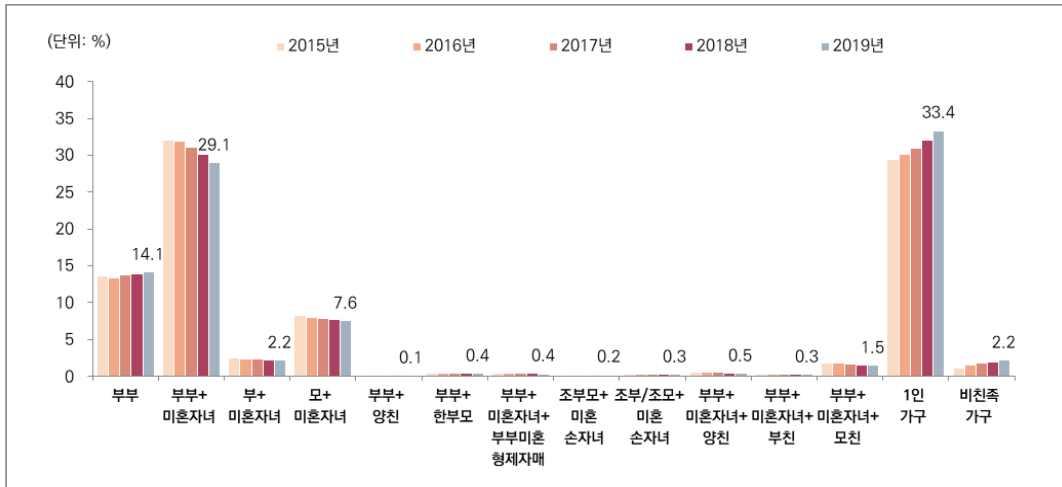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

[그림 4-10] 1인 가구 비율(자치구별)

서울의 가구 구조의 빠른 변화와 함께 서울의 가족은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이외에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다

문화 가족, 반려동물 가족 등이 '다양한 가족'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미 앞서 논의한 것처럼 가족 구조에서 1인 가구가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유형이 되어 '1인 가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29.1%를 차지한다. 2세대 가구에는 한부모 가족인 '부와 미혼 자녀' 가구가 2.2%, '모와 미혼 자녀'가 7.6%를 차지하고 있다. 3세대 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반세기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서울의 가구 유형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표준화된 가족'은 서울에서 다른 유형으로 대체되어 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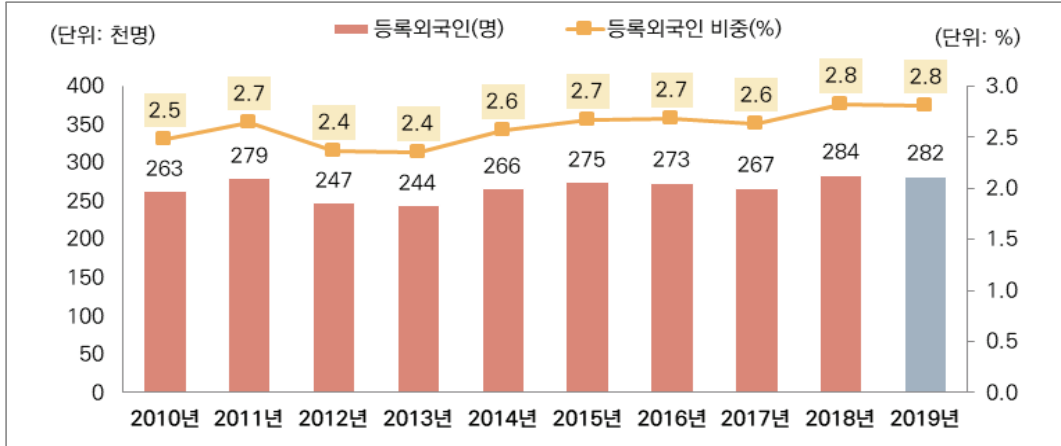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4-11] 가족 다양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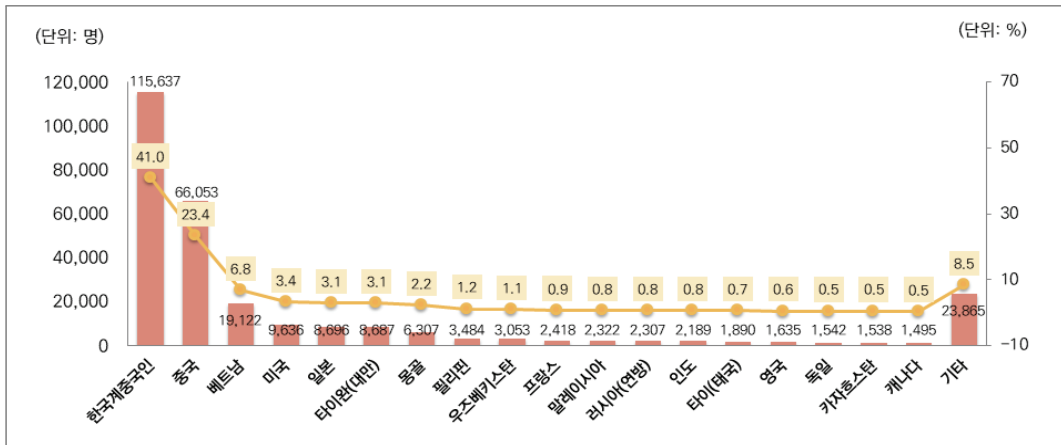
서울의 가구 구성의 다양성과 함께 외국인 주민 역시 서울을 구성하는 다양성의 한 축이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64.4%가 중국 국적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 10명 중 6~7명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흔히 조선족이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 41%, 조선족 아닌 중국인이 23.4%로 구성되어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6.8%), 미국(3.4%), 대만(3.1%), 일본(3.1%) 출신 순이다. 서울 거주 외국인의 중국 국적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6년 전체의 70.2%에서 2019년 64.5%로 감소). 서울 거주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방문 취업이 2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주 목적이 16.9%, 유학 16.1%, 결혼 이민 7.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 체류 자격 구성의 가장 큰 변화는 방문 취업 목적의 체류 자격 유형이 감소하고 유학과 영주 등의 체류 자격이 증가한 것이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그림 4-12] 서울시 등록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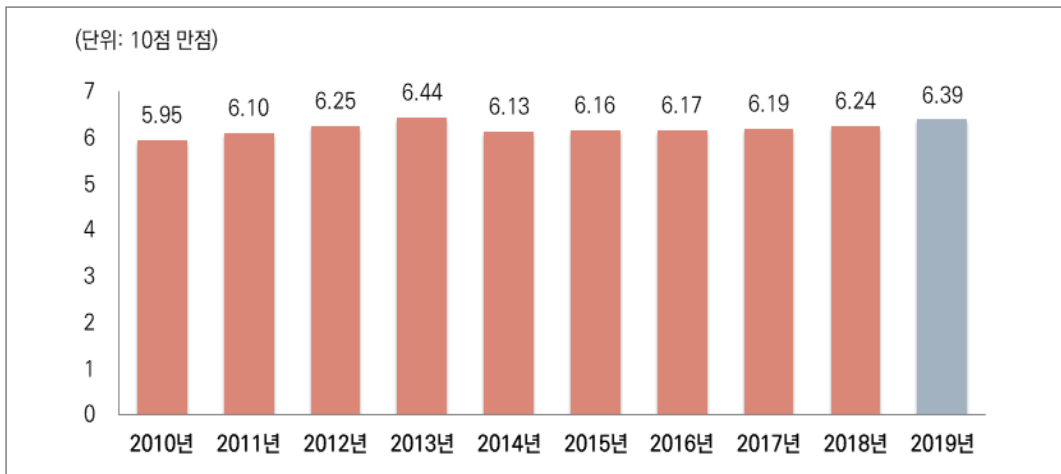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그림 4-13] 서울 거주 외국인 국적

다. 지역 인구 변화에 따른 삶의 질 관련 주요 이슈

1) 정주 여건의 지역현황 및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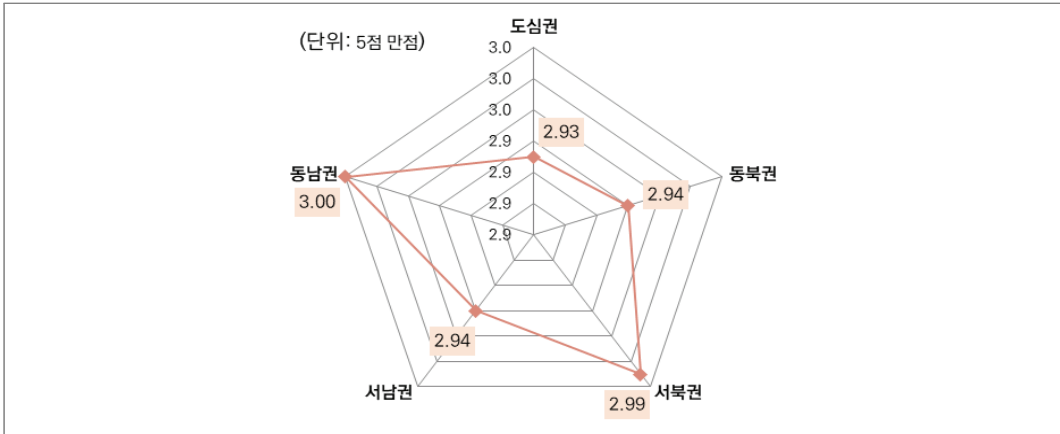
서울의 빠른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반적인 인구 밀도의 증가는 도시민들의 정주 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2019년 기준 서울 시민들의 주거 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9점으로 '보통 이상'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몇 년동안 6점대에서 거의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그림 4-14] 주거 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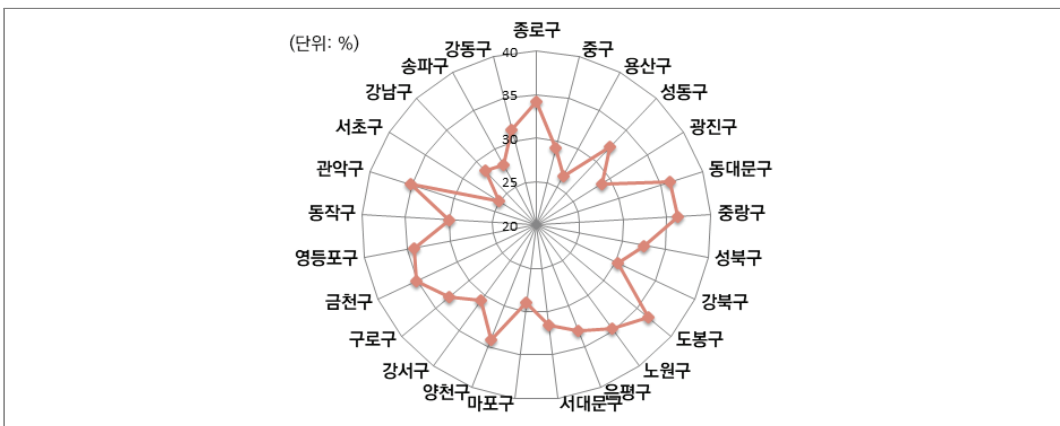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주거 환경을 둘러싼 지역 간 격차는 서울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주거 환경을 구성하는 주택 자체에 대한 만족도에서 서울시의 5대 권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 만족도는 강남, 서초가 포함된 동남권이 가장 높은 3.0점(5점 만점)을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는 도심권(2.93점)으로 나타났다.



출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019

[그림 4-15] 주택 만족도(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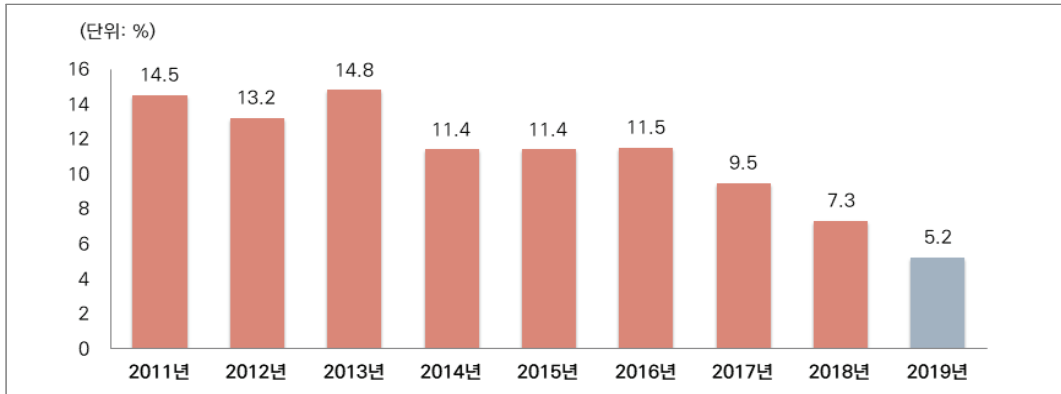
건강 상태는 고령화 사회에서 주요한 삶의 질과 관련한 이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시의 자치구별 건강 상태의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비만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치구별 평균 소득의 정도와 비만율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4-16은 자치구별 비만율을 나타낸 것으로 도봉구(36.6%), 중랑구(36.2%), 동대문구(36.1%)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초구(25.1%), 용산구(26.5%), 송파구(27.9%)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 건강조사, 2019

[그림 4-16] 비만율(자치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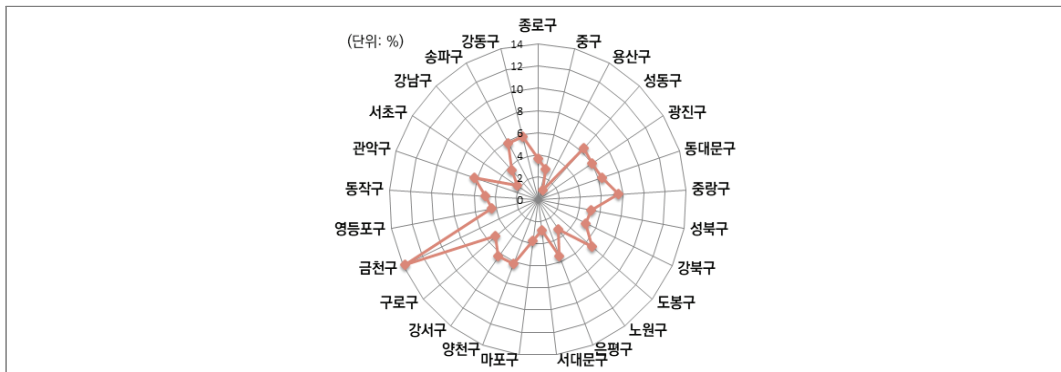
한편, 고령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지역 사회 건강 조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신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인 ‘미충족 의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서울의 보건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 건강 조사

[그림 4-17] 미충족 의료율

그러나 지역별로 미충족 의료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금천구의 미충족 의료율이 13.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용산구, 서초구, 중구, 서대문구 지역에서의 미충족 의료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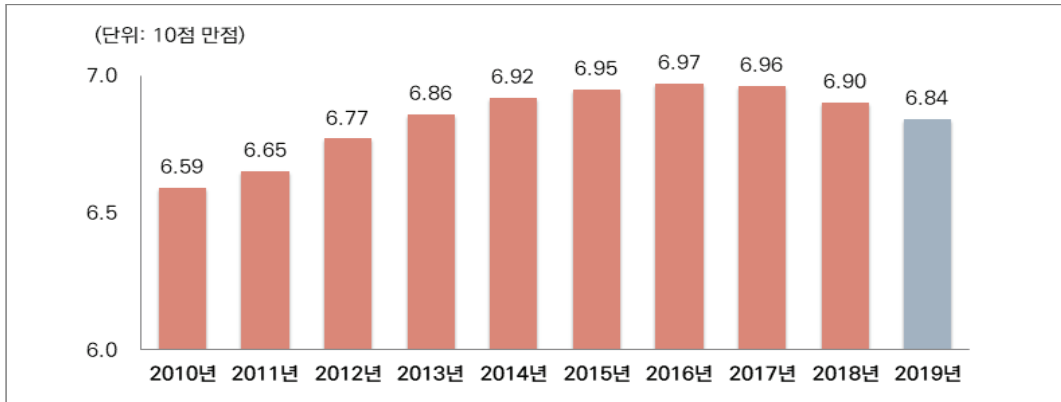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2019

[그림 4-18] 미충족 의료율(자치구별)

2) 지역의 행복 현황 및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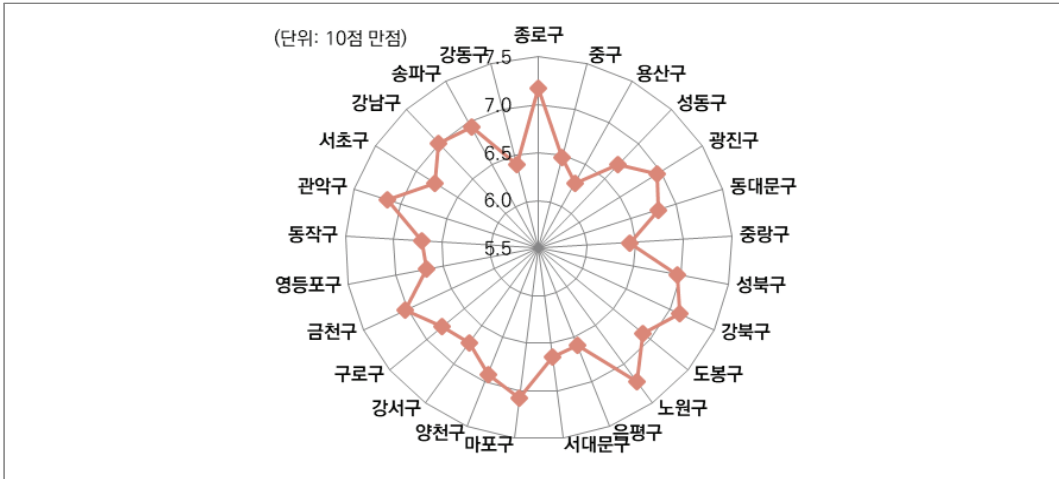
서울 시민의 행복 정도는 여러 가지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으로서의 행복지수는 서울의 삶의 질을 대표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는 2016년 6.97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감소하면서 2019년 6.84점으로 0.1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으나, 친지나 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의 지수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가계 경제의 악화로 인한 행복감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그림 4-19] 행복지수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는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치구별로는 노원구(7.22점), 종로구(7.18점), 관악구(7.14점), 강북구(7.11점)에서 종합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용산구(6.28점), 강동구(6.40점), 중랑구(6.44점), 중구(6.48점)에서 낮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19

[그림 4-20] 행복지수(자치구별)

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의 인구 변화 현황을 진단하고, 이러한 인구 변화에 따른 삶의 질 관련 이슈들을 서울의 정주 환경과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울의 인구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는 서울이 극복해야 할 사회적 이슈이다. 문제는 서울의 인구 변화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의 인구 총량의 증감은 수도권 인구의 증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이동한 인구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일생활권인 수도권 혹은 경기도 지역에 대부분 분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지만 실제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구는 줄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특히 상주 인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서울의 인구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 전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는 역설적이게도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현상적 특성은 서울의 인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생활권 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서울의 인구 현상의 역동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생활권 인구’ 산출 결과, 서울에서 주간에 활동하는 인구에 대해 생생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인구 증감의 문제는

증가와 감소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실제 인구 이동의 방향성까지 함께 고려해 정책의 작동과 영향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서울의 인구 현상은 시정 정책 설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동시에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울의 인구 가구 정책은 이러한 인구 가구 변화에 시의성 있게 조응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인구 변화에 대해 '1인 가구 지원 조례'와 '1인 가구 지원 기본 계획'을 통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1인 가구 기본 계획은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면서 '포용 도시' 지향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의 가족 다양성 현상 역시 다양한 정책 이슈를 야기할 것이다. 한부모 가정, 결혼 이주민 가정과 관련한 지원 정책은 가정생활 지원, 사회적 연결망, 출산, 지역내 사회 갈등 등 여러 사회적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정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슈를 중점에 두고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의 감염병 시대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생활인구 데이터와 인구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 밀집도가 큰 지역일수록 감염병 시기 동안 이동성이 제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가구의 변화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해 증거기반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역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이다. '2019 서울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기준 서울 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는 6.90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 6.52점에 비해 개선된 수치이다.

서울시는 2019년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하면서 향후 2023년까지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기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중이다. 제2차 기본 계획의 정책 비전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민주시민으로의 역량 강화, 2) 상호존중 및 인권과 안전확보, 3)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4) 다층

적 협력의 거버넌스이다. 이는 제1차 기본 계획의 중요 축이었던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다양성 증진 비전을 좀 더 확장시키면서 다(多)가치 및 다문화사회로의 상호 문화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이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은 긍정적이다.

한편, 서울 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 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제환경, 도시 안전, 복지 환경 영역에서는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 사회 환경, 교육 환경에서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보편적 일반 주민인 서울 시민으로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 교육, 사회영역에서의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국인 지원 정책이 체류 자격별 지원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서울에서의 정착 단계를 고려한 정책이 세밀하게 기획되어야 함을 뜻한다.

서울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이제 저성장 단계로 들어섰다. 이제 경제 성장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성숙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인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혜안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공공성에 대한 윤리 등 시민성(市民性)을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포용 사회로 나아갈 역량을 갖추나가야 할 때이다.

2 대전 인구 변화와 삶의 질 제고 전략⁷⁾

가. 서론

인구는 한 도시나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도시나 지역에서는 해당 도시의 인구 변화에 매우 관심을 갖는다.

대전시 인구는 시로 승격된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정체 및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등에서 그 영향을 찾아볼 수도 있으나, 대전시의 경우 특히 인접한 새로운 신도시인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및 세종시 발족⁸⁾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세종시가 발족하면서, 대전시 인구의 많은 수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대전시 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다. 대전시의 경우,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라기 보다는 외부 지역으로의 급속한 인구 유출, 즉 사회적 인구 이동 요인인 전출에 의한 인구 감소라고 볼 수 있다.

대전시에서는 이와 같은 인구 감소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이 효과를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시책들은 결과적으로 볼 때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구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이 다양한 정책에 의해 개선될 경우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 인구 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며,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논의 결과물을 토대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와 대전시의 당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대전시 인구 변화 추이 및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개관하고, 향후 추진 과제 등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대전시의 인구 정책 입안 및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7) 임병호(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전국 17번째 광역 자치 단체로 출범하였다.

나. 대전시 인구 변화

1) 대전시 인구 규모 및 전국 대비 점유 비율 변화

2000년 이후 대전시 인구 규모의 변화 및 전국 인구 규모 대비 대도시의 점유 비율은 [표 4-2]와 같다.

대전시 인구는 2000년 1,385,60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532,81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현재 대전시 인구는 1,474,870명이다.

[표 4-2] 대전시의 인구 규모 및 전국 대비 점유 비율 변화

(단위: 명, %)

구 분	인구수		전국 인구 대비 점유 비율							
	전국	대전	대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2000년	47,732,558	1,385,606	2.90	21.60	7.95	5.29	5.33	2.87	2.18	
2001년	48,021,543	1,403,164	2.92	21.37	7.85	5.26	5.34	2.88	2.20	
2002년	48,229,948	1,419,573	2.94	21.16	7.73	5.24	5.35	2.90	2.21	
2003년	48,386,823	1,432,296	2.96	21.03	7.63	5.23	5.31	2.88	2.22	
2004년	48,583,805	1,443,471	2.97	20.94	7.55	5.20	5.31	2.88	2.23	
2005년	48,782,274	1,454,638	2.98	20.84	7.46	5.15	5.33	2.87	2.23	
2006년	48,991,779	1,466,158	2.99	20.78	7.37	5.09	5.36	2.87	2.23	
2007년	49,268,928	1,475,659	3.00	20.69	7.28	5.06	5.41	2.87	2.23	
2008년	49,540,367	1,480,895	2.99	20.59	7.20	5.03	5.44	2.87	2.25	
2009년	49,773,145	1,484,180	2.98	20.51	7.12	5.00	5.45	2.88	2.24	
2010년	50,515,666	1,503,664	2.98	20.41	7.06	4.97	5.46	2.88	2.23	
2011년	50,734,284	1,515,603	2.99	20.20	7.00	4.94	5.52	2.88	2.24	
2012년	50,948,272	1,524,583	2.99	20.01	6.95	4.92	5.58	2.88	2.25	0.22
2013년	51,141,463	1,532,811	3.00	19.83	6.90	4.89	5.63	2.88	2.26	0.24
2014년	51,327,916	1,531,809	2.98	19.68	6.86	4.86	5.66	2.88	2.27	0.30
2015년	51,529,338	1,518,775	2.95	19.45	6.82	4.83	5.68	2.86	2.28	0.41
2016년	51,696,216	1,514,370	2.93	19.21	6.77	4.81	5.69	2.84	2.27	0.47
2017년	51,778,544	1,502,227	2.90	19.04	6.70	4.78	5.69	2.83	2.25	0.54
2018년	51,826,059	1,489,936	2.87	18.84	6.64	4.75	5.70	2.82	2.23	0.61
2019년	51,849,861	1,474,870	2.84	18.76	6.58	4.70	5.70	2.81	2.21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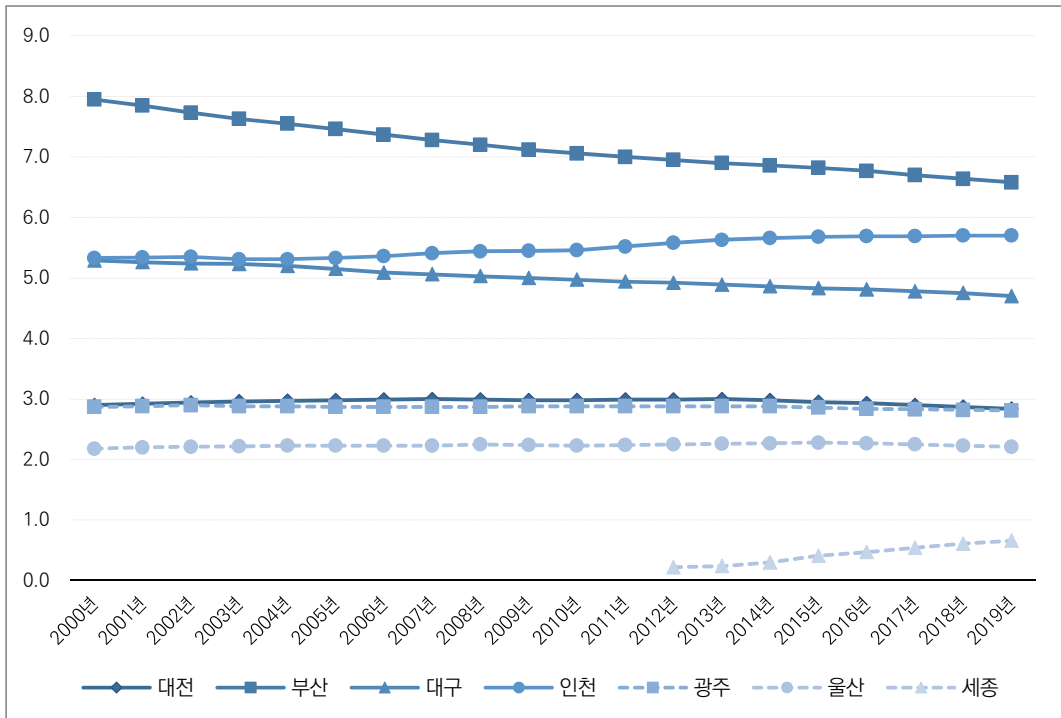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포털

전국 인구 대비 대전시 인구의 점유 비중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00년 2.90%에서 2007년 3.00% 까지 상승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3년 3.00%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 비율이 감소하여, 2019년 현재 전국 인구 대비 대전시 점유 비율은 2.84%이다.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의 전국 인구 대비 점유 비율 변화는 [그림 4-21]과 같다. 전국 주요 도시의 전국 인구 대비 점유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서울시의 점유 비율은 18.76%이며, 부산시 6.58%, 인천시 5.70%, 대구시 4.70%, 광주시 2.81%, 울산시 2.21%이며, 최근 출범한 세종시는 0.66%이다.

이중에서 특히 부산시, 대구시의 점유 비율 감소 추세는 뚜렷하며, 대전시와 광주시 그리고 울산시의 경우 어느 정도 일정 점유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천시와 세종시의 인구 비율은 증가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단위: %)



[그림 4-21] 전국 인구 대비 주요 도시의 점유 비중 변화

2) 대전시 인구 변화 특성

2000년~2019년간 대전시 자연적 인구 변화(출생, 사망)와 사회적 인구 변화(전입, 전출) 그리고 순변화(자연적 변화+사회적 변화)는 [표 4-3]과 같다.

대전시는 2000년 13,770명의 자연적 증가가 있는 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대는 1만명대 이하의 자연적 증가를, 2017년대는 5천명대 이하의 자연적 증가를 나타냈고, 2019년의 자연적 인구 증가수는 908명에 불과하다.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8,576명의 사회적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07년 최초로 -1,048명의 사회적 인구 감소가 발생하였다. 2011년~2013년 단기간 사회적 인구 증가가 진행되었으나, 2015년 이후 다시 매년 5천명 이상의 사회적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적 및 사회적 인구 변화에 따라, 2014년 이후 대전시 인구는 감소하는 순변화가 이어졌고, 2019년의 경우 -15,434명의 인구 감소를 기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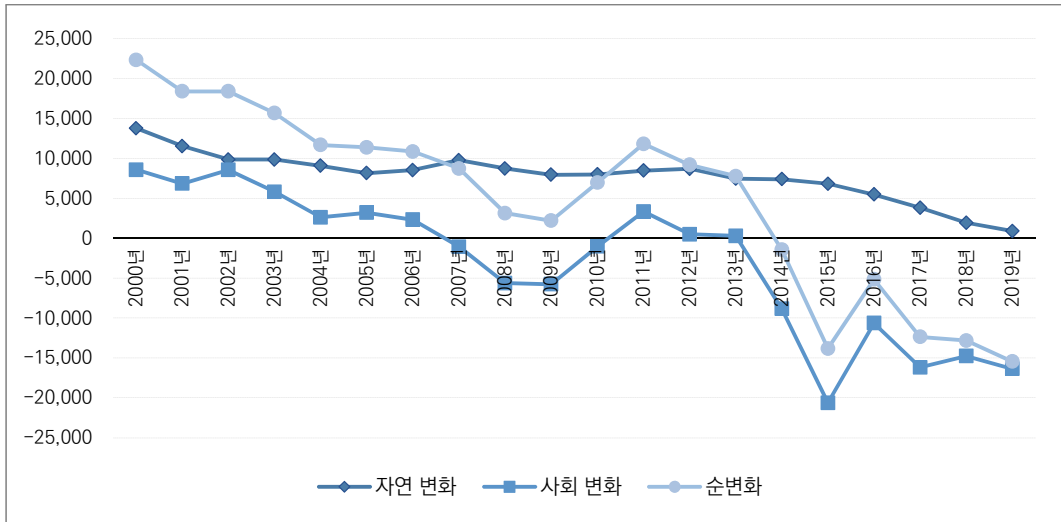
[표 4-3] 대전시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변화

(단위: 명)

구분	자연 변화	사회 변화	순변화	구분	자연 변화	사회 변화	순변화
2000년	13,770	8,576	22,346	2010년	8,001	-1,045	6,956
2001년	11,549	6,840	18,389	2011년	8,472	3,344	11,816
2002년	9,852	8,555	18,407	2012년	8,699	499	9,198
2003년	9,854	5,826	15,680	2013년	7,465	311	7,776
2004년	9,073	2,616	11,689	2014년	7,398	-8,838	-1,440
2005년	8,171	3,210	11,381	2015년	6,813	-20,616	-13,803
2006년	8,537	2,315	10,852	2016년	5,478	-10,631	-5,153
2007년	9,789	-1,048	8,741	2017년	3,822	-16,175	-12,353
2008년	8,751	-5,610	3,141	2018년	1,934	-14,753	-12,819
2009년	7,966	-5,758	2,208	2019년	908	-16,342	-15,43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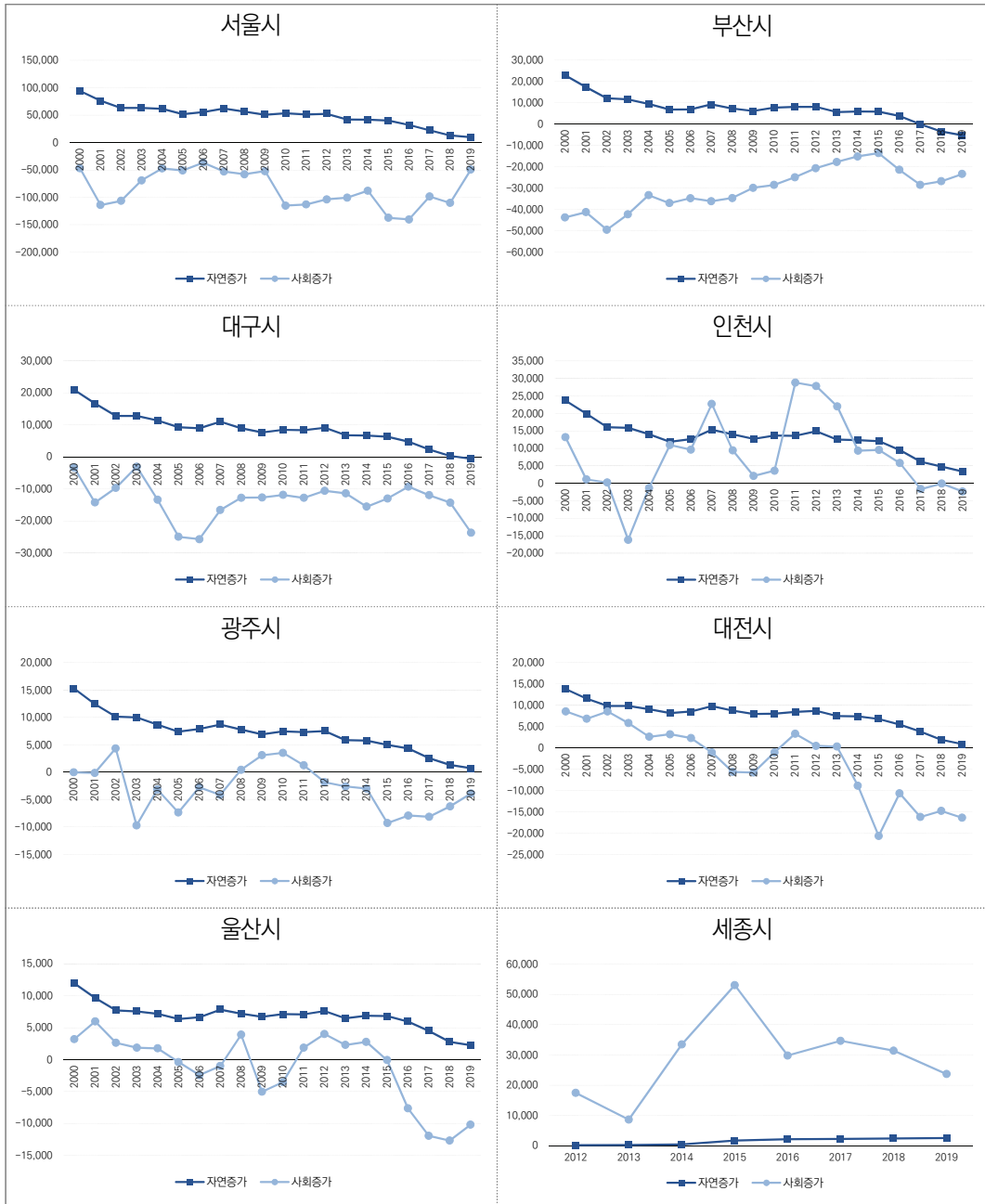
[그림 4-22] 대전시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변화

대전시와 전국 주요 대도시의 인구 변화를 비교하고자, 2000년 이후 전국 주요 도시의 자연적 및 사회적 인구 변화를 도식화하면 [그림 4-23]과 같다. 자연적 및 사회적 인구 변화의 ‘전체적인 흐름(추세)’을 보면, 대전시는 자연적 및 사회적 인구 감소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울산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대구시, 광주시 등은 자연적 인구 감소 추세가 진행되나 사회적 인구 변화는 증가와 감소 등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자연적 인구의 감소 추세와 달리 사회적 인구 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즉 전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 추세는 진행되나, 다른 대도시와 달리 많은 기간 사회적 인구 변화에서 전입이 전출 규모를 넘어서는 사회적 인구 증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출범한 세종시의 경우, 자연적 인구 증가보다는 사회적 인구 증가에 의한 인구 증가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4-23] 대전시 및 전국 주요 도시의 자연적·사회적 인구 변화

3) 대전시의 사회적 인구 변화 고찰 : 전출 인구 기준

2000년, 2014년 그리고 2019년 대전시 전출 인구의 규모 및 전출 지역별 분포는 [표 4-4]와 같다.

2000년 대전시 전출자의 전입 지역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22.9%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서울시로 20.3%를 점유하고 있다. 경기도의 점유 비율도 19.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인 2015년의 경우, 대전시 전출자의 25.3%가 세종시로 전출하였으며, 충청남도는 15.7%, 경기도는 15.1% 그리고 서울시는 13.3%로 나타나,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의 전출 패턴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의 경우, 세종시로의 전출이 전체의 21.4%, 경기도 전출 17.2%, 서울시 전출 15.5%, 그리고 충청남도 전출이 15.3%로 나타났으나, 2015년의 큰 흐름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대전시 전출 인구의 전출 지역별 점유 비율을 도식화하면 [그림 4-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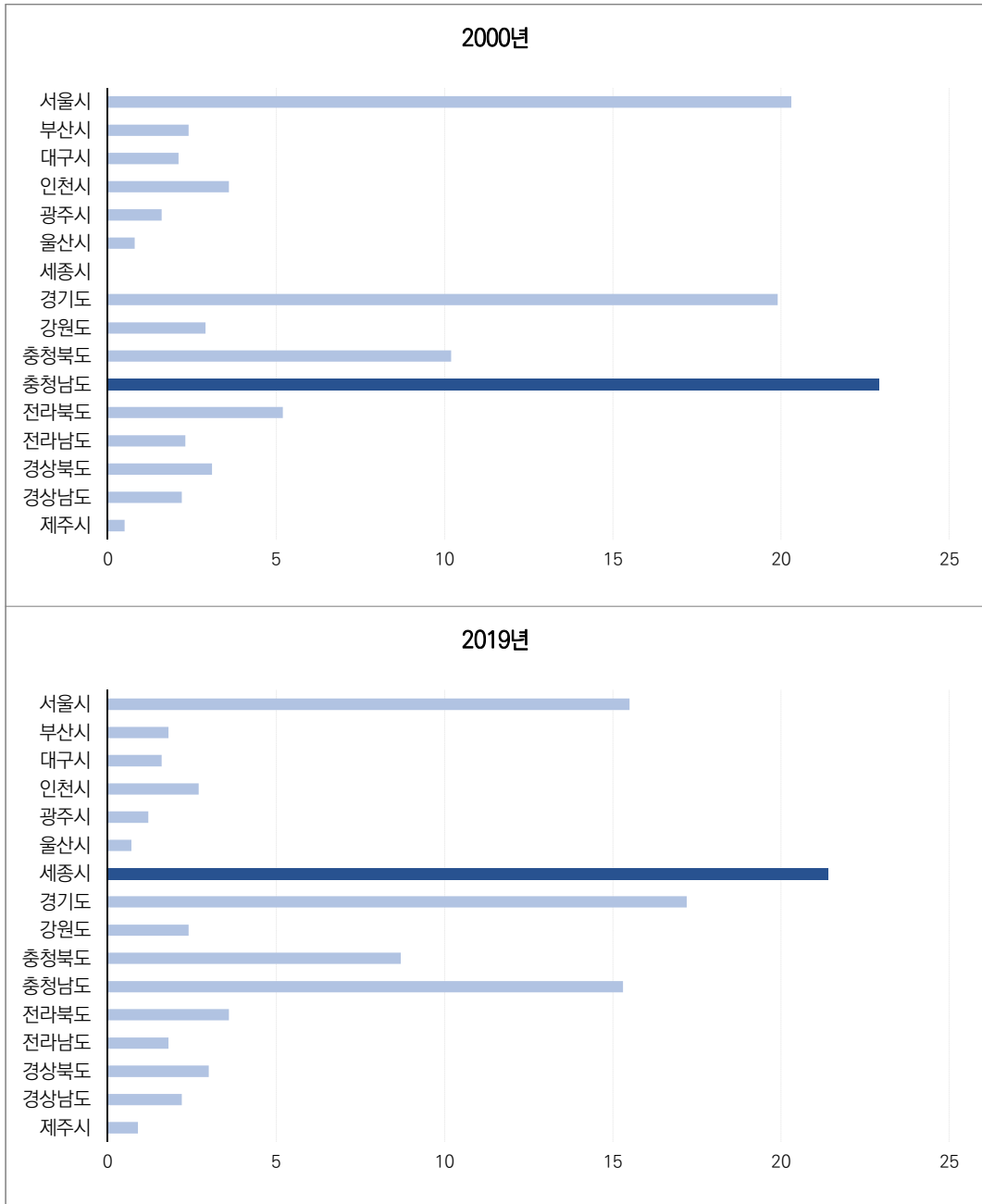
[표 4-4] 대전시 전출 인구의 전출지별 규모

(단위: 명, %)

전출지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전출자	비율	전출자	비율	전출자	비율	전출자	비율	전출자	비율
합 계	92,137	(100.0)	95,056	(100.0)	87,515	(100.0)	101,781	(100.0)	94,771	(100.0)
서울시	18,698	(20.3)	16,639	(17.5)	15,793	(18.0)	13,559	(13.3)	14,725	(15.5)
부산시	2,227	(2.4)	2,042	(2.1)	1,976	(2.3)	2,054	(2.0)	1,743	(1.8)
대구시	1,944	(2.1)	1,940	(2.0)	1,757	(2.0)	1,667	(1.6)	1,473	(1.6)
인천시	3,273	(3.6)	2,946	(3.1)	2,762	(3.2)	2,516	(2.5)	2,567	(2.7)
광주시	1,461	(1.6)	1,477	(1.6)	1,512	(1.7)	1,321	(1.3)	1,091	(1.2)
울산시	765	(0.8)	715	(0.8)	745	(0.9)	939	(0.9)	641	(0.7)
세종시	-	-	-	-	-	-	25,788	(25.3)	20,314	(21.4)
경기도	18,360	(19.9)	19,258	(20.3)	18,022	(20.6)	15,354	(15.1)	16,320	(17.2)
강원도	2,700	(2.9)	2,454	(2.6)	2,603	(3.0)	2,423	(2.4)	2,297	(2.4)
충청북도	9,361	(10.2)	8,860	(9.3)	8,847	(10.1)	8,265	(8.1)	8,280	(8.7)
충청남도	21,068	(22.9)	25,723	(27.1)	21,192	(24.2)	16,030	(15.7)	14,453	(15.3)
전라북도	4,776	(5.2)	4,768	(5.0)	4,300	(4.9)	3,766	(3.7)	3,424	(3.6)
전라남도	2,163	(2.3)	1,952	(2.1)	1,815	(2.1)	1,798	(1.8)	1,719	(1.8)
경상북도	2,869	(3.1)	3,198	(3.4)	3,190	(3.6)	2,914	(2.9)	2,834	(3.0)
경상남도	2,008	(2.2)	2,572	(2.7)	2,549	(2.9)	2,420	(2.4)	2,046	(2.2)
제주시	464	(0.5)	512	(0.5)	452	(0.5)	967	(1.0)	844	(0.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단위: %)



[그림 4-24] 대전시 전출자의 전출 지역별 점유 비율 비교: 2000년과 2019년

다. 대전시 인구 변화 대응방안 및 과제

1) 대전시 기존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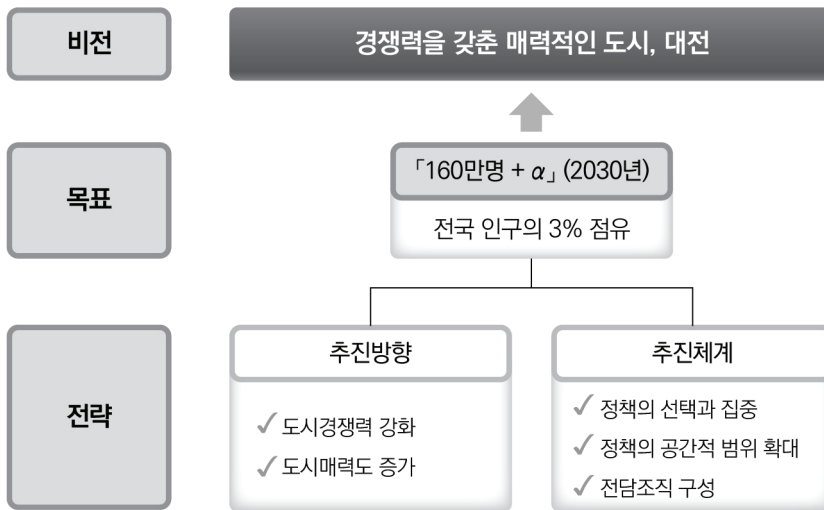
대전시에서는 2010년대 이후 인구의 정체 및 감소를 인식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였다. 주요 시책으로 2013년 수립한 ‘대전시 인구 관리 종합 계획’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시 인구 관리 종합 계획’에서는 [표 4-5]와 같은 9대 정책 과제와 세부 시책을 제안하였다.

[표 4-5] 대전시 인구 관리 종합 계획

구분	9대 정책 과제	세부 시책
1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① 품격 높은 정주 환경 조성 ② 서민 주거 안정화 방안 ③ 녹색 생태 도시 조성 ④ 재난 안전 도시 ⑤ 익사이팅 대전 만들기
2	다양한 일자리 창출	① 기업유치 ②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 ③ 청년 창업 지원 ④ 세종시 이전 연구기관 고학력자 취업 알선 ⑤ 퇴직자 재취업 지원
3	고급 인력 유입 촉진	① 과학벨트 종사자 등 고급 인력 유입 ② 고경력 은퇴자 활동 지원 ③ 우수 인력 정착 지원 ④ 산업 용지 확보 등
4	지역 공동체 활성화	① 지역 커뮤니티 구축 ② 대학생 및 실거주자 대전 주소 갖기 추진
5	찾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 조성	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행사 개최 ②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6	영유아 및 고령 인구 생활 환경 개선	① 출산 장려 ② 육아 보육 서비스 강화 ③ 노인 일자리 창출 ④ 노인 의료 시설 확충 ⑤ 고령 친화 환경 조성
7	평생 교육 도시 조성	① 시민대학 운영 ②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확충 ③ 영재학교 유치 ④ 100세 대비 평생 학습 도시 조성
8	도시 브랜드 구축 및 홍보 강화	①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 ② 도시 브랜드의 전략적 홍보, 지역 명소 기획 보도
9	수도권 인구 유입·국가 균형 발전 촉구	① 세종시 이주 공무원 조기 정착 지원 ②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 지원 ③ 공공기관 유치, 지역 균형 발전 협의체 공조

한편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2015년 대전시에서 수립한 ‘대전시 인구 관리 종합 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정책 연구로 ‘대전광역시 인구 변화와 대응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전시 및 주변도시와의 인구여건 변화·진단 등을 토대로, [그림 4-25]와 같은 대전시 ‘인구 정책의 목표 체계’를 제안하였다.



출처: 임병호 외(2015), p.112

[그림 4-25] 대전시 인구 정책 목표 체계

또한 이 연구에서는 [표 4-5]에서 제시하고 있는 9대 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정책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림 4-26]과 같이 '3대 핵심 정책 5대 지원 정책 그리고 특수 시책'으로 구분·제안하였다. 3대 핵심 정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정주 환경 조성 그리고 영유아 및 고령인구 생활 환경 개선이었다.



출처: 임병호 외(2015), p.115

[그림 4-26] 대전시 인구 정책 유형 구분

2)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정비 시행

최근 전 국토적 차원의 인구 정체 및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 변화에 대한 단순한 일시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례)을 마련하고 있다.⁹⁾

대전시에서도 2010년 이후 진행된 인구의 정체 및 감소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9년 12월 ‘대전광역시 인구 정책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 인구 정책 조례]
○ 목적: 인구 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
○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 정책’이란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대전광역시가 수립·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함
○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기본 계획: 시장은 인구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기본 계획에는 인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과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함
○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 시장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구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인구 구조 불균형 해소 사업, 중·장기 인구 구조 분석 및 사회 경제적 대응 사업, 인구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인구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등

조례 제정의 의미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우선 대전시 차원의 조례 제정은 대전시가 인구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대전시 인구 관리 종합 계획’이나 ‘대전광역시 인구 변화 및 대응 방안’ 등과 같은 계획(연구)의 수립이 이전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게 된다. 조

9) 부산시는 2020년 2월, ‘부산광역시 인구 정책 기본조례’, 대구광역시는 2018년 8월 ‘대구광역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세종시는 2018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를 마련하였다. 이상 도시들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인구 정책의 시행, 인구 정책위원회 설치·기능, 교육시설,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례 제4조 ‘기본 계획’에서 보면, 시장은 인구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기초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이에 따라, 향후 대전시 인구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대전시 인구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

가) 인구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확보

대전시는 그동안 인구 변화에 대해 다양한 시책과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인구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초에 더하여 향후 대전시 인구 변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구 정책의 대상을 과거와 달리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시의 발전이 단순히 개별 도시 단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광역적 차원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전시의 인구 정책도 좀 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상호 출퇴근 인구 규모가 크고, 동일 생활권으로 인식되는 등 두 도시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두 도시가 공조할 필요가 있다. 즉 대전시 개별적 인구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대전시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증가, 인구 유인 정책의 추진 역시 대전시의 인구 변화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전시 인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 규모 자체(수치)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 또는 경쟁력 있는 인구 구조 등도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인구 구조 구축 및 인구 계층 확충에 대한 관심과 정책·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나)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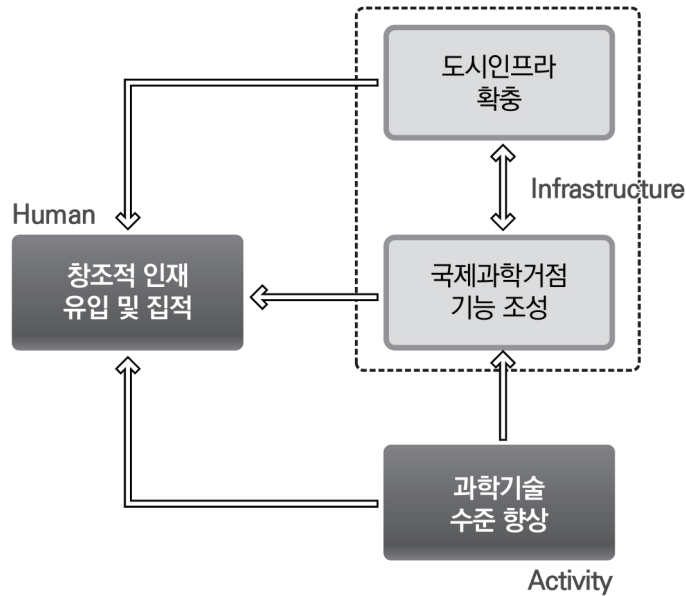
대전시 인구 정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연성 있게 설정 및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보다 영향력 있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는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인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질은 높이는 정책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의 하나로, 대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및 정책의 추진을 제안한다. 대전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추진하기 용이하며, 그 효과가 있는 정책, 즉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발전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인구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와 논의 등을 토대로 볼 때, 대전시 경쟁력은 ‘과학’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시의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인 과학에 기반한 [그림 4-27]과 같은 ‘대전시 도시 발전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대전시는 [그림 4-27]과 같이, 국제 과학 거점 기능과 광역적 도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창조적 인재의 지속적 유입과 집적을 이루고, 이를 통해 과학 기술 수준의 향상을 이루어 냄으로써, 또다시 과학 거점 기능의 수요를 창출하는 등과 같은 도시 발전이 연쇄적(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발전 모델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



출처: 임병호 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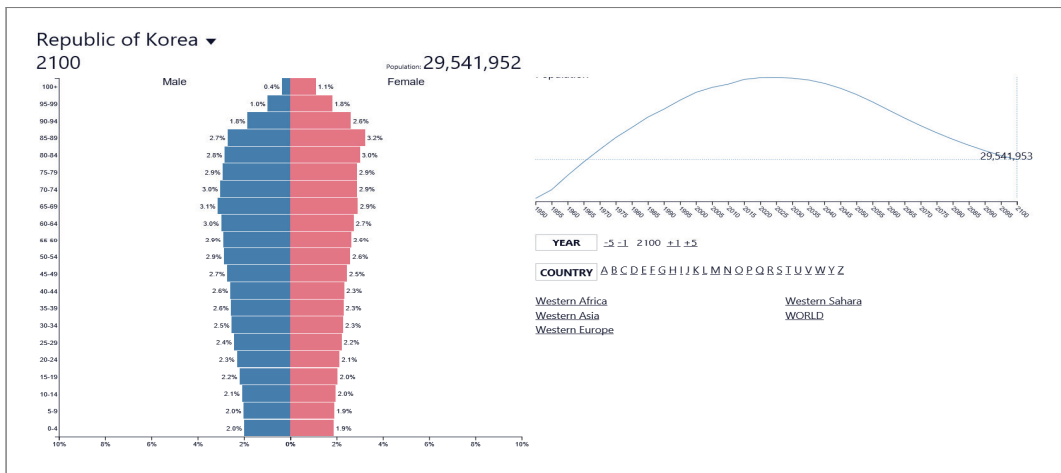
[그림 4-27] 대전시 도시 발전 모델

인구는 다양한 도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최종적 선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구는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이나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3 경남 지역 인구 변화 대응과 삶의 질 제고 전략¹⁰⁾

가. 서론

우리나라 인구수는 2020년 기준 약 5,178만 명 수준이다. 2000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이 7% 이상이 되면서부터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고, 2017년 14%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되었다.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의 국가이며, UN 은 2100년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2,95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의 시대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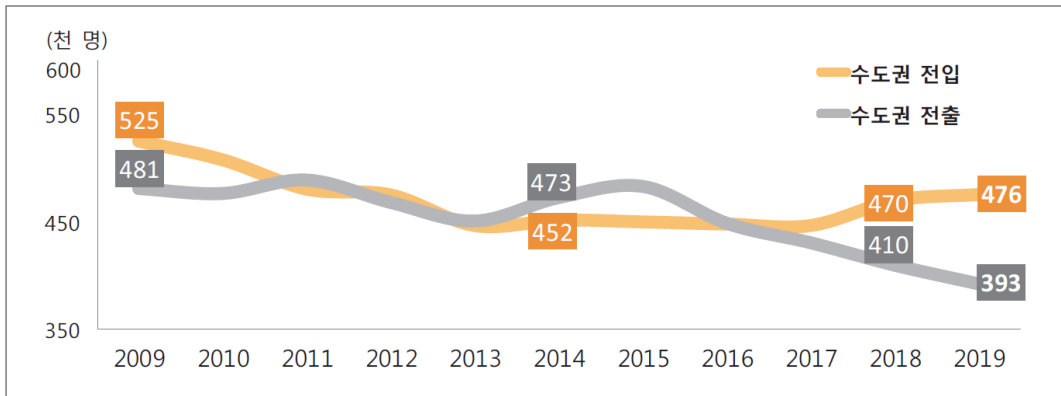
자료: <https://www.populationpyramid.net/>

[그림 4-28]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과 같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은 결국 개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 인력(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소비 감소 등은 지역 발전에 정체를 가져오고, 주거, 교통, 기반 시설 등의 문제들을 야기 하여 다시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격차를 유발한다. 실제로 교육과 일자리 문제로 인해 1차 베이비붐 에코 세

10) 하민지(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대(1979년~1992년 출생),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인구가 수도권에 대거 유입되면서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도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결국 지역 경제, 사회적·문화적 여건 등에서도 격차를 발생시키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삶의 질에도 격차를 발생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국내인구 이동 통계 연보

[그림 4-29] 수도권 전입자 및 전출자 수 추이(2009~2019)

그동안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의 성격으로, 주로 출생률 제고에 집중한 저출생 고령화 대책 중심으로 인구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전 생애 주기별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경남의 경우에도 주력 산업 침체 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 순이동 순위는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인 부산 다음인 2위(약 13천명)인 실정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2019)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20~30대 비율은 2020년 24.4%에서 2047년 13.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상남도는 최근 11월 경상남도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비전 하에

‘경남 인구 희망 플러스(+)²’ 정책을 마련하였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 ‘기회와 희망 주는 젊은 경남’, ‘미래 변화에 준비된 경남 조성’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른 보육, 청년, 여성, 교육, 고령, 기반 등 6대 전략 및 160개 추진 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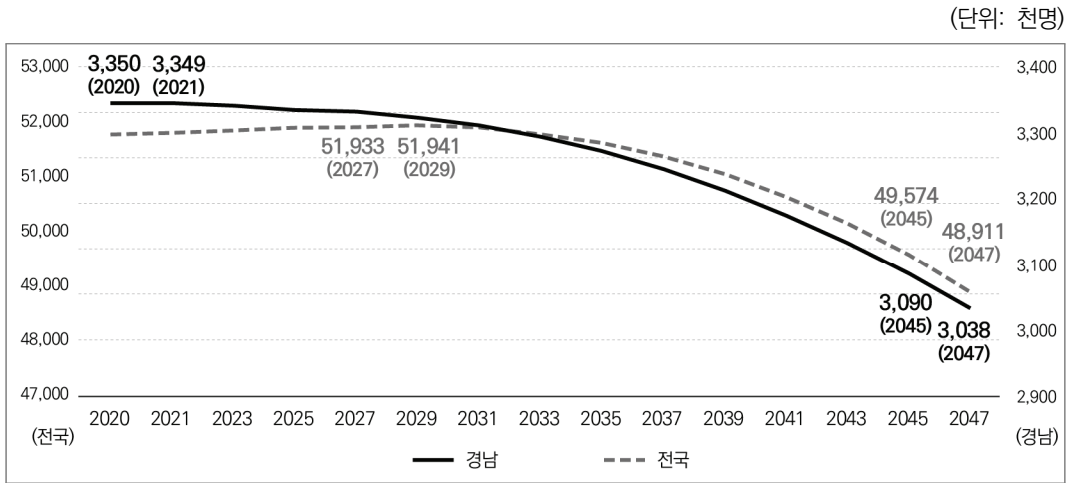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이 향후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나. 경남 지역 인구 변화 현황 및 전망

경남 지역은 합계 출산율¹¹⁾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1.44명에서 2019년 1.05명으로 0.4명이 감소하였으며(2015년 1.44명, 2016년 1.36명, 2017년 1.23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이미 2018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으며,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다(2019년 사망자수 22,105명 > 출생아수 19,250명). 또한 2019년에는 청년 인구인 20~30대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수도권으로 유출되었다. 경남은 2016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이 14.2%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 16.3%, 2024년 20.3%(예상), 2047년 41.4%(예상)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2019)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가 시작되는 것에 비해, 경남 지역은 이보다 이른 2021년부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47년 이후에는 300만 명 선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십인선 외, 2019).

11) 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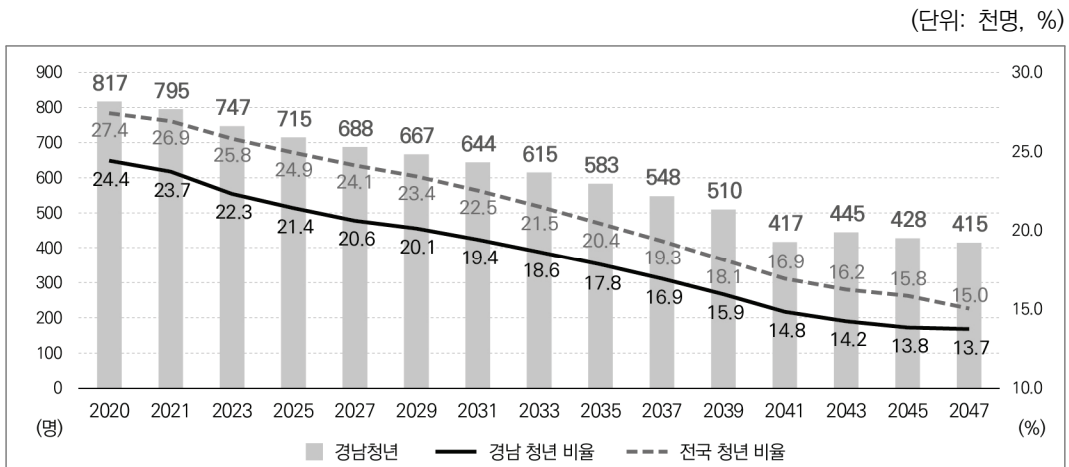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토대로 작성한 심인선 외(2019) 인용

주: 대한민국 상주 인구 대상(외국인 포함), 중위 추계로 출생, 사망, 국제 이동 중위 가정과 국내 이동 기본 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그림 4-30] 전국과 경남 장래 인구 추계 비교

특히 청년 인구인 20대~30대 인구는 2021년 감소가 시작되어 2020년 24.4%보다 2047년에는 10% 감소인 13.7%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토대로 작성한 심인선 외(2019) 인용

주: 대한민국 상주 인구 대상(외국인 포함), 중위추계로 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 가정을 조합한 결과임

[그림 4-31] 경남 지역 20~30대 인구 추계

경남 지역의 인구 이동에 대해 살펴보면, 순 유출은 2019년 전국 8위의 규모이지만 20대의 순 이동률이-3.3%로 전국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출지 순위는 부산,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근 지역인 부산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6] 경상남도 연령별 순이동자수와 순 이동률(2019)

(단위: 천명, %)

구분	계	0~9세	0~19세	20~29세	30~39세	40~59세	60세 이상
순 이동자 수	-9.3	0.2	-2.2	-13.0	0.4	3.1	2.2
순 이동률	-0.3	0.1	-0.7	-3.3	0.1	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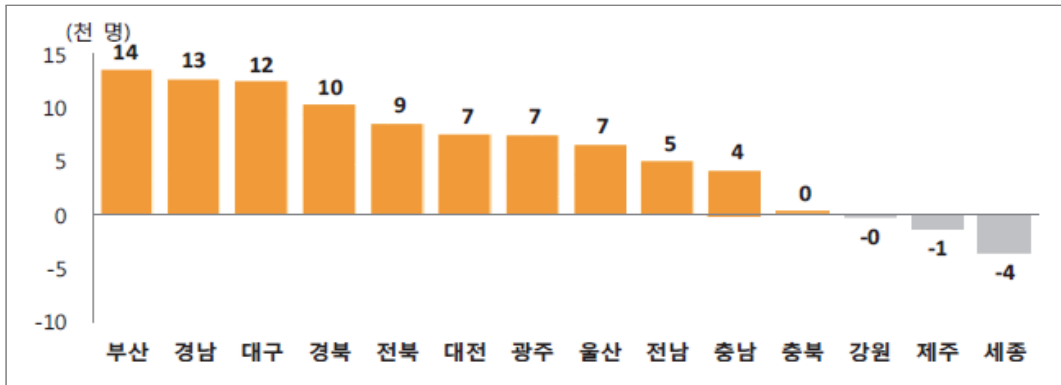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 연보

[표 4-7] 경상남도 3대 전입지 및 전출지(2019)

타 시도에서 전입				타 시도로 전출			
전입자 수	1위	2위	3위	전출자 수	1위	2위	3위
122,000명	부산 (43.0)	경기 (10.8%)	서울 (9.4%)	131,000명	부산 (33.7%)	서울 (14%)	경기 (13.8%)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국내인구 이동통계연보

경남 지역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순 이동은 전국 2위이며(1위 부산), 수도권 전입 인구는 총 40,087명으로 서울(18,326명), 경기(18,020명), 인천(3,74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청년 인구는 전 연령대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규모로 총 23,980명이다. 수도권 내 지역별로는 서울(12,547명), 경기(9,469명), 인천(1,964명) 순이다.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그림 4-32] 시도별 수도권 순이동(2019)

[표 4-8] 경상남도 수도권 전입 청년 인구

구분	총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서울	12,547	5,075	4,642	1,780	1,052
경기	9,469	2,638	3,128	1,948	1,755
인천	1,964	587	663	383	331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에서 발췌

경남 지역 인구 중 수도권으로 전입한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총 19,002명), 가족(총 7,762명), 교육(총 5,258명), 주택(총 4,781명) 문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직업 사유 외에 서울은 교육, 경기와 인천은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인해 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경상남도 수도권 전입 사유별 인구

구분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 환경	자연 환경	기타
서울	18,326	8,704	2,997	1,816	3,375	444	51	939
경기	3,471	1,622	773	568	239	64	22	183
인천	18,020	8,676	3,992	2,397	1,644	349	117	845
계	39,817	19,002	7,762	4,781	5,258	857	190	1,967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국내인구 이동통계연보

경남도내 시·군지역의 인구 관련 주요 현황은 다음의 [표 4-10]과 같다. 우선 고령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중 초고령 지역(12곳), 고령 지역(2곳), 고령화지역(4곳) 순으로 초고령 지역이 67%를 차지한다. 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 지역은 사천시와, 밀양시 그리고 전 군 지역, 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인 고령 지역은 진주시와 통영시, 노인 인구 비율 7% 이상인 고령화 지역은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이다. 인구 증가율은 하동군 -2.04%, 함안군 -2.02%, 고성군 -1.77% 순으로 낮다. 1인 가구 비율은 경남 전체 가구의 29.6%인 391,421가구이며,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가구의 9.4%인 23,83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의령군(41%), 함천군(39.4%), 산청군(37.8%) 순이며,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함천군(24.8%), 의령군(24.5%), 남해군(23.3%) 순으로 나타났다. 데드크로스 현상은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다.

[표 4-10] 경상남도 시군별 인구 관련 현황(2019년)

구분	고령 인구	인구 증가율	1인 가구 비율	독거노인 가구비율	합계 출산율	사망자수	출생아수	추계 인구 (2035)
창원시	13.4	-0.86	28.0	6.9	1.009	5,473	6,249	964,849
진주시	16.1	0.42	31.3	8.9	1.010	2,164	1,972	351,631
통영시	18.2	-1.57	30.9	10.3	0.836	994	536	133,815
사천시	20.9	-1.59	32.1	12.0	0.974	962	497	113,894
김해시	10.6	1.65	25.8	5.6	1.083	2,425	3,431	538,445
밀양시	27.0	-0.87	35.0	16.6	1.104	1,165	457	110,375
거제시	10.0	-0.55	27.7	5.0	1.061	1,094	1,618	287,037
양산시	12.7	0.66	27.3	6.6	1.178	1,599	2,678	405,913
의령군	35.7	-1.73	41.0	24.5	0.975	438	88	28,413
함안군	23.4	-2.02	32.1	14.8	1.058	636	291	71,830
창녕군	29.6	-1.48	35.2	18.4	1.326	798	316	68,842
고성군	29.8	-1.77	34.7	18.4	0.869	633	158	52,900
남해군	36.6	-0.75	36.9	23.3	0.977	702	118	41,531
하동군	32.5	-2.04	35.6	19.3	1.273	600	185	48,211
산청군	35.1	-1.65	37.8	21.1	1.324	504	145	39,150
함양군	32.4	-0.79	37.7	21.2	1.030	521	136	39,416
거창군	26.7	-0.37	32.9	17.5	0.999	669	238	61,955
합천군	38.1	-1.42	39.4	24.8	1.110	728	137	46,641

이상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남 지역의 인구는 초고령 지역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이 10%에 다다르고 있으나, 청년 인구는 수도권으로의 전입 규모가 전국 2위에 달할 정도로 타 지역 유출이 심하여 경남 지역은 가장 우려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 형태를 보여주는 표본임을 알 수 있다.

다. 경남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현황 및 한계

앞서 살펴본 경남 지역 인구 현황에 따라 경상남도의 대응은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추진되고 있는지와 함께 도민들의 관련 인식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노력해왔으며, 출산 및 보육 환경 조성, 고령자 일자리, 건강, 여가, 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 과제들을 진행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 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더하여 청년 세대의 삶의 기반인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등의 제반여건 등을 조성하고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을 함께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최근 11월에는 생애 주기별 인구 시책 마련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여 「2020년~2024년도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인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경남'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양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세부사업은 ①경남형 아이돌봄 모델 개발(거점 어린이 돌봄 센터, 경남형 마을 온종일 돌봄 공간 조성) ②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100% 지원 및 출산 난임 치료 지원 강화, ③한부모, 맞벌이 대상의 경남형 가사 지원과 방학 중 초등 돌봄 교실 이용 아동 대상의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이다.

두 번째 전략인 '청년이 빛나는 경남'은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청년 특별도'라는 도정의 방향에 맞게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주거 안정 정책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은 ①청년 친화 환경 조성(청년 친화 도시, 청년 친화형 살고 싶은 섬 조성), ②청년 창업 기반 육성 위한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자금 지원, 경남 청년 친화 기업 선정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비, 인턴 인건비 등 지원, ③청년 맞춤형 주택

조성, 더불어 나눔 주택 설립을 추진한다.

세 번째 전략인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남’으로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①여성친화 도시 조성, ②여성 맞춤형 일자리 확충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새일 센터 운영 및 인턴 취업 장려금 지원, ③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및 공중 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네 번째 전략인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인’은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특별도 조성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①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공유형 대학 모델 구축,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② 청년 맞춤형 귀농·어·산촌 정착 지원(정착 지원금 지원), 취농직불제·인턴제 추진, ③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생애 주기별 평생 교육 실시하는 사업이다.

다섯 번째 전략인 ‘행복한 경남 실버’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과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 참여 등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사업은 ① 노인 일자리 확대, ② 일자리 수당 단계적 인상, ③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경남형 치매 관리 책임제 실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지막 전략인 ‘인구 변화 선제 대응’은 기반과 문화 조성에 관한 것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에 대한 대응 강화, 맞춤형 인구 시책 발굴,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표 4-11] 경상남도 2020년~2024년 인구 정책 기본 계획

구분	추진 과제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형 아이 돌봄 모델 실현 •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100% 지원 • 경남형 가사 지원, 건강 도시락 지원
청년이 빛나는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친화 환경 조성 • 청년 창업 기반 육성 • 청년 주택 조성 및 설립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친화 도시 확대 • 여성 맞춤형 일자리 확충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여성 안전 및 범죄 예방 지원

구분	추진 과제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 청년 맞춤형 귀농·어·산촌 정착 지원 •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행복한 경남 실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지원 • 인공지능 연계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 신(新) 여가 문화 확산 및 공간 조성
인구 변화 선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맞춤형 인구 시책 발굴 • 가족 친화 문화 확산 • 인구 정책 영향 평가 도입

자료: 경상남도(2020.11.20.) <https://blog.naver.com/gnfeel/222149483609>

다음으로 경남도민들의 인구 문제와 관련한 인식 현황인 저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¹²⁾. 먼저 저출산의 이유와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된 저출산 요인으로는 자녀 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 증대를 22.6%로 가장 높게 꼽았고, 경제 침체 및 직장 불안정 21.3%, 결혼 가치관의 변화 19.2% 순으로 꼽았다. 이러한 순위는 남녀가 약간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 부담을 가장 높게 뽑았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 침체 및 직장 불안정을 가장 높은 이유로 꼽았다.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가정과 직장 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확충이 30.9%로 가장 높았고,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제도 추진이 22.9%, 자녀 양육 관련 직장 지원 21%, 혼인 및 가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회 제도적 지원이 16.1% 순으로 꼽았다. 한편 결혼에 대한 의견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40.6%로 가장 높았고, ‘하는 것이 좋다’ 38.5%, ‘반드시 해야 한다’ 15% 순으로 나타났다. 간략히 정리하면 경남도민들은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꼭 해야 하는 의무로 인식하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저출산에 대해서는 양육 부담 및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경상남도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은 첫 번째 전략으로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경남으로 수립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 불안정에

12) 통계청, 경상남도 사회조사(2019) 결과를 토대로 작성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세부사업인 ‘가족 친화 인증 기업 확산’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서 양육 부담과 이로 인한 직장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며, 전반적으로 양육 및 직장 불안정 해결 등 도내 기업 및 기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동 삶의 질 지수 도출 및 순위¹³⁾에 따르면 경남의 아동 삶의 질 종합 순위는 전국 1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10위), 주관적 행복감(11위), 아동의 관계(7위), 물질적 상황(11위), 위험과 안전(16위), 교육(12위), 주거 환경(15위), 바람직한 인성(8위)으로 나타나 위험과 안전, 주거 환경이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과 안전은 학교 폭력 피해 아동의 비율, 비행 빈도 등이 해당되며, 주거 환경은 과밀한 주거지, 불안정한 거주지에 사는 아동의 비율,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의 비율, 부모의 이웃 간에 신뢰관계 인식, 부모의 지역 사회 안전 인식 등이 해당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삶의 질은 인접하고 있는 시도의 경우에도 속한 곳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종(1위)-충북(15위), 부산(2위)-경남(11위), 광주(5위)-전남(17위) 등 광역시와 광역도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예산 비중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청년 인구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해도 결국 아동의 행복이 결국 전 세대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보다 행복한 지역으로의 이동이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는 물론이고, 아동의 삶의 질이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인구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노인, 여성 대상의 정책 사업 외에 별도의 아동 복지를 위한 정책 사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경남도민 삶의 질 제고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최근 중앙 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의 출산 장려 중심의 인구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한 인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

13) 세이브더칠드런(2020), 2020 한국 아동 삶의 질 심포지엄 자료집

직한 방향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인구 정책은 전 생애 주기별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추진 방향은 지역 차원의 정책이라도 인접 지역간 인구 유인을 위한 경쟁 추구 정책이 아니라 인구의 공유와 상생이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 대상 집단별 사업들을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개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개인의 관점에서의 사고와 욕구를 존중하며, 가족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존중받는 문화로 자리잡아 구성원 모두가 보다 큰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경남 지역에서 현재 계획·추진 중인 사업들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과제들, 즉, 청년, 노인, 여성, 일자리, 교육 등을 제외한 혹은 해당 영역이 존재하나 방향이 조금 상이한 사업 등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에 대해 간략히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보육 지원 방안으로 현재 경남도는 보육료 지급과 지역 차원의 돌봄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외에 직장 내 보육 시설이 확대 운영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공 영역의 보육 시설 확대와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가능한 보육은 양육자에게 또 다른 차원의 편리함과 안정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직장의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족 친화 기업 인증과 같이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장 내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이다. 즉 개인의 삶과 그 방식을 존중하고, 일보다는 가족을 우선하는 가치관 또한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및 확산이 지역 내 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에 대한 투자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남도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중하위권에 해당하며, 특히 위험과 안전,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동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동의 성장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 복지사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제안하자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한 가지로 각종 문화 시설 및 문화 행사의 접근성을 꼽는다. 지역에서 수도권의 다양한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수준만큼은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그와는 차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방식의 친밀하고 세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시설 및 비용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소속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거주 지역에 대한 애착 강화, 사회적 관계를 통한 삶의 만족도 증대 등의 효과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수준 이상의 주민 참여 제도를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마을 단위의 근린커뮤니티 구축, 지역 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관련 역량을 강화를 위한 학습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경남을 비롯한 지역의 인구 정책은 인구 유입을 위한 인접 지역간 경쟁보다는 인구의 공유, 공동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남의 경우 부산, 울산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동남권 인구 정책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엄밀하게는 인구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정부의 의지보다는 개인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차원, 국가적 차원을 넘어 행복한 개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에 인구 정책은 개인을 바라보고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2] 경남 지역 인구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구분	추진 과제
보육 시설 확대	직장 내 보육 시설 확대 및 운영 지원
가족 친화적 문화	직장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 존중을 위한 적극적 노력
아동 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위험과 안전에 관한 환경 개선 • 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 • 교육복지사 확대 배치 운영
문화 향유권 보장	지역 내 예술인과 함께 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지역 공동체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단위 근린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 지역 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 관련 역량 강화 학습 프로그램 지원

제3절

소결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앞에서 논의한 지역 사례를 종합하면, 지역의 인구 정책은 삶의 질 제고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인구 정책의 효과는 정부의 의지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로 인구 유입과 저출산 극복이 수반될 것이다.

앞의 사례를 통해서 지역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이외에 외국인, 유동 인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 상주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구는 줄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학업을 하고, 문화 생활을 즐기는 인구를 포함하여 '생활권 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정책의 영향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 인구 정책인 동시에, 국민 행복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생활 인구를 포함하는 정책은 광역 교통의 발달로 인해 넓어진 생활권에 부합하는 삶의 질 전략이 될 것이다. 수도권 뿐 아니라 대전시와 세종시의 경우도 상호 출퇴근 인구 규모가 크고, 동일 생활권으로 인식되는 등 두 도시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구 정책과 삶의 질 전략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삶의 질 전략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구 정책과 삶의 질 제고 전략은 단기적 관점에서 일시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행복조례', 대전광역시의 '인구 정책 조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일 뿐 아니라 관련된 계획이나 연구수행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인구 정책과 삶의 질 정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 정책은 서로 인구 유입을 경쟁하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간 공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의 경우 부산, 울산과 함께 동남권 인구 정책과 삶의 질 제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만성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인구는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모여든다. 그러므로 삶의 질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기에 지역적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의 삶의 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 요약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 있는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대한민국 행복 측정을 위해 2019년 구축한 행복지표 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표 관련하여 추정치 사용, 일부 지표의 행복과의 관련성 및 방향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지표를 포함한 후보군을 도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영역별 중요도 평가에 있어 건강 영역(0.167)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경제(0.149), 주관적 안녕감(0.136), 안전(0.120), 관계 및 사회 참여(0.114), 교육(0.105), 여가(0.105), 환경(0.104) 순으로 응답했다. 행복지표 2.0은 2019년 연구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다 보니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 주거 분야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향후 영역별 지표 체계의 검토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 만족도, 주거 안정성과 관련한 지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로 구축된 행복지표 2.0을 활용하여 영역별, 지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 영역의 경우 인천은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영역은 서울과 경기도가 교통사고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나타냈고, 세종과 전남은 비교적 높은 등급을 받았다. 환경 영역의 경우 녹지 비율은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제주가 가장 높았다. 인구 천명당 공원수는 세종이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았다. 미세먼지 대기 오염도의 경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전북, 충북, 경기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영역은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고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울산은 제외한 지역에서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업률을 살펴보면, 제

주가 가장 낮았으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은 세종, 울산, 경기도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교육 영역은 최근 5년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17.14명, 2019년 기준)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20, 2019년 기준)이다. 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는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대구가 12.9개로 가장 적으며, 대전은 19.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영역은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강원(129.9개)이 가장 많았으며, 전남(128.6개), 울산(126.7개) 등이 많은 편이다. 반면, 세종(84개), 충남(85.4개)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관계 및 사회 참여 영역은 대인 관계 만족도의 경우, 2019년 기준 경북(58.6%), 전남(57.4%), 강원(57.3%) 등이 높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사회 관계망을 측정하기 위해 살펴본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세종이 87.2%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86%, 광주 85.8% 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가 영역에서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적으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등 호남권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공간 분석 결과, 녹지 지역 비율, 미세먼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문화 기반 시설 등은 공간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그러한 지표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접 지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타지역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녹지 지역, 미세먼지 등은 자연환경적 요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인구 계층, 노인 여가 복지 시설과 문화 기반 시설 등의 문화 인프라 시설 등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들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우울감, 주관적 건강 수준 등 건강 영역 지표 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경험이 많은 지역에서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는 미세먼지와 범죄와도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안전의 영역인 화재, 교통사고, 자살률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건강생활 실천율과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전국의 시군구를 인구 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는 가장 낮았으며, 교통사고, 생활 안전의 안전 등급도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 여가 복지 시설과 문화 기반 시설도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 등급은 가장 양호하게 나왔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최근 국가 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로 관심받고 있다. 따라서 행복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은 물론 지역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지역에서의 행복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지역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것으로 지역적 맥락에서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행복 역량과 관련된 7개의 영역 중에서 건강 영역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복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별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복 향상의 요소는 다차원적이므로 부족한 요인에 집중하여 개선해야 하며 정책적으로 보다 취약한 부분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해식 외, 2019). 예를 들면,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에 따라 건강 생활 실천율이 낮은 산간 지역이나 내륙 농촌 지역에서는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이 높게 나타난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행복 역량 지표를 살펴본 결과, 일부 지표의 경우 인접 지역과 군집을 형성하여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패턴을 나타내는 부문과 관련된 지역의 행복 정책은 인근 지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 인프라, 지역 경제, 교통 등의 이슈에 있어서 행정 구역 단위의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생활권' 개념을 활용하여 동일 생활권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지역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관점의 일시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지속적인 저출산과 대도시,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이동으로 인해 지역의 미래 이슈는 인구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인구 유입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행복 조례, 대전광역시의 인구 정책 조례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일 뿐 아니라 관련된 계획이나 연구 수행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복지표는 주로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조사 통계를 활용하였다. 유사한 정보를 생산하는 다양한 지역 단위 통계 자료 중에서 가능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생산하는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행복 영역에 부합하다고 판단된 일부 자료 예를 들면, 주거 환경 관련 지표, 주거비 부담 지표 등은 지역 단위 자료로 확보하지 못해 지표 체계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의 생산과 자료수집의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한국인의 행복조사’ 문항에 행복 지표로써 제안된 일부를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자료구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책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의 진단과 현상의 이해를 위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행복지표 체계의 개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행복 수준과 행복 역량 지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역량 이론을 기반으로 시·군·구, 시·도 단위의 지역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행복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는 행복 연구는 많지 않으며, 각 지표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간 상관성과 군집 패턴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포럼 개최, 지표 체계 도출, 지역 사례 연구 등 다양한 방식의 협동 연구 방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행복지표 체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 전략으로서의 지역 행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만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한 지역적 현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 단위의 신뢰성 있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자료 부재로 지역 역량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개별 지표 분석 위주로 수행하였다. 지역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지역의 객관적 여건이 주관적 행복감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구교준 외, 2020). 객관적·물리적 환경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관적 만족감이나 행복감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행복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향후 후속 연구는 2020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인의 행복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적 여건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국민 행복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문헌자료

- 구교준 외(2020) 「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삶의 질 차이의 지역분포 분석: 지역 역량의 관점에서」, 정부학연구 26(1), pp.161-182
- 국토연구원(2009), 『알기 쉬운 국토연구방법론』, 국토연구원
- 국회미래연구원(2019), 『한국인의 행복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김연미(2019) 「누스바움의 역량접근과 정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61집, pp.73-107
- 누스바움(Nussbaum, M.C) (2015), 『역량의 창조 (한상연 역)』, 돌베개
- 대전시(2013), 『대전시 인구 관리 종합 계획(대전시 내부 자료)』
- 박인권(2018)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 발전: 역량의 지역 격차 분석」, 공간과 사회 28(2), pp.71-114.
- 변미리 외(2019),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 연구』, 여성가족부
- 변미리 외(2015), 『서울시 1인 가구 대책 정책 연구』
- 변미리(2019), 「1인 가구의 삶의 질」 『한국의 사회 동향』
- 보건복지부(2020), 『제3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 계획(총괄)』
- 서울시(2017), 『서울시 주거 실태 조사 보고서』
- 서울시·서울연구원(2019), 『서울서베이』
- 세이브더칠드런(2020), 『2020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 자료집』
- 심인선 외(2019), 「경남 인구 정책 연구 2: 경남 인구 구조 변화와 청년 이동에 따른

- 지역대응 방안: 비(非)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경남연구원 기획연구
- 임병호 외(2015), 『대전광역시 인구 변화와 대응방 안』, 대전발전연구원
- 임병호 외(2020),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전시의 중부권 허브 도시화 전략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출간예정)
- 정해식 외(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9), 『국민 삶의 질 보고서』, 통계청 통계개발원
- 통계청(2019), 『경상남도 사회 조사』
- 통계청(2020), 『2019년 국내인구 이동 통계 연보』
- Alkire, S.(2005) “Why the Capability Approach?”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pp.115-135.
- Anselin, L., Syabri, I. & Kho, Y. (2006) “GeoDa: An Introduction to Spatial Data Analysis”, *Geographical Analysis*, 38, pp.5-22.
- Easterlin, R. (1995) “Will Ra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pp. 35-47.
- Giovannini, E. (2017) Experiences and Challenges on GDP plus Beyond Issues, KOSTAT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3.15.)
- Helliwell, J., Layard, R.& Sachs, J.(2012) *World Happiness Report*,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Nussbaum, M.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Feminist Economics*, 9, pp.33-59.
- OECD(2013) *OECD Guidelines of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Better Life Initiative
- Sen, A. (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Amsterdam: North Holland.

2 웹사이트

OECD BLI 홈페이지(<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OECD 대한민국 대표부(<https://oecd.mofa.go.kr>)

경상남도(2020.11.20.) 경상남도 공식블로그 갱남피셜
(<https://blog.naver.com/gnfeel/222149483609>)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https://www.index.go.kr/unify/idx-list.do?clasCd=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

Abstract

A Study of Korea's Happiness Map: Examining Regional Contexts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gional conditions related to happines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enhance Koreans' capacity for happines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the following steps. First, we presented a system of happiness indicators to aid in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happiness. We also introduced an evaluation index that examines happiness levels. We then gathered opinions from experts on the happiness indicator system established in 2019 to measure happiness in South Korea. Second, a happiness map of Korea was cre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tatistical data and integrated analysis methods. Spatial analysis showed that spatial correlation was relatively large in the proportion of green space, pollution,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adults, and cultural infrastructure. In other words, these indicators tend to be concentrated around a particular region;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because the indicators have a deep connection with neighboring regions, and therefore form clusters. Third, local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derive happiness strategies within a regional context. Various local researchers provided case studies focusing on specific policies regarding the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proposes implications for a happiness measurement methodology and measures to enhance happiness as a future strategy.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the 2019 happiness indicator system

will become more objective and create synergies in the area of happiness research suitable for local contexts, through collaboration with research institutes at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level.

부록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1차)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부록 3. 인구 변화 대응 지역 발전 방안 포럼 토론문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1차)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행복지표 적합성 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1차)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위해 국민 행복지표 체계를 마련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행복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누스바움(Nussbaum)이 제시한 10개 영역에 근거하여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 참여, 여가 등으로 재구성하였고, 주관적 안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지표 개발을 위해 측정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하며, 지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행복, 삶의 질 연구, 지역 연구, 조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영역과 지표의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신다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국회미래연구원

조사 수행 기관 : 주식회사 에스티아이

※ 주식회사 에스티아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의뢰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 전문 기관입니다.

■ 행복지표(안) : 8개 영역 49개 지표

※ 다음은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8개 영역의 49개 세부 지표들입니다. 국내외 선행 연구와 자문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지표들에 대한 설명을 읽으시고 다음 질문들에 응답해 주십시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건강 생활 실천율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최근 1년 동안 보건 기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안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교통사고와 화재의 평균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범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생활 안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공공 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 의료현황통계」
환경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도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공원 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1일 폐수방류량	환경부, 「산업 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발생량÷주민등록인구(kg/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미세 먼지(PM 2.5)	연 평균 미세 먼지 (미세 먼지(PM2.5) 월별 도시별 대기 오염도)	환경부, 「대기 오염도 현황」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주민등록인구 단위 인구(천명)당 사업체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주택 매매 가격을 기준 시점(2017.11=100.0)과 조사 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 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처
	주택 전세 가격 지수	주택 전세 가격 지수: 주택 전세 가격을 기준 시점(2017.11=100.0)과 조사 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 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처
	상용직 비중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비율	통계청, 한국도시통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 생산액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한 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로 재적 학생수를 총 교원 수로 나눈 값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대학교 학생 수	대학교에 재적되어 있는 학생의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인구 천명당 총 보육 시설 수(0~5세)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관계/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인구 십만명당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대인 관계 만족도	자신의 삶에 있어 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0-10점) 평균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공동체 소속감	공동체 소속감에 대한 만족도(0-10점) 평균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이웃에 대한 신뢰도	이웃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약간 신뢰+매우 신뢰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가족에 대한 신뢰도	가족/친척에 대한 신뢰도에 약간 신뢰+매우 신뢰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시민단체/지역 사회단체에 간혹 참여+활발히 참여+매우 활발히 참여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자원봉사/사회복지/자선단체에 간혹 참여+활발히 참여+매우 활발히 참여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기반 시설총량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신고 체육 시설업 현황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생활 문화 시설의 범위는 생활문화센터, 평생 학습관, 문화의 집, 생활영상시설(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을 포함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문화 관련 예산/인구*10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문화 예술 단체: '전문예술 법인·단체지정제도'에 의해 법인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임의 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노인 천명당(60세 이상)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전반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인생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로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움을 느끼는 정도 (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삶의 의미	전반적으로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국회미래연구원,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정도(0-10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삶의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 최악의 삶(0점)-최상의 삶(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1. 행복지표 영역별 세부 지표의 적합성

문1-1) 행복지표 체계는 8개 영역 4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세부 지표들은 각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부 지표별 적합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건강 생활 실천율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 건강센터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 (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최근 1년 동안 보건 기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영역	지표	지표 근거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강 생활 실천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 건강센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스트레스 인지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우울감 경험률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복지표] 건강 영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추가지표 제안, 대체지표 제안 등

문1-2) 행복지표 체계는 8개 영역 4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세부 지표들은 각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부 지표별 적합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안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교통사고와 화재의 평균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범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생활 안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공공 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 의료현황통계」

영역	지표	지표 근거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안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공공 데이터포털 표준 데이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 의료현황통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복지표] 안전 영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추가지표 제안, 대체지표 제안 등

문1-3) 행복지표 체계는 8개 영역 4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세부 지표들은 각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부 지표별 적합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환경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도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공원 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1일 폐수방류량	환경부, 「산업 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발생량÷주민등록인구(kg/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미세 먼지(PM 2.5)	연 평균 미세 먼지 (미세 먼지(PM2.5) 월별 도시별 대기 오염도)	환경부, 「대기 오염도 현황」

영역	지표	지표 근거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환경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환경부, 「산업 폐수 발생 및 처리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미세 먼지(PM 2.5)	환경부, 「대기 오염도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복지표] 환경 영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추가지표 제안, 대체지표 제안 등

문1-4) 행복지표 체계는 8개 영역 4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세부 지표들은 각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부 지표별 적합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주민등록인구 단위 인구(천명)당 사업체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주택 매매 가격을 기준 시점(2017.11=100.0)과 조사 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 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처
	주택 전세 가격 지수	주택 전세 가격 지수: 주택 전세 가격을 기준 시점(2017.11=100.0)과 조사 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 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처
	상용직 비중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비율	통계청, 한국도시통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 생산액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영역	지표	지표 근거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택 매매 가격 지수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택 전세 가격 지수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상용직 비중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업률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통계청, 한국도시통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복지표] 경제 영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추가지표 제안, 대체지표 제안 등

문1-5) 행복지표 체계는 8개 영역 4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세부 지표들은 각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부 지표별 적합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한 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로 재적 학생수를 총 교원 수로 나눈 값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대학교 학생 수	대학교에 재적되어 있는 학생의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인구 천명당 총 보육 시설 수(0~5세))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영역	지표	지표 근거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학생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복지표] 교육 영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추가지표 제안, 대체지표 제안 등

문1-6) 행복지표 체계는 8개 영역 4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세부 지표들은 각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부 지표별 적합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관계/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인구 십만명당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대인 관계 만족도	자신의 삶에 있어 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0-10점) 평균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공동체 소속감	공동체 소속감에 대한 만족도(0-10점) 평균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이웃에 대한 신뢰도	이웃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약간 신뢰+매우 신뢰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관계/ 사회 참여	가족에 대한 신뢰도	가족/친척에 대한 신뢰도에 약간 신뢰+매우 신뢰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시민단체/지역 사회단체에 간혹 참여+활발히 참여+매우 활발히 참여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자원봉사/사회복지/자선단체에 간혹 참여+활발히 참여+매우 활발히 참여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영역	지표	지표 근거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관계/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인 관계 만족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소속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웃에 대한 신뢰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족에 대한 신뢰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복지표] 관계/사회 참여 영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추가지표 제안, 대체지표 제안 등

문1-7) 행복지표 체계는 8개 영역 4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세부 지표들은 각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부 지표별 적합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기반 시설총람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신고 체육 시설업 현황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생활 문화 시설의 범위는 생활문화센터, 평생 학습관, 문화의 집, 생활영상시설(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을 포함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문화 관련 예산/인구*10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문화 예술 단체: '전문예술 법인·단체지정제도'에 의해 법인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임의 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노인 천명당(60세 이상)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영역	지표	지표 근거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기반 시설총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신고 체육 시설업 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복지표] 여가 영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추가지표 제안, 대체지표 제안 등

문1-8) 행복지표 체계는 8개 영역 4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세부 지표들은 각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부 지표별 적합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전반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움을 느끼는 정도 (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삶의 의미	전반적으로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정도(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삶의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 최악의 삶(0점)-최상의 삶(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영역	지표	지표 근거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삶의 의미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삶의 만족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행복지표] 주관적 안녕감 영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추가지표 제안, 대체지표 제안 등

2. 행복지표 영역별 세부 지표 우선순위

문2) 각 영역에 속해 있는 세부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해 주십시오. (예 - '건강' 영역의 세부 지표 8개의 우선순위를 1위 ~ 8위까지 선정해 주십시오.)

영역	지표	순위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 위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 위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 위
	건강 생활 실천율	() 위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 위
	스트레스 인지율	() 위
	우울감 경험률	() 위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 위
안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 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 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 위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 위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 위
환경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 위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 위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 위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 위
	미세 먼지(PM 2.5)	() 위

영역	지표	순위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 위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 위
	주택 매매 가격 지수	() 위
	주택 전세 가격 지수	() 위
	상용직 비중	() 위
	실업률	() 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 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 위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 위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 위
	대학교 학생 수	() 위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 위
관계/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 위
	대인 관계 만족도	() 위
	공동체 소속감	() 위
	이웃에 대한 신뢰도	() 위
	가족에 대한 신뢰도	() 위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 위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 위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 위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 위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 위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 위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 위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 위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 위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 위
	인생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로움	() 위
	삶의 의미	() 위
	삶의 만족도	() 위

3. 행복지표 영역 가중치

문3) 아래에 제시된 8개 영역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영역	상대적 중요도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사회 참여	
여가	
주관적 안녕감	

문4) [행복지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추가지표 제안, 대체지표 제안 등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행복지표 적합성 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1차 델파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 조사에서 행복지표의 적합성과 우선순위,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귀하의 1차 조사 응답 결과는 이번 2차 조사에 이용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주신 개방형 의견은 본 연구에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응답한 모든 전문가들이 평가하신 각 지표별 적합도의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 범위'와 함께, 귀하의 1차 조사 응답을 보여드립니다. 또한 각 지표에 대해 평가해 주신 우선순위를 상대적 중요도로 환산해서 보여 드릴 것입니다. 1차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2차 조사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의 2차 조사 응답은 1차 조사 응답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신다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 결과는 통계법 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됩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주식회사 에스티아이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식회사 에스티아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의뢰로 전문가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전문기관입니다.

1. 행복지표 영역별 세부 지표의 적합성

문1-1) 행복지표 체계는 8개 영역 4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건강 영역 세부 지표들에 대한, 1차 조사 모든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 (적합도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 범위)와 귀하의 1차 조사 응답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각 세부 지표가 '건강'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귀하의 2차 응답은 1차 응답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건강 생활 실천율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 건강센터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 (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최근 1년 동안 보건 기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질병관리청, 「지역 사회건강조사」

* 1차 조사 결과 ‘매우 부적합’을 0점 ~ ‘매우 적합’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적합도의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영역	지표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2차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0점)	→ (25점)	보통 (50점)	→ (75점)	매우 적합 (100점)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78.75	25.03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70.00	25.44	50~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68.75	27.00	50~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강 생활 실천율	76.25	21.15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55.00	23.48	50~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스트레스 인지율	78.13	22.78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우울감 경험률	80.00	22.07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60.00	24.55	50~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1-2) 아래는 안전 영역 세부 지표들에 대한 1차 조사 모든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 (적합도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 범위)와 귀하의 1차 조사 응답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각 세부 지표가 '안전'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귀하의 2차 응답은 1차 응답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안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교통사고와 화재의 평균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범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지역 안전 지수를 분야별로 상대 등급을 부여한 현황 중 생활 안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공공 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 의료현황통계」

영역	지표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2차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0점)	→ 보통 (50점)	→ 매우 적합 (100점)		
안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78.13	20.56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83.75	19.24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78.75	21.60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59.38	21.70	50~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70.63	26.49	50~93.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1-3) 아래는 환경 영역 세부 지표들에 대한 1차 조사 모든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 (적합도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 범위)와 귀하의 1차 조사 응답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각 세부 지표가 '환경'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귀하의 2차 응답은 1차 응답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환경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도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공원 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1일 폐수방류량	환경부, 「산업 폐수 발생 및 처리현황」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발생량÷주민등록인구(kg/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미세 먼지(PM 2.5)	연 평균 미세 먼지 (미세 먼지(PM2.5) 월별 도시별 대기 오염도)	환경부, 「대기 오염도 현황」

영역	지표	평균	표준 편차	1분위~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환경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76.25	22.61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73.75	26.52	50~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61.88	24.01	50~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71.25	23.03	50~93.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미세 먼지(PM 2.5)	81.88	25.31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1-4) 아래는 경제 영역 세부 지표들에 대한 1차 조사 모든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 (적합도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 범위)와 귀하의 1차 조사 응답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각 세부 지표가 ‘경제’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귀하의 2차 응답은 1차 응답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주민등록인구 천명당 조사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주민등록인구 단위 인구(천명)당 사업체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주택 매매 가격을 기준 시점(2017.11=100.0)과 조사 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 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처
	주택 전세 가격 지수	주택 전세 가격 지수: 주택 전세 가격을 기준 시점(2017.11=100.0)과 조사 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 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처
	상용직 비중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비율	통계청, 한국도시통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 생산액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영역	지표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72.50	23.20	50~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64.38	24.60	50~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택 매매 가격 지수	62.50	24.02	50~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택 전세 가격 지수	61.88	24.01	50~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상용직 비중	72.50	24.55	50~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역	지표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실업률	80.63	24.99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74.38	24.99	50~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71.88	26.06	50~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1-5) 아래는 교육 영역 세부 지표들에 대한 1차 조사 모든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 (적합도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 범위)와 귀하의 1차 조사 응답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각 세부 지표가 ‘교육’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귀하의 2차 응답은 1차 응답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한 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로 재적 학생수를 총 교원 수로 나눈 값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대학교 학생 수	대학교에 재적되어 있는 학생의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인구 천명당 총 보육 시설 수(0~5세)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영역	지표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76.25	22.61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52.50	25.19	25~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학생 수	50.00	21.18	50 ~68.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78.13	26.67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1-6) 아래는 관계/사회 참여 영역 세부 지표들에 대한 1차 조사 모든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 (적합도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 범위)와 귀하의 1차 조사 응답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각 세부 지표가 ‘관계/사회 참여’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귀하의 2차 응답은 1차 응답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관계/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인구 십만명당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대인 관계 만족도	자신의 삶에 있어 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0-10점) 평균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공동체 소속감	공동체 소속감에 대한 만족도(0-10점) 평균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이웃에 대한 신뢰도	이웃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약간 신뢰+매우 신뢰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가족에 대한 신뢰도	가족/친척에 대한 신뢰도에 약간 신뢰+매우 신뢰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시민단체/지역 사회단체에 간혹 참여+활발히 참여+매우 활발히 참여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자원봉사/사회복지/자선단체에 간혹 참여+활발히 참여+매우 활발히 참여에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영역	지표	평균	표준 편차	1분위~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관계/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82.50	23.48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인 관계 만족도	78.75	22.32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소속감	80.00	22.07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웃에 대한 신뢰도	80.00	20.57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족에 대한 신뢰도	78.75	25.03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상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73.13	21.47	50~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73.75	21.15	75~93.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80.00	22.79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81.88	23.33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1-7) 아래는 여가 영역 세부 지표들에 대한 1차 조사 모든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 (적합도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 범위)와 귀하의 1차 조사 응답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각 세부 지표가 ‘여가’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귀하의 2차 응답은 1차 응답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기반 시설총량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신고 체육 시설업 현황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생활 문화 시설의 범위는 생활문화센터, 평생 학습관, 문화의 집, 생활영상시설(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을 포함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문화 관련 예산/인구*10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문화 예술 단체: ‘전문예술 법인·단체지정제도’에 의해 법인 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임의 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현황통계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노인 천명당(60세 이상)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영역	지표	평균	표준 편차	1분위~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69.38	26.24	56.25~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70.00	25.44	56.25~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68.75	27.59	56.25~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68.13	24.67	50~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55.63	22.99	50~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68.75	26.40	50~93.75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1-8) 아래는 주관적 안녕감 영역 세부 지표들에 대한 1차 조사 모든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 (적합도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 범위)와 귀하의 1차 조사 응답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각 세부 지표가 ‘주관적 안녕감’ 영역을 측정하는데 적합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귀하의 2차 응답은 1차 응답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역	지표	지표 설명	출처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전반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인생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로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움을 느끼는 정도 (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삶의 의미	전반적으로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정도(0-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삶의 만족도	전반적 삶의 만족도 : 최악의 삶(0점)-최상의 삶(10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 행복조사(2020)

영역	지표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3분위	귀하의 1차 응답	적합도 평가				
						매우 부적합	→	보통	→	매우 적합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86.25	23.99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생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로움	78.75	23.03	56.25 ~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삶의 의미	80.00	25.44	56.25 ~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삶의 만족도	89.38	18.68	75~100	(본인 응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행복지표 영역별 세부 지표 우선순위

문2) 1차 조사에서는 각 영역별 세부 지표의 우선순위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래는 우선순위 응답을 상대적 중요도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1차 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영역별 세부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영역별 세부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의 합은 100이 되도록 해 평가해 주세요)

1차 조사결과는 순위를 상대적 중요도로 환산하였는데, 순위 합계 가중치, 순위 역수 가중치를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참고〉 순위 합계 가중치, 순위 역수 가중치 계산 방법

지표	순위	순위 합계 가중치		순위 역수 가중치	
		순위의역순위 (N-Ri+1)	(표준화) 가중치	순위의 역수(1/Ri)	(표준화) 가중치
A	1	7	$7 \div 28 = 0.250$	1.000	$1.000 \div 2.593 = 0.386$
B	2	6	$6 \div 28 = 0.214$	0.500	$0.500 \div 2.593 = 0.193$
C	3	5	$5 \div 28 = 0.179$	0.333	$0.333 \div 2.593 = 0.129$
D	4	4	$4 \div 28 = 0.143$	0.250	$0.250 \div 2.593 = 0.096$
E	5	3	$3 \div 28 = 0.107$	0.200	$0.200 \div 2.593 = 0.077$
F	6	2	$2 \div 28 = 0.071$	0.167	$0.167 \div 2.593 = 0.064$
G	7	1	$1 \div 28 = 0.036$	0.143	$0.143 \div 2.593 = 0.055$
합계		28	1.000	2.593	1.000

영역	지표	귀하의 1차 응답 결과 (순위)	상대적 중요도 (순위 합계 가중치)	상대적 중요도 (순위 역수 가중치)	2차 평가 (상대적 중요도)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본인 응답)	18.9%	27.6%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 수	(본인 응답)	11.7%	9.8%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종사 의사 수	(본인 응답)	11.0%	9.2%	
	건강 생활 실천율	(본인 응답)	11.5%	11.6%	
	인구 십만명당 정신 건강 증진 기관 수	(본인 응답)	10.6%	9.9%	
	스트레스 인지율	(본인 응답)	13.8%	12.2%	
	우울감 경험률	(본인 응답)	11.9%	9.6%	
	연간 보건 기관 이용률	(본인 응답)	10.6%	10.1%	
계			100.0%	100.0%	100.0%
안전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교통사고 및 화재'	(본인 응답)	23.0%	20.9%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범죄'	(본인 응답)	22.2%	21.6%	
	지역 안전 등급 현황 중 '생활 안전'	(본인 응답)	23.8%	25.9%	
	단위 면적당 지역 경찰관서 수	(본인 응답)	16.3%	17.7%	
	인구 십만명당 응급 의료 기관 및 응급실 운영 기관	(본인 응답)	14.7%	13.9%	
계			100.0%	100.0%	100.0%
환경	도시 지역 중 '녹지 지역 비율'	(본인 응답)	22.8%	25.9%	
	인구 천명당 공원의 수	(본인 응답)	19.2%	21.8%	
	인구 천명당 1일 산업 폐수 방류량	(본인 응답)	21.8%	21.0%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본인 응답)	18.2%	16.7%	
	미세 먼지(PM 2.5)	(본인 응답)	18.0%	14.6%	
계			100.0%	100.0%	100.0%
경제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본인 응답)	11.0%	13.8%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본인 응답)	11.9%	11.9%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본인 응답)	12.4%	12.7%	
	주택 전세 가격 지수	(본인 응답)	13.6%	12.6%	
	상용직 비중	(본인 응답)	12.5%	13.3%	
	실업률	(본인 응답)	13.9%	14.9%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본인 응답)	13.5%	11.8%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본인 응답)	11.2%	9.1%	
계			100.0%	100.0%	100.0%

영역	지표	귀하의 1차 응답 결과 (순위)	상대적 중요도 (순위 합계 가중치)	상대적 중요도 (순위 역수 가중치)	2차 평가 (상대적 중요도)
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본인 응답)	23.0%	27.4%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 수	(본인 응답)	26.8%	29.5%	
	대학교 학생 수	(본인 응답)	24.3%	20.5%	
	영유아 천명당 보육 시설 수	(본인 응답)	26.0%	22.6%	
계			100.0%	100.0%	100.0%
관계/ 사회 참여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본인 응답)	14.9%	19.0%	
	대인 관계 만족도	(본인 응답)	11.3%	10.0%	
	공동체 소속감	(본인 응답)	11.4%	9.5%	
	이웃에 대한 신뢰도	(본인 응답)	12.0%	10.4%	
	가족에 대한 신뢰도	(본인 응답)	9.9%	10.3%	
	시민, 지역 사회 단체(반사회, 주민 조직 등) 참여 정도	(본인 응답)	10.8%	10.5%	
	자원봉사, 사회 복지 단체 참여 정도	(본인 응답)	10.8%	10.1%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본인 응답)	8.3%	7.0%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본인 응답)	10.6%	13.2%	
계			100.0%	100.0%	100.0%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	(본인 응답)	21.2%	24.9%	
	인구 십만명당 체육 시설 수	(본인 응답)	20.0%	20.7%	
	인구 만명당 생활 문화 시설 수	(본인 응답)	18.7%	16.6%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액	(본인 응답)	17.1%	16.3%	
	지역 문화 예술 법인, 단체 수	(본인 응답)	13.7%	13.0%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수	(본인 응답)	9.3%	8.5%	
계			100.0%	100.0%	100.0%
주관적 안녕감	행복감	(본인 응답)	31.0%	36.6%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움	(본인 응답)	20.5%	21.1%	
	삶의 의미	(본인 응답)	23.0%	21.3%	
	삶의 만족도	(본인 응답)	25.5%	21.0%	
계			100.0%	100.0%	100.0%

3. 행복지표 영역 가중치

문3) 1차 조사에서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8개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아래는 1차 조사 모든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 (상대적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4분위수 범위)와 귀하의 1차 조사 응답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귀하의 2차 응답은 1차 응답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역	평균	표준 편차	1분위~3분위 범위	귀하의 1차 응답	2차 평가 상대적 중요도
건강	16.7%	8.00	12.25~20	(본인 응답)	
안전	12.0%	4.49	10~15	(본인 응답)	
환경	10.6%	2.70	10~10.75	(본인 응답)	
경제	15.0%	4.77	12~15.75	(본인 응답)	
교육	10.6%	3.40	10~12	(본인 응답)	
관계/사회 참여	11.4%	4.21	10~15	(본인 응답)	
여가	10.5%	3.81	8.25~13	(본인 응답)	
주관적 안녕감	13.2%	5.41	10~15.75	(본인 응답)	
계	100.0%	-		100.0%	100.0%

문4) [행복지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3

인구 변화 대응 지역 발전 방안 포럼 토론문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The poster features a dark blue background with a white map of South Korea in the center. Several stylized human figures are shown interacting with large puzzle pieces that form the map. The text is in white and yellow. At the bottom, there are logos for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d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Research Institutes.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방안**

2020. 11. 12(목) 14:00~16:00
국회 본관 1층 3식당 별실

주최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시도연구원협의회**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Research Institutes

토론문

서왕진(서울연구원 원장)

□ 들어가며

- 불균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이 내재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도시 및 지역 내적인 양극화(polarization)나 지역간 격차는 불가피
 - 이는 국가경제의 공간 분업(spatial division of labour)에 따른 산물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처방책이란 것도 근원적 해결은 요원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완화나 최소화에 주력
- 이에 참여정부 이래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추진된 바, 참여정부 이래 여러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로 이어짐
 - 참여정부에 의해 시작된 국가 균형 발전의 제도적 기반 조성 노력은 이어지는 ‘광역경제권’ 전략(이명박정부)→ ‘지역 균형 발전’ 개념에 입각한 지역 생활권 전략(박근혜정부)을 거쳐,
 -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다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복원되기에 이르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 뉴딜’ 등의 구상도 모색 중에 있음

□ 지방소멸론 대두에 즈음해

- 이런 상황에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지역 불균형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임
 - 이 지방소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향후 30년 후 전국 238개 지자체 중 85곳이 소멸된다는 암울한 현실이 가설로 제시되고 있음

이것이 일종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론적 타당성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긴 하나,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극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기도 함

◎ 지방소멸론에 관하여

- 2014년 5월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 지자체의 절반에 달하는 896개의 지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마스다 보고서'에 기초한 주장
- 마스다 히로야는 '마스다 보고서' 발표 이후 연구 자료와 논의를 재정리해 『지방소멸론』을 출간하여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는가를 문제 제기함. 특히, 저자는 동경 일극 집중이 인구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진단
- 이 지방소멸론에 따라 국내에서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소멸위험지수를 통해 볼 때, 향후 30년 내에 228개 지자체 중 85곳이 사라진다는 연구도 제시된 바 있음

※소멸위험지수: 65세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중 0.5 이하면 30년내 소멸가능성이 큰 '소멸위험진입군'과 '소멸고위험군'에 해당

- 지방소멸론의 대두는 그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에 대해 진지한 진단과 성찰이 요구되는 현상인 동시에, 불균형 문제의 기저에는 경제적 문제가 놓여있고 그것이 인구의 지리적 이동, 저출산·고령화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말하자면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해결이 난망한 구조적 현안임을 시사

- 20여 년에 가까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론이 대두되는 현 상황은 불균형 현상에 대한 문제 진단은 물론, 전략적 접근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성찰해야 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의 신성장에 기초한 선순환의 창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사람중심의 균형 발전” 관점 등 정책(전략)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 등도 긴요한 과제로 부상하는 대목이기도 함

□ 지방소멸론의 시대에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기대하며

- 지방소멸론의 시대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이나 접근이 긴요
- 우선 진단 및 평가와 관련해 현재의 불균형 양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객관적·체계적인 평가가 시급

- 진단이 부적절하면 처방의 실효성 또한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불균형에 대한 원인 진단,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전략 등 그간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필요
- 이와 관련해 오늘 발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인구 이동, 그리고 관련된 수도권 정주 여건(주택 위기) 등은 진단에 중요한 일차적 요소인 것이 사실이나, 향후에는 단순히 물적 환경에 관한 지표를 넘어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역간 격차, 특히 삶의 질과 직결된 다면적 격차 현상 등을 다각적으로 진단·평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봄
- 아울러 수도권 대 비수도권에 대한 비교 분석 및 평가에 더해, 도시 대(對) 지역(혹은 도시 대 농촌), 중심 도시 대 주변 지역, 대도시 대 주변 중소도시간 관계 등 다양한 공간 차원을 대상으로 지역간 경제적·비경제적 관계성을 다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노력도 긴요하다고 봄
- 상술한 진단 및 평가에 기초해, 향후 지방소멸론의 시대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오늘 발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인식을 같이하는바, “3生 전략”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봄
- 향후 국가 균형 발전정책의 방향은 ‘상생(相生)/재생(再生)/자생(自生)’의 전략 방향이 긴요
- 상생(相生)의 방향과 관련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다양한 지역들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는 상생을 정책(전략)의 방향으로 하여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불균형의 문제는 개별 지역, 특히 자원이나 잠재력이 취약한 지역들은 고립적 혹은 분절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 도시와 주변 지역간, 중심 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들이 상호 보완적 자원들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상생의 전략, 즉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간 연계와 통합에 의해 시너지의 창출이 바람직
- 재생(再生)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발표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균형 발전 뉴딜 등 “재생기반 접근”이 중요한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

- 특히 재생의 관점 또한 단순히 주거 재생이나 나열적 지역 개발 성격의 전략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정점으로 하는 급속한 기술 주기를 고려한 산업 재생에 초점, 즉 '지역 산업 뉴딜'로 전략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

접근방식도 한국형 뉴딜을 정하고 이를 지역으로 배분 혹은 하달하는 하향적 접근보다는 “상향적 접근”, 즉 온전히 지역의 관점에서 산업뉴딜을 구상하고 이를 취합해 한국형 뉴딜로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

-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론의 시대에 균형 발전 정책은 자생(自生)의 방향이 중요한 방향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봄

- 진정한 균형 발전이란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균형적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물적 요소나 자원들의 균형적 배분, 인구의 지리적 이동과 같은 현상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립적·자생적 발전을 지향해야 할 것임

- 이런 맥락에서 균형 발전 정책 속에 각종 자원과 권한, 책임의 지방이양, 특히 재정 분권을 위한 전략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 이러한 분권의 토대 위에 지역의 자치적·자주적 역량도 강화되어야 하는 바, 지역 산업 맞춤형의 인적 자원 개발을 포함해 지역 주민 중심의 종합적인 역량 강화 전략이 촘촘히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봄

토론문

송교욱(부산연구원 원장)

1. 지역 인구 위기 차원에서 본 동남권 인구 실태

- 동남권 인구는 2015년에 인구정점(800만명)을 찍고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냄
- 사회적 요인인 인구 이동을 보면, 2000년 이후 동남권은 타시도에서 동남권으로 연평균 16.6만명이 전입하고, 19.5만명이 타시도로 전출하여 연평균 약 3만명의 순유출을 보임
- 문제는 순유출 인구중 청년층(15~34세)의 유출이 전체 유출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동남권의 미래 세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심각성이 있음
- 권역 내를 보면 실제 지난 20년간 부산이 동남권 전체 유출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경남, 울산의 인구 유출이 본격화 되는 경향이 있음
- 동남권의 인구유출은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76.0%, 충청권 15.5%를 차지
- 중심 도시의 쇠퇴는 동남권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요인임
- 동남권 메가시티는 결국 부산의 중추 관리 기능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2. 국토 불균형에 대한 정부의 대응 비교

- 최근 수도권 집중과 지역 쇠퇴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언제나 소리만 요란하고 몇 년을 주기로 반복하는 정치 이슈로만 회자됨

1) 우리나라 대응

- 정부의 지속적인 각종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 대도시 인구 분산,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등에도 지난 60여 년간 수도권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경기도를 넘어 충청도까지 수도권 경계가 확대되는 양상임

-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이후 30년간 830만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기간 인천시·경기도 인구증가 규모와 동일한 실정으로 극단적 국토 불균형 성장을 반영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국토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은 일본의 대응과는 차별화됨. 즉 국가 성장을 위한 지역 희생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현재에도 지속되는 현실임

〈표〉 1990년 이후 수도권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1990년도	2020년 10월	30년 증가인구	비고
전국	43,410,899	51,780,579	8,369,680	
서울시	10,612,577	9,699,232	-913,345	
인천시	1,817,919	2,942,553	1,124,634	
경기도	6,155,632	13,388,485	7,232,853	
수도권	18,586,128	26,030,270	7,444,142	년평균 248,047

2) 일본대응

- 일본은 2017년 수도권인 도쿄권으로 12만명이 전입초과된 3,644만명으로 전국인구의 30%를 차지
- 2014년 일본 창성 회의에서 발표한『마스다 보고서』는 일본이 현재 추세대로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 계속된다면 2040년까지 896개 지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2014년 9월 아베 내각은 도쿄 일극 집중을 시정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창생 전략’을 수립
 - 주요 내용은 일본 인구 1억명을 유지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증가와 고용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함

- 시행 첫해인 2015년 일본 합계 출산율은 1.43에서 1.45로 상승
- 일본의 지방 창생 종합 전략에서의 비전은 '지방에서 태어나서 배우고 일하고 산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 이주 유도로 요약됨

3. 결론

- 국토 불균형과 인구 문제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지속적인 해소 정책이 진행되어야 그 결실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보면 '골든타임'이 지남
- 따라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특단의 정책 추진이 필요
- 결론적으로 최소한 대기업의 신산업 진출이나 공장 증설은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유인하는 방안이 정부의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업의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이 필요
-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10~30년 동안 법인세 면제 등 가시적 지역 인구 정착 성과가 날 때까지 강력한 추진 필요

토론문

이용식(인천연구원 원장)

□ 지역소멸(인구위기)의 본질과 종합적 인식

- 1)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지속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인구 불균형 심화, 인구 이동의 원인으로 규명하고 있는 일자리, 교육, 정주 환경에 기초한 대응 방향은 특히, '정치적·정서적' 관점에서 깊이 공감하는 사항임. 그러나 공감의 수준을 넘어 인구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2) 인구 이동 현상은 복잡한 사회 구조의 결과물로서 단일하고 단순한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현상임. 따라서 정책 추진에 따른 인과 구조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망 결과를 종합적·과학적으로 이해한 이후 시도해야 할 것임.
- 3) 인구 감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가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핵심으로서 인구의 공간적 집중은 경제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임. 그러나 정치적·정서적 관점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경제 성장에 따라 도시화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로의 집적이 자연스러운 추세임
 - 미국 국토의 3%에 일자리 86%가 있고 GDP의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 집적이 두드러져 미국 Top6 대도시가 GDP의 1/4, Top23 대도시(인구 40%)가 GDP의 50%를 생산하고 있음.
 - 도시화율 50% 이상 국가의 1인당 소득은 50% 이하 국가의 5배임.
- 4) 지역 소멸 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의 본질은 '지역 인구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 간 인구 격차'임.
 - 수도권도 지역이므로 '지역 인구 위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님. 정치적, 정서적 관점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역 간 인구 격차를 문제라고 한다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문제의 본질이 아님.

- 발표에서 인용한 국토연구원 자료에 나타나듯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인구 격차' 내지는 '영호남 인구 감소'가 문제임.
- 영호남 인구는 1960년 전체 인구의 57%에서 2020년 8월 현재 34.9%로 축소 (충청은 하락 후 반등).
- 공간적 인구 집중이 문제라면 수도권 규제를 충청과 강원 영서 지역까지 확대해야 함.

5) 지금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은 국가 - 지역 차원, 중앙 - 지방 차원, 지역-지역 차원의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함. 또한 국가의 인구 정책 목표와 지역의 인구 정책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국가는 물론 각 지방의 인구 정책이 상호 부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따라서 종합적·과학적·객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함.

- 절대인구가 감소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지역에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 인구 정점의 시기 이후에는 어디에선가 감소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수도권 인구를?
- 수도권 인구의 감소는 지방엔 발전의 동력?
- 수도권 인구 감소에 따른 수도권 도시들의 자체 인구 문제는?

□ 지역 간 인구 격차에 대한 대책

- 1) 수도권(과 충청권에)에 인구가 집중하는 이유는 일자리, 정주 여건(문화, 상업, 의료 등 도시의 어메니티), 교육임. 도시의 경쟁력과 어메니티에는 도시의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소도시보다 비수도권 거점 도시의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경기도는 과거의 준농림지역, 현재의 계획관리지역에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하여 심각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발생하는 난개발이 이루어졌음. 경기도 계획관리지역에 개별 입지 공장 설립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2) 교육이 비수도권 이주를 꺼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 따라서 비재정적 정책 수단 필요함.
 -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근을 포함한 광역의 수도권에서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또는 영호남에만 자사고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함(학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 단위 모집을 하되 정원 내 비율 제한).

- 3) 국토의 관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단위에서도 기성 시가지와 신 시가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인구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고민과 함께 미시적 관점에서도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 지역 단위에서는 절대 인구의 불균형 문제와 함께 소규모(읍면동) 단위에서의 인구 구조(고령화, 다문화, 가구 구성) 불균형이 심화됨.
 - 고령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도서 지역과 원도심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50%가 넘게 구성되기도 함.
 - 역세권 등에는 1~2인가구가 집중하는 경향이 발생함.
 - 신도시 지역은 학령 인구 비중이 높아 과밀 학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

- 4) 개별 지역에서 추구하는 절대 인구의 규모, 바람직한 인구의 공간적 분포, 공간별 인구 구조 특성 등에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전국 모든 지역을 동일한 인구 구조나 인구 밀도를 갖도록 할 수 없음.
 -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면 오히려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

- 5)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도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함.
 - 도시 재생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원도심(기성시가지)지역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거나 새로운 인구의 유입에 있음.
 -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방식으로는 인구 유출 억제나 인구 유입이 쉽지 않음.

토론문

박재영(광주전남연구원 원장)

□ 광주·전남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 광주·전남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
- 기존의 단기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보육, 고용, 복지, 산업 등을 융합한 종합적이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인구 변화에 적응하고,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기

[광주광역시 인구 현황]

- 광주광역시 인구는 지난 '14년 1,475,884명에서 '19년 1,456,468명(전국 2.81%)으로 5년간 2만명이 감소했으며, 30~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19세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50세 이상 인구는 증가 추세로 고령화가 진행 중
- 5개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433,533명(29.8%)로 가장 많고, 동구가 98,585명(6.8%)로 가장 적은 자치구로 자치구간 인구 격차 및 구조의 차이가 커짐
- 광주광역시 출생 인구는 2019년 8,400명으로 전국 2.8% 수준이며 정점이었던 2012년 14,392명과 비교하면 6천명 가량이 감소 42% 감소(합계 출산율 0.92, 전국 평균 수준)
- 이동 인구는 2019년 순이동 인구(전입 인구-전출 인구) 3,875명 감소했음. 전입과 전출은 주로 전라남도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며, 청년 전출 비중이 높음

[전라남도 인구 현황]

- 전라남도 인구는 지난 '14년 1,905,780명에서 '19년 1,868,745명(전국 3.6%)으로 5년간 3만 7천여명이 감소했으며, '13년부터 자연 감소 인원이 증가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출생아 수 감소와 2014년부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로 자연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초고령 사회(65세 인구 비율 20% 이상): '14년 20.14% → '17년 21.54% → '19년 22.61%

- 전남 인구 감소는 자연 감소와 함께 사회적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가속화
- 혁신도시 이전 효과가 반영된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사회적 인구 유출 발생
- 가장 큰 전출 계층은 청년층(20세~39세)이며 주요 전출지는 서울·광주·경기권으로, 취업·진학이 전출의 주요 사유로 유추됨
- 2019년 기준, 일부 연령층(40세~74세) 인구 순유입(4,533명) 발생

【 전남 사회증감 현황 ('10 ~ '19) 】

(단위: 명)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회증감	-10,061	-5,222	-5,054	-2,306	-596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증감	3,936	-3,205	-3,047	-8,030	-8,788

※ 청년층 전출자 비율 : '15년 84.0%, '16년 81.4%, '17년 74.9%.. '18년72.7%, '19년 72.0%

□ 광주·전남 인구 전망

- 광주전남의 장래 인구 전망을 보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출생 인구 감소, 급격한 초고령화의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통계청 발표 장래인구추계('19.6.))
- 총인구: 지속적으로 감소, 2017년 대비 광주는 2047년-15.52%, 전남은 -15.05%
 - ▶ 광주 : '17년 1,495,392명 → 지속 감소 → '47년 1,263,274명 예상
 - ▶ 전남 : '17년 1,896,424명 → 지속 감소 → '47년 1,610,976명 예상
 - ▶ 전국 : '28년 51,941,946명 → 지속 감소 → '47년 48,910,639명 예상
- 출생: 2023년부터 증가 2031년 10천명 유지, 2047년 7천명 예상
 - ▶ 광주 : '23년 9천명 → '31년 10천명 → 지속 감소 → '47년 7천명 예상
 - ▶ 전남 : '23년 9천명 → '31년 10천명 → 지속 감소 → '47년 7천명 예상
 - ▶ 전국 : '21년 290천명 → '29년 360천명 → 지속 감소 → '47년 263천명 예상

- 고령: 지속적 증가, 2047년 광주는 전체인구의 36.6%, 전남은 46.8%
 - ▶ 광주 : '17년 179,281명 → 지속 증가 → '47년 462,195명 예상(광주 인구의 36.6%)
 - ▶ 전남 : '17년 385,604명 → 지속 증가 → '47년 754,000명 예상(전남 인구의 46.8%)
 - ▶ 전국 : '17년 7,066,060명 → 지속 증가 → '47년 18,787,212명 예상(전국 인구의 38.4%)

□ 광주·전남 인구 정책과 대응 전략

- 광주·전남은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지속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급격한 고령화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 감소세의 완화와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에의 적응 전략으로 지역 주도 인구 정책 설계
- 전남의 경우,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으로 자연 증감을 개선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상대적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적 인구 감소세 개선을 위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유도 시책 추진 필요
 - 사회적 감소의 주 연령층인 유소년 인구·청년 인구(0세~39세)를 위한 교육·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인구 순 유입층인 장년층(40세~65세) 추가 유입 유도를 위한 귀농산어촌 유입 정책 적극 추진하고 있음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전라남도 인구 정책	젊은 세대 유입·정착 지원으로 건강한 인구 구조 형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구 유입·정착 기반 조성 귀농산어촌인 안착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 농어업인 유치 지원
	아이와 청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	신혼부부 지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실현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 청년 자립 및 정착 지원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확대·창출	혁신도 시 규모화 및 연관 산업 육성 지역 산업 기반 시설 확충 지역 특화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지원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참여 기회 확대 더불어 사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 구현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 광주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과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5개 자치구 인구격차 등을 고려하여 젊은 세대들의 정착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안전한 보육과 교육 환경 조성, 지자체 차원에서는 인구 구조 변동과 미래 환경 변화에 맞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광주 만들기를 추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광주 광역시 인구 정책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모든 임신·출산이 축복이 되는 환경 조성 차별 없는 보육과 돌봄 지원 확대 사각지대 없는 틈새 보육 확충 맘 편한 보육 환경 조성 여성·가족·아동 친화 환경 조성
	청년이 행복하게 일하는 활기찬 광주 만들기	청년 행복 출발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청소년 인구교육, 예비부부·부모 교육 광주형 청년 고용, 일자리 환경 지원 청년 취업·창업 지원 및 공간 지원
	지역 경제와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광주 만들기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업 활성화 미래 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 일자리 창출 고용 지원 인프라 혁신으로 미스매치 해소 맘 편한 워킹맘,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양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튼튼 중년과 건강 노년의 알찬 광주 만들기	신중년 제 도기반 및 평생교육 체계 조성 누구나 창업 도전 환경 조성 및 도약 지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지원 100세 시대, 시민건강 보장 강화 노후가 편한 의료, 주거, 문화 인프라 확충
	인구 구조 변화에 준비하는 광주 만들기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전략 계획 수립·시행 함께 키우고 돌보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 문화 확산 인공지능(AI) 활용한 복지 사각 지대 해소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포용 사회 조성 시민 중심의 알기 쉬운 정책 정보 제공

- ‘수도권 집중’을 막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광주전남 성장 지원 제도마련 절실
 - 광주전남의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절대적 요인이 작용
 -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 인구는 급감하는 불균형적 변화 속에서 지역 불균형과 쇠퇴는 불가피한 상황

- 전라남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
- 국가 차원의 인구 유출 제로섬 게임의 인식 전환과 국가 균형 발전 시각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
- 지자체 차원의 인구 정책이 갖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가 인구 정책과 지역 인구 정책의 괴리를 막고, 지역 주도의 인구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
- 성장 촉진 지역 지원 정책 등의 한계를 넘어선 정부 차원의 인구 구조 변화에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광주전남 인구 감소와 지역쇠퇴에 대응한 연구원의 역할과 향후 계획

- 지역 주도의 인구 정책 설계와 실천을 위한 인구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광주전남 연구원
-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인구 정책과 균형 발전이 갖고 있는 한계와 괴리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광주전남이 주도하여 설계해야 함
- 광주전남연구원은 종합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다양한 영역과 정보, 인적 교류, 네트워크 활동의 거점이자 플랫폼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광주전남 인구 통계를 생활 단위까지 수집·분석·공유하여, 광주·전남의 인구 변화를 비롯한 지역간 격차, 인구 구조의 차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생산
 -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전라남도과 22개 시군이 함께하는 인구 정책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인구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간 연대와 정보 공유, 정책 발굴, 상생 과제 도출 등 도모
 -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균형 발전, 지방 분권 등의 제안
 - 광주전남 인구 정책 평가와 컨설팅, 모니터링 실시
 - 광주전남 인구 정책 관련 연구 수행 및 정책 제안

- 광주전남 인구 정책지원연구센터 설치와 향후 계획
 -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3월, 인구 정책지원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정책 수요와 지역 인구 정책 발굴과 제안을 위한 인적 자원과 지자체 참여 네트워크를 구성 중
 -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라남도 인구 정책협업네트워크를 지난 10월 구성하여 21년부터 본격화 할 예정
 - 지역소멸위기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라남도와의 협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시도
 -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시혁신추진단이 제안한 연구 과제 ‘미래인구추계에 대응한 정책 설계 제안’ 수행 예정
 - 광주시 인구 정책 협업 회의에 참여하여 국내·외 인구 정책 연구 수행 예정
 - 지역 인구 정책 워킹 그룹을 발굴하여 공동 연구 등 수행 예정

토론문

홍재우(경남연구원 원장)

먼저 금일 포럼의 발제를 맡아주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인구 위기 현황과 극복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지역연구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나침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일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회미래연구원과 전국시도 연수원 협의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토론을 해주시는 시도 연수원 원장님께도 반가움을 표합니다.

오늘 포럼은 지역의 미래 이슈와 전략을 발굴하고 국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근 지역의 가장 큰 고민 거리인 인구 이슈에 대해 전국 시도의 목소리를 들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판 뉴딜이 지역뉴딜로 추진되며 지역의 이슈가 곧 국가 정책이 되는 최근 기조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50%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가 수도권 중심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2019년도 인구 이동을 보면 9,310명이 순유출 되었습니다. 연령별로 쪼개서 보면 10대, 20대 청년층의 순유출이 1만5천명을 넘습니다.

오늘 기조 발제문에 지방 대학의 위기도 언급되었지만, 최근 10년간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자퇴 학생 숫자가 2만3천명을 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전국 대학 입학자수 대비 경남 대학 입학자수 비율을 살펴보니 약 4% 정도에 그쳤습니다. 경남의 인구가 전국 대비 6.5%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입니다. 졸업자 비율은 더 낮습니다. 입학 이후 졸업까지 4~6년을 감안해서 비교하면 입학자 비율보다 졸업자 비율이 약 0.5% 더 낮습니다. 경남 내에 대학에 입학해도 졸업 전에 떠나는 청년이 많다는 뜻입니다.

발제 자료와 같이 인구 감소의 핵심은 일자리와 교육입니다. 즉 청년층을 붙잡을 수

있는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청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청년특별도와 교육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를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특별도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부문 63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교육특별도 조성을 위해서는 ‘경남도-기업-대학’을 연계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가 개별 대학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방 정부가 주도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학 교육체계 개편 및 인재 육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남권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 공간, 경제 공동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각 정책 모두 긴 호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광역 교통과 같이 실효성 높은 정책의 우선추진을 통한 파급 효과 극대화,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의 움직임 자체가 지역에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H에서 추진중인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아이토피아’는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귀촌과 관련되는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본 사업의 추진에 큰 탄력이 되고 있고요, 학부모의 일자리 및 생활 여건 등의 정착, 학생의 교육 수준 등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해결은 하나의 지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모인 전국 시도 연구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의 포럼이 이런 노력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김상협(제주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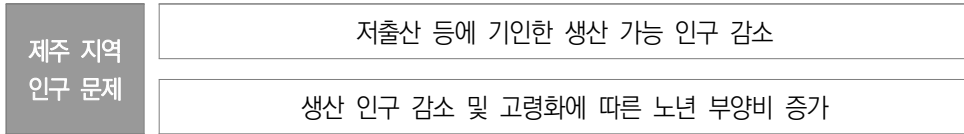
1. 제주 지역 인구 문제

- 제주 지역 인구는 사회적 증가, 즉 순이동 인구의 증가에 의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30대, 40대 순이동 인구 비중이 높아, 제주 지역 인구의 사회적 증가는 핵심 생산 연령 인구를 포함한 생산 연령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주 지역 총 부양비 등을 감소시키고 있음
-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전입 인구의 감소세 전환 및 전출 인구의 증가세 확대 영향으로 제주 지역 순이동 인구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제주 지역 인구 변화 특성을 반영한 인구 전망 분석 결과, 향후 20년간 제주 지역 총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유소년 인구와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됨
-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과 지역 소비시장 규모 축소가 우려되며, 현재의 생산 연령 인구는 향후 노년 인구로 전환되어 인구보너스 효과¹⁾가 오히려 효과²⁾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고령 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사회 보장비, 특히, 노년 부양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제주 지역의 인구 문제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정의될 수 있음
- 실제 인구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아니라 저출산에 의한 장래 생산 연

1) 전체 인구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가 함께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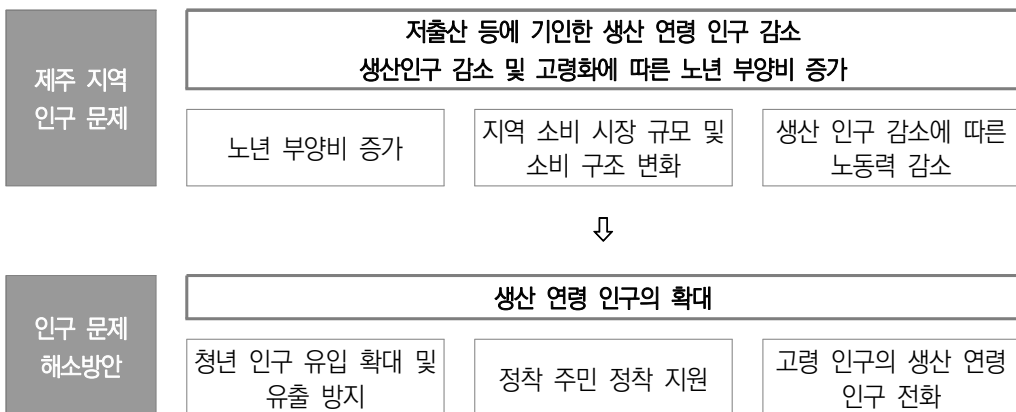
2) 가까운 미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

령 인구의 감소, 고령 인구 증가 및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 부양비 증가라고 할 수 있음



2. 인구 정책 방향

- 제주 지역의 인구 문제, 즉 저출산에 의한 장래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고령 인구 증가 및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노년 부양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 정책의 방향은 결국 사회적 이동 조절(인구 유치 및 유출 방지)을 통한 생산 연령 인구의 확대와 노년 부양비 완화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이동 조절을 통한 생산 연령 인구 확대는 구체적으로 ‘청년 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 ‘정착 주민 정착 지원(정착 주민 유출 방지)’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
 - 노년 부양비 완화는 생산 연령 인구 확대와 함께 고령 인구의 생산 연령 인구 전환 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제주 지역 인구 정책의 방향은 ‘청년 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방지’, ‘정착 주민 정착 지원’, ‘고령 인구의 생산 연령 인구 전환’을 통한 생산 연령 인구의 확대에 설정함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주 지역과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각 지역마다 생산 연령 인구의 확대를 위하여 '청년 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방지', '정착 주민 정착 지원', '고령 인구의 생산 연령 인구 전환'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 방향에 따라 전략 프로젝트 및 세부 인구 정책 사업을 마련하여 각 지역의 인구 정책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인 쇄 2020년 12월 27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2020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0858-16-8 (93300)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